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316-01

정책보고서 2018-63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이태진·김태완·정원오·주영수·민소영·신원우·송아영·정희선·이병재

【책임연구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원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18. 3. 9.)한 「2017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9
제2장 평가틀 및 평가지표	63
제1절 평가개요 및 평가과제	65
제2절 평가틀 및 평가지표	71
제3장 노숙인 등의 현황	77
제1절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	79
제2절 거리노숙인 현황	82
제3절 시설노숙인 현황	85
제4절 쪽방주민 현황	89
제4장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93
제1절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95
제2절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05
제5장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113
제1절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15
제2절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21
제3절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35
제4절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48
제5절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56

제6장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169
제1절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71
제2절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84
제3절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96
 제7장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207
제1절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09
제2절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16
제3절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24
 제8장 결론	 231
제1절 2017년 노숙인 지원정책 성과	233
제2절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79
 〈부록〉 평가지표	 281

표목차

〈요약표 1〉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44
〈요약표 2〉 과제별 종합점수	45
〈요약표 3〉 과제별 평가부분 점수	47
〈요약표 4〉 과제별 평가결과(2016~2017)	48
〈요약표 5〉 광역자치단체별 평가결과(2016~2017)	50
〈표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4대 분야 및 13개 과제	70
〈표 2-2〉 2016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평가지표	73
〈표 3-1〉 노숙인 등의 규모 추세(2006~2017)	79
〈표 3-2〉 노숙인 등의 규모(2017년 12월 기준)	80
〈표 3-3〉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등의 규모	81
〈표 3-4〉 성별 노숙인 등의 규모	82
〈표 3-5〉 성별 거리노숙인 현황	82
〈표 3-6〉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현황	83
〈표 3-7〉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성별 현황	84
〈표 3-8〉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생활시설 현황	85
〈표 3-9〉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	86
〈표 3-10〉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	87
〈표 3-11〉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	88
〈표 3-12〉 생활시설 노숙인 장애등록 현황	88
〈표 3-13〉 쪽방상담소별 쪽방주민 현황	89
〈표 3-14〉 지역별, 성별 쪽방주민 현황	90
〈표 3-15〉 연령대별 쪽방주민 현황	90
〈표 3-16〉 쪽방주민 주민등록 현황	91
〈표 3-17〉 쪽방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91
〈표 3-18〉 쪽방주민 의료지원 현황	92
〈표 3-19〉 쪽방주민 난방 현황	92
〈표 4-1〉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97
〈표 4-2〉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1
〈표 4-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2
〈표 4-4〉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3

〈표 4-5〉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3
〈표 4-6〉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4
〈표 4-7〉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07
〈표 4-8〉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09
〈표 4-9〉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0
〈표 4-10〉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1
〈표 4-11〉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1
〈표 4-12〉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11
〈표 5-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17
〈표 5-2〉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18
〈표 5-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19
〈표 5-4〉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20
〈표 5-5〉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20
〈표 5-6〉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24
〈표 5-7〉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26
〈표 5-8〉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30
〈표 5-9〉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32
〈표 5-10〉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33
〈표 5-11〉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34
〈표 5-12〉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38
〈표 5-13〉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42
〈표 5-14〉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44
〈표 5-15〉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45
〈표 5-16〉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46
〈표 5-17〉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47
〈표 5-18〉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50
〈표 5-19〉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51
〈표 5-20〉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52
〈표 5-21〉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53
〈표 5-22〉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54
〈표 5-23〉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55

〈표 5-24〉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59
〈표 5-25〉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63
〈표 5-26〉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65
〈표 5-27〉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66
〈표 5-28〉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67
〈표 5-29〉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68
〈표 6-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74
〈표 6-2〉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81
〈표 6-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81
〈표 6-4〉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82
〈표 6-5〉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83
〈표 6-6〉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87
〈표 6-7〉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92
〈표 6-8〉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94
〈표 6-9〉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95
〈표 6-10〉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95
〈표 6-1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98
〈표 6-12〉 모니터링 실시 여부: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2
〈표 6-13〉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3
〈표 6-14〉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4
〈표 6-15〉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5
〈표 6-16〉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6
〈표 7-1〉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현황	210
〈표 7-2〉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12
〈표 7-3〉 중앙부처 노숙인지원 협의체 구성	217
〈표 7-4〉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	218
〈표 7-5〉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20
〈표 7-6〉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25
〈표 7-7〉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26
〈표 7-8〉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분포 상태	227
〈표 7-9〉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28

〈표 7-10〉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29
〈표 7-11〉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29
〈표 8-1〉 연도별 노숙인 현황	234
〈표 8-2〉 시·도별 노숙인 현황	234
〈표 8-3〉 노숙인 시설 현황	235
〈표 8-4〉 공통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236
〈표 8-5〉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237
〈표 8-6〉 과제별 종합점수	238
〈표 8-7〉 과제별 평가부분 점수	240
〈표 8-8〉 과제별 평가결과(2016-2017)	241
〈표 8-9〉 광역자치단체별 평가결과(2016-2017)	243
〈표 8-10〉 사회복지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보수 현황(2018)	276

그림목차

[요약그림 1] 과제별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 비교(2016-2017)	46
[요약그림 2] 과제별 평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 비교(2016-2017)	47
[그림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의 목적, 목표, 분야별 추진 과제	67
[그림 8-1] 과제별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 비교(2016-2017)	239
[그림 8-2] 과제별 평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 비교(2016-2017)	240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2년 6월)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법 제2조).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따라서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숙인의 생활 특징으로 인해 정책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발생예방과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음(「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매 5년마다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제1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2016~2020)

2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하고, 노숙인 등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필요함.

○ 노숙인복지법 제8조의2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노숙인 복지법 제정과 함께 2016년 제1차 종합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종합계획 수립의 연차별 점검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16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작년에 첫 번째로 수행하였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지표는 계획, 집행, 성과, 환류의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4개의 평가부문과 1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음.

○ 법 제정 이후 2016년 추진실적에 대한 첫 번째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종합적 평가를 통해 노숙인 정책에 대한 가이드마련에 중점을 두었음.

□ 그러나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정책의 과제에 대한 계획을 매년 제출하여야 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함.

○ 종합계획에 상응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시행 계획 수립은 사업목적의 논리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세워야함.

○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이 복지체계 담당자 및 실무자의 개인적 역량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공식적이고 의식적인 개입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함.

○ 이에, 노숙인 지원정책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핵심적인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적 여건 및 특색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함.

□ 또한 본 평가연구를 통하여 노숙인 정책의 지역적 편차를 좁혀 모든 노숙인 등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노숙인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할 것임.

○ 현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무료현장진료소 등의 서비스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노숙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킴.

- 이에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이원화된 정책지원을 극복하고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법이 제정('12)되며, 다양한 형태의 노숙인 복지시설과 주거와 복지, 의료,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1차 년도에 대한 과제로 분절적이고 파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연속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평가도구를 토대로, 성과지표 달성도와 과정평가를 실행함으로써 노숙인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연차별 평가는 중기계획의 매년 시행결과 산출에 대한 1년 단위의 과정평가이며 추진 절차와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으로서의 평가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연차별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의 계획과 비교하여 정확성 및 충실성을 평가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방법

□ 노숙인 지원정책 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검토(사전교육 포함)

○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함. 또한 사전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전교육을 통해 추진 실적 제출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

□ 노숙인 지원정책 추진 실적 평가

○ 평가분야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와 성과 달성도, 소관기관의 관심도로 구분됨.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에는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수립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함.
- 시행과정의 적정성에는 추진과정의 충실성, 추진과정의 구체성, 사업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함.
- 시행결과와 성과 달성도에는 사업성과 이행정도,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목표달성률,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 평가함.
- 소관기관의 관심도에서는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에 대해 평가함.

○ 평가방법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 평가의 주안점은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에 대한 핵심적인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 지역적 여건 및 특색에 맞는 성과, 타당한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등 평가함.

□ 평가결과의 종합적 진단 및 정책 개선 방안 모색(컨설팅 포함)

○ 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통해 향후 노숙인 정책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차기 계획 수립 시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종합적 진단의 주안점은 종합계획 수립의 체계성, 부문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기반마련의 충실성,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달성도,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일관성, 추진상 애로사항 등 진단함.

□ 자문회의 및 평가단 구성

- 개발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 종합적 진단 평가, 개선방안 모색 및 핵심정책 전략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
- 평가자간 신뢰도 및 타당도, 교차검증 등 총괄을 위한 위탁 기관 내부와 외부 평가단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사업성과 평가관련 전문가, 노숙인 분야별 관련 연구자로 평가단(평가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지역 전문가로 구성
 - 관련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 실무자, 현장 실무자 등의 자문의견 수렴

□ 사전교육

- (교육대상)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 (교육내용) 추진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서면평가

- (평가대상)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 (평가내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30점), 시행과정의 적정성(30점), 시행 결과의 성과 달성도(30점), 소관기관의 관심도(10점) 등
- 과제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균 점수, 최대·최소·중위점수, 2016년 평가결과와의 차이를 공개
- 4대 분야의 과제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공개
-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평가 결과를 과제별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 공개
 - 100~76점 매우 우수, 75~51점 우수, 50~26점 보통, 25~0점 미흡(절대평가)

6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성과 평가관련 전문가, 노숙인 분야별 관련 연구자, 광역자치단체 지역 전문가, 민간기관 평가 실무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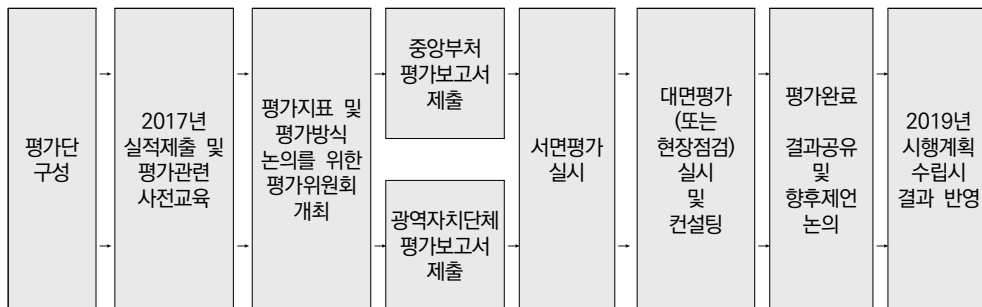
□ 대면평가(또는 현장점검)

- (평가대상)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 (평가내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 컨설팅

- (컨설팅대상) 평가결과 미흡한 점수를 받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 (컨설팅내용)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에 대한 핵심적인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 지역적 여건 및 특색에 맞는 성과, 타당한 성과지표 설정 등
- (컨설팅위원회 구성) 노숙인 분야별 관련 연구자, 광역자치단체 지역 전문가 등

□ 연차별 평가 과정



제2장 평가를 및 평가지표

1. 평가과제

4대 분야	과제명	소관기관
1.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1-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 및 공적 및 민간자원연계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강화	광역자치단체
	1-②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 제공 및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상담활동의 전문성 강화	광역자치단체
	- 거리노숙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
	2-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광역자치단체
	- 응급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운영	광역자치단체
	-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광역자치단체
	2-②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은 시설인력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체계 마련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인에 대한 보호강화	광역자치단체
	2-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국토교통부·광역자치단체
	-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강화	광역자치단체
	-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대	국토교통부·광역자치단체
	- 여성, 만성적 거리노숙인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우선지원	광역자치단체
	2-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3.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 노숙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의 향상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현장진료소 운영 확대	광역자치단체
	-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광역자치단체
	2-⑤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고용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
	- 근로능력이 약한 인원에 대한 '공공 일자리' 제공 활성화	광역자치단체
	3-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광역자치단체
	- 자립지원금 지원 등 마련	광역자치단체
	-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	광역자치단체
	3-②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광역자치단체
4. (인프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 관련서비스와 연계	광역자치단체
	-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광역자치단체
	3-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치단체
	-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	광역자치단체
	-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	광역자치단체
	4-①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4-②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 중앙-광역자치단체간 노숙인 지원협력을 위한 회의구조 마련	보건복지부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4-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2.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평가기준	지표성격	배점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종합계획 과제와의 일치성 여부	정성	5	30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 사업목적의 논리성, 구체성 여부	정성	10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사업내용의 연계성 여부	정성	5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여부 -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명확성, 합리성 여부	정성	10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충실성 여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성 여부	정성	10	30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 세부 추진내용의 구체성 여부 - 추진과정의 적정성 여부	정성	10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정성	10	
3.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 사업성과 결과에 대한 달성 여부 - 사업성과에 대한 수요자 충족 여부	정성	5	30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여부 - 측정방법 및 실적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혼합	10	
	③ 목표달성률	-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	정량	10	
	④ 예산집행 실적	-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정량	5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혼합	10	10
소계				100	

제3장 과제별 평가결과와 제언

1.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립

1-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1.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시스템 확립	-
1-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 및 공적 및 민간자원연계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강화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0	51.6	89.00	26.0	48.0	18.0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7.7	27.0	6.0	18.0	6.2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3.9	5.0	2.0	4.0	0.7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5.3	9.0	2.0	5.0	2.8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3	5.0	1.0	3.0	1.2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5.2	9.0	1.0	5.0	2.4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1.5	26.0	4.0	10.0	6.3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4.8	9.0	2.0	4.0	2.1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3.6	9.0	1.0	3.0	2.2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3.1	8.0	0.0	2.0	2.5
3.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30	17.8	28.0	10.0	18.0	4.9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2.5	5.0	0.0	2.0	1.3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4.8	9.0	2.0	5.0	2.0
③ 목표달성률	10	7.2	10.0	5.0	7.0	1.0
④ 예산집행 실적	5	3.3	5.0	0.0	4.0	1.5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4.7	9.0	1.0	4.0	2.2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4.7	9.0	1.0	4.0	2.2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내용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전 년도 사업내용과 동일함.
 -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수립은 예방정책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됨.
 - 계획수립의 적합성은 빅데이터 연계정보가 추가(재난피해자, 임대료채납자)되었고,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발견가능성 및 발굴 정확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의 적합성은 전년도보다 높은 점수(7점 → 9점)를 부여 받았음.
- 두 번째 평가부문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세 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세 지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각각 8점, 8점, 9점을 획득함.
- 세 번째 평가부문인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영역은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③ 목표달성률, ④ 예산집행실적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음. 이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의 평가점수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성과 이행정도는 ‘우수’로 평가 되었지만, 성과지표 목표의 적정성과 목표달성률은 ‘보통’으로,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은 ‘미흡’으로 평가되었음.
- 2016년 평가 등급과 비교하면 2017년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목표달성률, 그리고 소관기관의 관심도에서 평가점수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남.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광역자치단체의 최고 점수는 89점, 최저 점수는 26점으로 나타났음.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은 51.6점으로서 전년도 평가 점수와 유사하였음.
 - 평균점수는 유사하였지만, 개별 자치단체들의 점수 등락이 있었고,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점수가 상승한 반면, 7개 광역자치단체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18.0으로서 전년도의 22.0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

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점수 편차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 2년 연속 매우우수 등급을 유지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이었고, 2016년 우수 등급에서 2017년 매우 우수 등급으로 상승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음.

○ 전년도(2016년) 실적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의 혼선과 자료정리의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성과지표 설정과 목표달성률 산정 방식에 관한 것이었음. 2017년에는 사전에 공동적인 성과지표를 제공하여 혼선을 해소하였음.

- 거리노숙인 수 성과지표는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하였고(3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았음), 긴급복지지원 성과지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음.

○ 전년도 성과평가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 유입예방을 위한 예산집행실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실적이 없었는데, 2017년의 경우 2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정책 제언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노숙유입예방사업은 포괄성이 있었지만 다양성이 부족하였음.

-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홍보하고 활용하는 정책 등 다양한 노숙예방 사업을 촉진하는 정책 필요.

○ 또한 보건복지부는 추진과정과 추진체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으나, 예산집행실적이 없었고,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제시가 미흡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음. 또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적었음. 전년도 성과평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부사업별 또는 지원대상별로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노숙유입예방 사업들이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사각지대 보완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는 앞에서 예를

든 서울, 대구, 경기 등의 프로그램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1-②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 과제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1.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시스템 확립	-
1-②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 제공 및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상담활동의 전문성 강화	광역자치단체
- 거리노숙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00	63.6	81.0	44.0	65.0	11.8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8.2	23.0	15.0	17.0	2.7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5.0	5.0	5.0	5.0	0.0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4.2	6.0	3.0	4.0	1.0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4	4.0	3.0	3.0	0.5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5.6	8.0	4.0	5.0	1.4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5.8	22.0	7.0	17.0	4.7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5.5	8.0	4.0	5.0	1.7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5.4	6.0	3.0	6.0	1.0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5.0	8.0	0.0	6.0	2.8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23.5	27.0	18.0	25.0	3.3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4	4.0	2.0	4.0	0.8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7.1	8.0	6.0	7.0	0.7
③ 목표달성률	10	10.0	10.0	10.0	10.0	0.0
④ 예산집행 실적	5	2.9	5.0	0.0	5.0	2.5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6.1	9.0	3.0	6.0	2.0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6.1	9.0	3.0	6.0	2.0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현장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
 - 2016년에 비해 2017년 평가결과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시행계획의 적절성, 시행계획의 성과 달성도 등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2016년과 비교 시 변화가 많이 없었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었으면 함
- 노숙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보급한 점은 의미가 있음.
 - 하지만 매뉴얼 작성과 더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이 향후 함께 병행되었으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 결과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 간 편차가 11.8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잘 받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컨설팅 등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평가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각 평가 항목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부문평가는 다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항목은 매우 저조
 -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나게 평가됨. 10점 만점의 평가점수 중에서 5점대를 받고 있음.
 - 성과달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목표 달성률은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 평가에서 인천과 광주는 2016년 대비 평가가 크게 악화된 반면에 대구와 부산은 전년 대비 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대비 되는 특성을 지님.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체 평균은 물론 최고 및 최저 점수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 동 항목에 대한 전년도 평가점수는 평균67.8점이었지만, 올해 평가의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경제위기 이후 지난 20여년간 대표적 취약계층인 노숙인 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 하에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여러 부문에서 노숙인 보호의 취약성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 등이 지역과 노숙인 특성에 부합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2-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 과제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1.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2-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광역시자치단체
- 응급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운영	광역시자치단체
-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광역시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광역시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00	60.3	87.0	42.0	58.0	13.0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7.9	25.0	13.0	16.0	3.9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5.0	5.0	5.0	5.0	0.0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4.8	8.0	0.0	4.0	2.0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2.9	4.0	2.0	3.0	0.5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5.2	9.0	3.0	5.0	1.8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5.4	25.0	9.0	14.0	5.2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5.5	9.0	3.0	5.0	1.9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5.4	8.0	3.0	5.0	1.5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4.5	8.0	0.0	4.0	2.5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20.9	28.0	16.0	21.0	3.3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1	4.0	2.0	3.0	0.7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6.2	9.0	4.0	6.0	1.5
③ 목표달성률	10	9.9	10.0	9.0	10.0	0.3
④ 예산집행 실적	5	1.8	5.0	0.0	0.0	2.5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6.2	9.0	3.0	6.0	1.9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6.2	9.0	3.0	6.0	1.9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평가대상 아님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에 관한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전년대비 평가에서는 전체 평균점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세부적인 평가는 네 개의 평가 틀 속에서 평가가 진행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에서는 만점대비 50%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일부 항목인 계획수립의 적합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부문은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음

-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거의 중간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사업관리의 적정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음. 이와 같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주로 모니터링 체계가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는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음. 특히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목표 달성률은 무난히 넘은 것으로 평가됨.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평가결과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임. 평균점수의 하락과 더불어 최고, 최저 및 중위 점수도 모두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에 대한 전년도 평가점수는 평균 66.8점이었지만, 이번 평가의 평균점수는 60.3점으로 6.5점이 줄어듦.
- 노숙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개별개별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취약시기 노숙인 등의 보호가 노숙인 등의 생사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평가 결과가 낮아진 점은 노숙인 보호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 제고가 필요함.

2-②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 과제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2-②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은 시설인력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체계 마련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인에 대한 보호강화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00	54.1	94.0	24.0	50.0	17.8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8.4	28.0	8.0	18.0	5.8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3.4	5.0	2.0	3.0	0.8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6.5	10.0	2.0	7.0	2.6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4.0	5.0	2.0	4.0	1.1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4.6	10.0	0.0	5.0	2.7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9.6	28.0	0.0	7.0	7.4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3.3	10.0	0.0	3.0	3.0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2.1	8.0	0.0	1.0	2.8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4.3	10.0	0.0	3.0	3.6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20.9	30.0	12.0	21.0	5.4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2	5.0	1.0	3.0	1.3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6.3	10.0	3.0	6.0	2.1
③ 목표달성률	10	8.0	10.0	5.0	8.0	1.3
④ 예산집행 실적	5	3.4	5.0	0.0	4.0	2.0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5.1	10.0	0.0	7.0	4.2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5.1	10.0	0.0	7.0	4.2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사업 평가 결과는 총 100점 만점에 24점을 평가받았으며 시행과정 측면에 있어 노력이 대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평가됨
- 중앙부처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사업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중앙부처의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숙인 시설 체계에 대한 전문화에 있어 관심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평가받았으나 2017년도에 이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등급을 평가받았으며 지속적으로 노숙인 시설 체계 전문화에 있어 책임과 적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됨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전체 광역자치단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중 54.1점이었으며 최대 94.0점, 최소 24.0점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편차가 확인되었으며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이 시행과정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들의 특성은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한 합의 및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평가됨
-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를 위한 관심도와 노력 정도는 평균 5.1점으로 전체적으로 관심도 자체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체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강화 노력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예산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4개의 광역자치단체는 비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금액이 매우 적거나 내역이 모호하여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적절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2016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변화가 발견되었는데 2016년도 등급에 비해 하락한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향상된 평가결과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을 보다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중앙부처의 본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나 전문성이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노숙인 종합계획을 적절한 사업목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사업 내용 역시 적절하고 풍부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중앙부처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사업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부처에 비해 비교적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역자치단체 간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과정을 마련하는 데 비교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2-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 과제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2-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국토교통·광역자치단체
-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강화	광역자치단체
-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대	국토교통부·광역자치단체
- 여성, 만성적 거리노숙인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우선지원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00	48.7	96.0	25.0	45.0	22.0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7.4	30.0	9.0	16.0	6.5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3.4	5.0	2.0	4.0	0.9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5.3	10.0	0.0	5.0	2.7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6	5.0	0.0	4.0	1.5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5.1	10.0	2.0	5.0	2.6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9.8	30.0	0.0	7.0	9.0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3.7	10.0	0.0	3.0	3.0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2.8	10.0	0.0	2.0	2.8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3.3	10.0	0.0	3.0	3.6
3.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30	17.4	30.0	11.0	17.0	6.2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2	5.0	0.0	3.0	1.4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4.5	10.0	2.0	4.0	2.5
③ 목표달성률	10	6.9	10.0	2.0	7.0	2.1
④ 예산집행 실적	5	2.8	4.0	0.0	4.0	1.9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4.1	10.0	0.0	4.0	3.4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4.1	10.0	0.0	4.0	3.4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2017년도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총 100점 중 35점으로 다소 저조한 평가 결과를 보여줌
-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 노숙인의 주거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앙부처로서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리더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 체계에서의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관련 민간 단체 등의 역할 분담과 관계에 대한 전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의 경우 2016년에 미흡 등급에서 올 해 2017년 보통 등급으로 평가 결과 등급은 상향되었으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향후 등급 향상이 가능함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 지원사업평가 결과 총 100점 만점 중 평균 48.7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96점, 최소값은 25점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격차가 확인됨
-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목적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보여주었으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본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구체적인 사업목적과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주거지원을 위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자원파악이나 제도 이해가 부족하며 광역자치단체 자체적인 주거자원발굴노력도 매우 미흡하게 나타남
- 2016년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서울 및 대전은 지속적으로 매우 우수등급을 평가받았으며 2017년 평가 결과 미흡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가 2016년도와 비교하여 매우 달라진 결과를 보여줌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국토교통부의 경우 중앙부처로서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을 계획할 책임이 있으나 현재 주거공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후 관리 및 자립 지원과 같은 서비스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 공급에 있어 광역자치단체나 민간단체와의 역할 분담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에 대한 제시와 고민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역시 사업 내용에 있어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주거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주거공급이 아닌 시설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하지 않은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등 향후 개선이 요구되며 사업의 목적에 따른 시행과정의 체계화 노력이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영역임
- 종합적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단순 주거공급이 아닌 사후 관리와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 과제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2-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의 향상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현장진료소 운영 확대	광역자치단체
-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00	42.8	80.0	15.0	36.0	21.2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2.6	29.0	5.0	10.0	6.5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0.9	5.0	0.0	0.0	2.0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3.4	10.0	0.0	3.0	2.6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2	5.0	2.0	2.0	1.4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5.2	10.0	2.0	3.0	3.0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0.1	23.0	0.0	9.0	6.6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4.2	9.0	0.0	3.0	2.5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3.4	7.0	0.0	3.0	1.9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2.5	9.0	0.0	3.0	2.9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16.4	28.0	0.0	15.0	8.8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1	5.0	0.0	3.0	1.6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4.8	9.0	0.0	5.0	3.2
③ 목표달성률	10	6.4	9.0	0.0	7.0	3.2
④ 예산집행 실적	5	2.2	5.0	0.0	4.0	2.1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3.6	9.0	0.0	4.0	2.4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3.6	9.0	0.0	4.0	2.4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영역의 경우는, 2017년도에는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수립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은 비교적 잘 확인되었으나 구체성 측면에서는 아직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시행과정의 적정성 영역에서는, 2017년도에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하였음. 그러나 구체성은 역시 부족하였고, 모니터링도 이루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에서는, 2017년도에는 주요사업성과도 제시되었고, 성과지표가 포괄적이고 적정하였으며, 실제로 달성한 목표달성률도 충분히 높았

으나, 다만 소요예산이 없이 사업이 수행되었다는 부분이 사업성과의 신뢰성을 다소 떨어뜨렸다고 생각됨.

- 소관기관의 관심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 등이 잘 보이지 않았음.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는 42.8점(100점 만점)으로서 다소 미흡한 수준임.
 - 물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80점으로서 우수한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중위수가 36.0점으로서 주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 광역자치단체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2016년도에는 ‘매우우수(100점~76점)’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인천과 대전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서울과 대구로 바뀌었음.
-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에서는, 공통지표인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연계관리’와 ‘위기관리(알콜중독자 포함) 개입’에 대하여 그 달성정도를 평가한 결과, ‘100% 미만’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수가 각각 6개(35.3%), 7개(41.2%)로 파악되었음.
-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도에는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한 지자체가 7곳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3곳이 추가되어 10곳으로 늘었음. 그러나 여전히 7곳의 광역자치단체들은 ‘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임.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중앙부처: 앞으로는 보다 더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그에 따른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 목표수준을 매우 낮게 잡음으로써 달성률이 쉽게 100%를 넘는

경우들이 많았음에도 전년도 결과(17개 중에서 2곳만 100% 미만)보다도 더 낮은 성과를 보인 부분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확인되며, 또한 예산 없이 사업을 했다면 이는 해당지역의 민간시설과 기관들이 애써 수행한 그들의 자체사업들을 마치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한 것처럼 위장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성과지표: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율지표들의 '측정산식(측정방법)'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인데, 이는 그들의 주무 부서를 대상으로 보건사업기획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여전히 '산출(output)지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능한 한 '결과(outcome)지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⑤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 과제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2-⑤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고용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
- 근로능력이 약한 인원에 대한 '공공 일자리' 제공 활성화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00	49.3	89.0	20.0	44.0	18.6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7.5	28.5	9.0	17.0	5.5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3.9	5.0	2.0	4.0	0.8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5.5	10.0	0.0	5.0	3.1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5	5.0	.0	3.0	1.3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4.6	9.0	1.0	5.0	2.1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8.9	25.0	0.0	6.0	7.4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3.1	10.0	0.0	3.0	2.9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2.3	7.0	0.0	2.0	2.3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3.5	9.0	0.0	3.0	3.4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18.1	26.0	9.0	17.0	5.3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2	5.0	0.0	3.0	1.7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5.2	8.0	2.0	5.0	1.6
③ 목표달성률	10	7.4	10.0	2.0	7.0	1.7
④ 예산집행 실적	5	2.4	5.0	0.0	4.0	2.1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4.8	10.0	0.0	5.0	3.0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4.8	10.0	0.0	5.0	3.0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2017년 고용노동부의 경우 2016년 보통등급에서 향상된 우수 등급의 사업운영을 보여주었으며 비교적 효과적으로 노숙인 고용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의 내용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노숙인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의 확대와 고용노동부 역할의 강화가 요구됨.
- 또한 노숙인의 고용은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분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의 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

극적 전달체계 마련이 요구됨.

- 추진상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노숙인 고용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확대 계획을 추진하여 이를 향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점수 편차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노숙인 고용지원사업의 체계적·효과적 운영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49.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8.6점임.
-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 노용지원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 4.8점으로 나타났으며 지표설정에는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노숙인 고용지원의 사업을 비예산으로 운영하여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7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견됨.
- 2016년 결과와 비교하여 대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우수등급을 부여받았으며 2016년 보통 등급이었던 대구 및 제주는 2017년 우수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2016년 결과와 2017년 결과 간에 다소 차이가 확인됨.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본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 상황의 유지가 아닌 사업의 확대와 강화의 방향으로 전체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의 내용 구성에 비해 사업의 체계와 운영과정, 모니터링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고용확대나 고용자원발굴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3. (사회복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3-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 과제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3. (사회복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
3-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광역자치단체
- 자립지원금 지원 등 마련	광역자치단체
-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00	47.8	81.0	0.0	49.0	19.9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6.4	27.0	0.0	16.0	6.0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4.4	5.0	0.0	5.0	1.5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4.2	10.0	0.0	3.0	2.5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3	5.0	0.0	3.0	1.4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4.6	9.0	0.0	4.0	2.7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0.4	23.0	0.0	10.0	6.2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5.1	9.0	0.0	5.0	2.7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3.4	6.0	0.0	4.0	1.8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1.9	8.0	0.0	1.0	2.5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16.0	26.0	0.0	15.0	7.0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2.9	5.0	0.0	3.0	1.3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5.1	9.0	0.0	5.0	2.6
③ 목표달성률	10	6.9	10.0	0.0	7.0	3.0
④ 예산집행 실적	5	1.0	4.0	0.0	0.0	1.7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5.0	9.0	0.0	5.0	2.3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5.0	9.0	0.0	5.0	2.3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평가대상 아님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00점 만점 기준에서 중간값(50점)에 미치지 못한 47.8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음.
 - 최대는 81.0점이었고 중위값은 49.0점, 표준편차는 19.9점이었음.
- 평가부분에서 30점 배점을 받는 영역(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연차별 시행 계획의 적정성이었음(16.4점).
 - 반면 시행 과정의 적정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10.4점).
 - 그리고 소관기관의 관심도 즉, 본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서 5점을 받아, 중간값에 해당하였음.
- 공통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목표달성을 제시한 수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통 지표인 '노숙인 신용회복, 저축관리 등 지원 인원'에 대하여 목표달성정도를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0곳이었음.
 - 이 중 9개 광역자치단체가 100%이상의 목표달성 정도를 보여주었음. 두 번째 공통지표인 '노숙인 사례관리 인원'에 대하여 목표달성정도를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1곳이었음. 이 중 9개 광역자치단체가 100%이상의 목표달성 정도를 보여주었음.
- 지역사회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평가에 대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2개년 모두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보통 등급에 포함되었음.
 - 등급별로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구간은 매우 우수 등급이었음.
 - 매우 우수 등급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가 2016년에는 없었으나 2017년에는 2개 광역자치단체(서울과 대전)가 포함되었음.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의 취지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나타남.
 - 예를 들어, 저축액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 금액 늘리기를 강조하거나, 자활 시설 내 거주 노숙인 위주 사업에만 초점을 두기도 하였음.
- 그럼에도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제안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나타남.
 - 보다 고무적으로는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음.
-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를 위해 ‘노숙인 사례관리 인원’ 지표의 경우, 사례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숙인을 위한 사례관리 인지, 혹은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노숙인을 위한 사례관리 인지 좀 더 명확히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3-②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 과제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3.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
3-②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광역자치단체
- 관련서비스와 연계	광역자치단체
-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00	48.4	77.0	30.0	44.0	15.1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6.3	24.0	8.0	16.0	4.7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4.5	5.0	2.0	5.0	1.2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3.4	7.0	3.0	3.0	1.1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6	5.0	2.0	4.0	1.1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4.8	9.0	1.0	4.0	2.6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0.2	21.0	0.0	9.0	5.5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4.8	9.0	0.0	4.0	2.6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3.4	7.0	0.0	3.0	2.1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2.1	8.0	0.0	1.0	2.5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16.6	27.0	5.0	17.0	6.3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2.4	5.0	0.0	2.0	1.1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5.6	9.0	3.0	6.0	2.2
③ 목표달성률	10	7.1	10.0	0.0	8.0	3.0
④ 예산집행 실적	5	1.4	4.0	0.0	0.0	2.0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5.4	8.0	1.0	6.0	1.7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5.4	8.0	1.0	6.0	1.7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평가대상 아님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기준에서 중간값(50점)에 미치지 못한 48.5의 평균 점수를 보였음.

- 최대는 77.0점이었고 중위값은 44.0점, 표준편차는 15.1점이었음.

○ 평가부문에서 30점 배점을 받는 영역(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였음(16.6점).

- 반면 시행 과정의 적정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10.3점). 그리고 소관 기관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서 5.4점을 받아, 중간값보다 약간 높은 점수에 그쳤음.

○ 공통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목표달성을 제시한 수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통 지표인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수'에 대하여 목표달성정도를 제시한 광역자치 단체는 모두 12곳이었음.

- 12개 광역자치단체가 100%이상의 목표달성 정도를 보여주었으며, 이 중 1 곳은 200%이상의 목표 달성율을 제시하였음.

○ 두 번째 공통지표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건수'에 대하여 목표달성정도를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2곳이었음.

- 이 중 1개를 제외한 11개 광역자치단체가 100%이상의 목표달성 정도를 보여주었음.

○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 평가에 대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2개년 모두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보통 등급에 포함되었음.

- 등급별로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구간은 매우 우수 등급이었음. 매우 우수 등급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가 2016년에는 없었으나 2017년에는 2개 광역자치단체(대구과 대전)가 포함되었음.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

- 예를 들어,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은 하위세부 사업이 '관련서비스와 연계,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로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둘 중의 하나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세부사업내용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음.
- 특히,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음.

- 즉,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세부 사업들에 노숙인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개입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남.

○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남. 단순히 노숙인의 취업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외에도 노숙인의 유형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해보임.

- 특히, 일상생활기술,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 기술, 건강관리기술, 경제적 생활유지 기술, 구직과 취업 유지 기술 등을 실질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3-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3. (사회복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
3-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시치단체
-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	광역시치단체
-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	광역시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00	62.0	84.0	42.0	58.0	13.7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20.9	27.0	15.0	21.0	4.1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4.0	5.0	3.0	4.0	0.4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6.9	8.0	3.0	7.0	1.1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6	5.0	2.0	4.0	1.4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6.4	9.0	3.0	6.0	2.4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4.8	27.0	3.0	14.0	7.1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6.5	10.0	3.0	7.0	2.6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4.1	9.0	0.0	4.0	2.2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4.2	9.0	0.0	4.0	3.4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21.2	26.0	15.0	22.0	3.5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2.3	5.0	0.0	2.0	1.6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7.2	9.0	5.0	7.0	1.2
③ 목표달성률	10	8.4	9.0	6.0	9.0	1.0
④ 예산집행 실적	5	3.4	4.0	0.0	4.0	1.4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6.4	9.0	5.0	6.0	1.5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6.4	9.0	5.0	6.0	1.5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평가대상 아님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평균 62.0점, 최고점수 84.0점, 최저 점수 42.0점, 중위값 58.0점, 표준편차 13.7점으로 나타나 전년도 평균점수 52.2점과 비교해 볼 때 10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 평가영역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 소관기관의 관심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순서, 소관기관의 관심도 순으로 나타남.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한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우 우수(100~76점), 우수(75~51점), 보통(50~26점), 미흡(25~0점)으로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면, 매우 우수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대전, 경기 등 3개이며, 그 중 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우수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개, 보통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4개이며, 미흡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0개임.
-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매우 우수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개, 우수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상승된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전반적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 수행에 보통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좀더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는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사업계획과 사업수행, 성과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거리노숙인 규모와 시설 특성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거리노숙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사업대상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목적과 추진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성과 중 주요사업성과 평가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요사업

성과가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 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또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이 향상되고 있지만 각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예산 집행 실적을 프로그램별로 좀더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시행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4. (인프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4-①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4.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
4-①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평가대상 아님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의 평가 점수는 55점임. 소관기관의 관심도가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17개 시도 노숙인, 쪽방주민 행정조사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사업내용의 적합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 사업시행절차로 협조공문(보건복지부) → 결과보고(지자체) → 취합·분석(보건복지부)로 제시되어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있으며, 사업성과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추진과정의 충실성 지표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됨.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측면에서 성과지표인 2017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 실시는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로 대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적정하고 실적산출 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목표달성률의 경우 실태조사 완료로 100%로 평가되어 우수 평가를 받음.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선택 과제로 수행한 세종과 강원的评价 점수는 모두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전년도에는 대전과 충북 등 2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바 있음.
 - 세종의 경우 시행계획의 적절성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세종의 특징은 노숙인 현장보호활동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것이며 2017년 총 7회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강원的评价 소관기관의 관심도가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강원评价 특징은 혹서기와 혹한기 등 취약시기에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조사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통해 추진된 점임.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에서 추진한 노숙인 현황 및 실태조사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를 수행하는 소관기관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시행은 선택사항임. 2017년도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세종, 강원 등 2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됨.
- 보건복지부의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목적의 제시,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 제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사업성과 내용 제시 및 예산집행 진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선택 과제로 수행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의 평가 점수는 모두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각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노숙인현장보호활동(세종) 혹은 취약시기의 거리노숙인 보호 차원(강원)에서 진행되어 노숙인 현황 및 실태조사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추진하는 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모델이 되어 이를 반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게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초기 조사 시 과학적 조사 수행을 위하여 중앙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 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국단위의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와의 연계성을 통해 조사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사 결과를 공유 및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초기 조사 시 과학적인 조사 수행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연구 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4-②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4.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
4-② 협의체에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 중앙-광역자치단체간 노숙인 지원협력을 위한 회의구조 마련	보건복지부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 평가대상 아님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에 대한 평가 점수는 3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전년도와 비교해서 9점이 향상된 결과임.
- 노숙인 복지지원을 위한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민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워크숍 및 회의 개최의 사업내용에 대한 계획은 사업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 사업 주체 및 시행절차의 합리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또한, 모니터링,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분석과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결과와 성과 달성도 부문에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지자체간 회의구조 마련,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선택 사항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를 제출한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과 강원도의 2017년도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

우 우수 수준으로 평가됨. 전년도의 경우 대전 1곳에서만 수행한 바 있음.

- 대전의 경우 노숙인시설 등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 회의와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의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음.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노숙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노숙인 유입 예방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업목적이 강원도 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의 내용이 제시되어 종합계획 과제와 사업목적 간 논리적 인과관계가 제시되어 있음.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를 수행하는 소관기간은 중앙 부처인 보건복지부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시행은 선택사항이며, 2017년도에 과제 추진 결과를 제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 강원 등 2개임.
- 먼저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의 평가 점수는 보통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9점이 향상되었지만 전반적인 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특히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지자체간 회의구조 마련,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선택 사항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를 제출한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과 강원도의 2017년도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수준으로 평가됨. 각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구성(대전) 혹은 노숙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강원) 등을 운영하여 민관협력의 구조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간, 중앙-광역자치단체간, 공공-민간의 소통을 위한 회의개최 등 좀 더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018년도의 보건복지부 성과지표는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내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협의체, 중앙-광역-광역자치단체간 협력 회의구조,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 상하반기의 2회 회의 개최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성과지표로서 광역자치단체 및 민간으로부터 수립된 정책의견 수와 정책에 반영된 수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한 정책 모니터링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4.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
4-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100	42.3	72.0	14.0	40.0	18.3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5.8	22.0	6.0	16.0	4.8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3.5	4.0	1.0	4.0	1.1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4.7	8.0	2.0	3.0	2.1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2.9	4.0	1.0	3.0	0.8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4.6	6.0	2.0	6.0	1.8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0.1	19.0	2.0	9.0	6.0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4.4	7.0	2.0	3.0	2.3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3.4	7.0	0.0	3.0	2.0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2.3	6.0	0.0	2.0	2.4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13.0	22.0	0.0	14.0	7.5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2.1	4.0	0.0	2.0	1.5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2.6	7.0	0.0	2.0	2.3
③ 목표달성률	10	5.4	7.0	0.0	7.0	3.1
④ 예산집행 실적	5	2.9	4.0	0.0	3.0	1.8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4.8	7.0	3.0	5.0	1.6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4.8	7.0	3.0	5.0	1.6

가. 중앙부처 평가결과

○ 2016년 평가 등급과 비교하면 2017년은 매우 많은 평가부문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실적이 없었던 반면 2017년은 실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임
-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은 미흡에서 우수등급으로 변화되었고, 추진과정의 충실성, 사업성과 이행정도, 목표달성률, 예산집행실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평가등급이 향상되었음.

나.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본 과제외의 경우 전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가 아닌 영역이었기 때문에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수행의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라는 분야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 평가 등급 분포를 보더라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없고, 우수 등급에 6개, 보통 등급에 7개, 그리고 미흡 등급에 4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었음.
- 이 분야의 성과지표로서 노숙인복지법 시행지침 개정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음. 반면 자체적으로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었으나 그런 사례가 드물었음.
 - 대표적인 예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자체 성과지표를 제시한 곳은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노숙인복지법의 시행지침에 다른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를 위한 예산집행실적이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8곳이었고, 과반수 이상은 비예산이거나 예산집행실적이 없었던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음.

다. 종합평가 및 제언

-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는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임.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예산부처를 설득시켜야 한다는 난제가 있지만, 시설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처우'라는 점에서 노숙인 복지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단기적으로는 생활복지사(혹은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을 정신요양시설 기준(25명당 1명)에 맞추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담요원 등 다른 전문가의 배

치기준을 더 강화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처우 수준이 여타의 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실정임. 중앙정부차원에서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총괄평가 및 결론

1. 공통 성과지표 평가

□ 공통 성과지표와 실적

- 노숙인 등의 복지정책의 목적은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서는 공통 성과지표 4가지를 설정함.
 - 공통 성과지표는 거리노숙인 수, 시설노숙인 수,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비율, 주거지원건 수이며 연도별 목표를 제시하였음.
- 2016년 실적대비 2017년 실적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면,
 - 거리노숙인 수의 경우 2016년 969명에서 2017년 862명으로 전년대비 11.0%가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설노숙인은 2016년 8,878명에서 2017년 8,972명으로 1.1%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비율은 2017년 1,317명으로 전년도 거리노숙인 수 969명을 상회하는 수치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주거지원건수 또한 전년대비 30.2%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함.

44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요약표 1〉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성과지표(단위)	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전년대비)	2017년 목표	2017년 실적	목표달성 여부 (전년대비)
거리노숙인 수(명)	1,125	969 (13.9%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862	달성 (11.0% 감소)
시설노숙인 수(명)	9,731	8,878 (8.8%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8,972	미달성 (1.1% 증가)
현장보호활동 (아웃리치) 관리 비율(%)	1,057	1,101 (전년도 거리노숙인 수의 97.9%)	전년도 거리노숙인 수의 85%	1,317	달성 (전년도 거리노숙인 수 초과)
주거지원건수(건)	653	460 (29.6% 감소)	전년대비 2% 증가	599	달성 (30.2% 증가)

주: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 비율과 주거지원건수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016년, 2017년 각각 제출한 실적의 평균 증가율로 전체 실적을 계산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2. 총괄평가

□ 과제별 종합평가

○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총 13개 과제의 평균 점수는 51.9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6.6점 상승

- 과제별로 보면 1-②, 2-①, 3-③ 과제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③, 3-① 과제는 전년대비 10점 이상 점수가 상승
- 광역자치단체는 현장보호활동과 거리노숙인 보호, 노숙인 교육훈련 사업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꾸준히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 다만 현장보호활동과 거리노숙인 보호가 높은 점수를 받기는 했으나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중앙정부는 1-①, 2-⑤, 과제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④, 2-⑤, 4-③ 과제는 전년대비 점수가 크게 상승함.

- 중앙정부는 노숙유입 예방과 고용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

년대비 점수와도 비교해볼 때 고용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노숙인 현황 조사와 실태조사는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함. 광역자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도 노숙인 현황 파악에 대해 어려운 점을 많이 피력한 것으로 보아, 향후 현황 조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의 개발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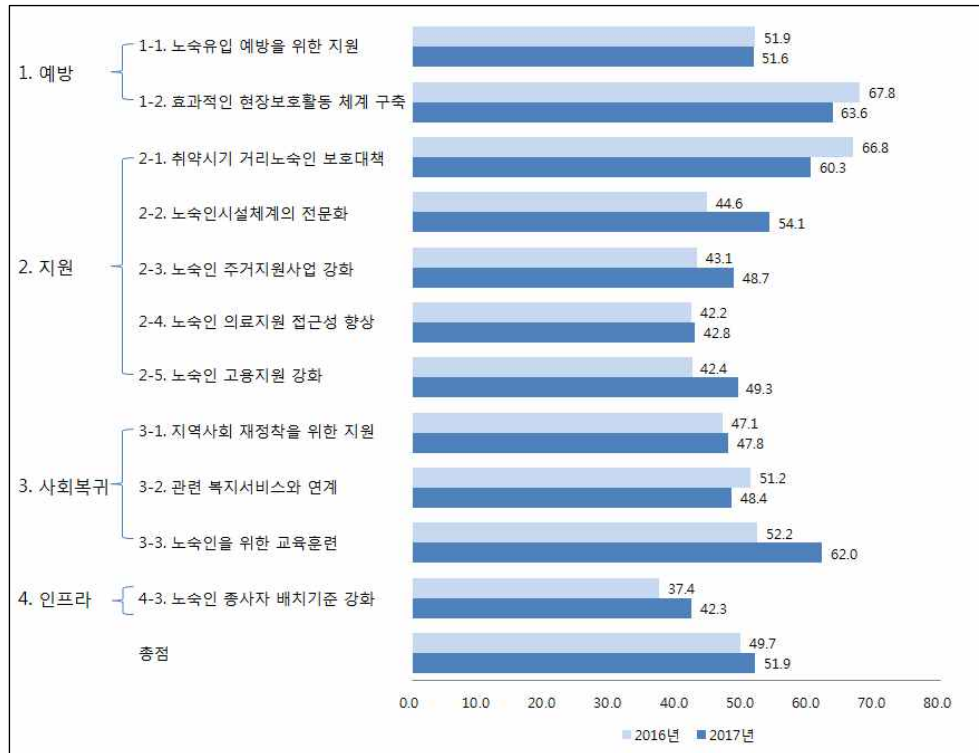
〈요약표 2〉 과제별 종합점수

과제명	평균		최대	최소	평균 비교(17-16년)	
	광역	중앙			광역	중앙
1-1.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51.6	73	89	26	1	17
1-2.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63.6	62	81	44	△8	6
2-1.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60.3	-	87	42	△2	-
2-2.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54.1	24	94	24	9	7
2-3.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48.7	35	96	25	10	15
2-4.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42.8	56	80	15	△4	51
2-5.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49.3	71	89	20	12	38
3-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47.8	-	81	0	14	-
3-2.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48.4	-	77	30	5	-
3-3.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62.0	-	84	42	1	-
4-1.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55	-	-	-	△16
4-2.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	37	-	-	-	9
4-3.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42.3	60	72	14	1	36
총점(평균)	51.9	52.6	84.5	25.6	6.6	22.4

주 1) 16년 대비 17년 평균 점수가 감소한 과제는 △ 표시.

2) 4-1, 4-2 과제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 아니므로 총점(평균)에 반영 안함.

[요약그림 1] 과제별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 비교(2016-2017)



□ 과제별 평가부분 평가

○ 과제별 평가부분 점수를 보면 1-②, 2-①, 2-②, 3-③ 과제가 각각의 지표별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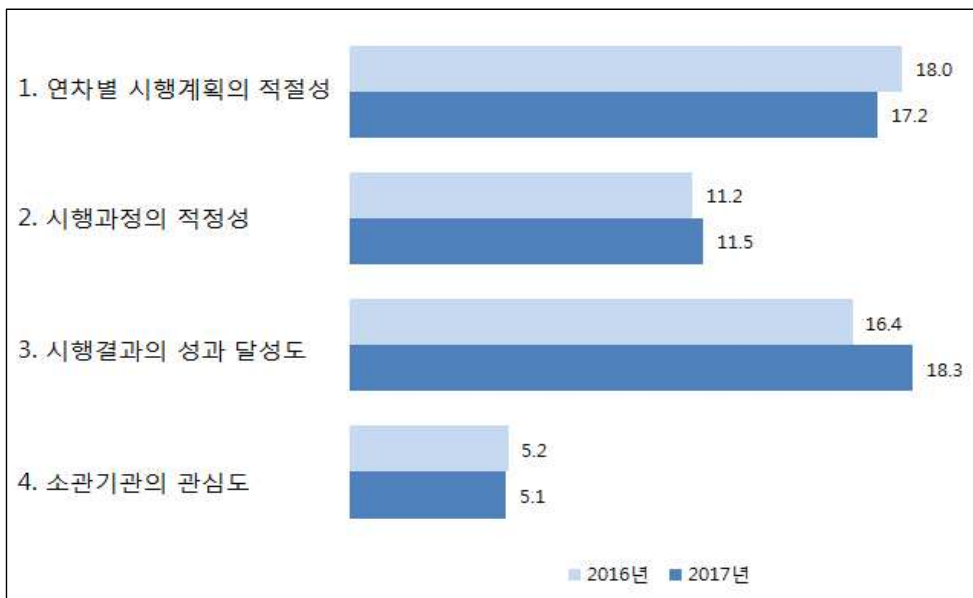
- 과제별 평가에서도 1-②, 2-① 과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볼 때, 현행 노숙인 정책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보호활동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지역사회 재정착, 복지서비스 연계,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수도 낮고 평가지표별로 봤을 때도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획득한 부분이 없음. 향후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요약표 3〉 과제별 평가부분 점수

과제명	시행계획의 적절성(30점)	시행과정의 적정성(30점)	성과 달성도(30점)	소관기관의 관심도(10점)	계(100점)
1-1.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7.7	11.5	17.8	4.7	51.6
1-2.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8.2	15.8	23.5	6.1	63.6
2-1.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7.9	15.4	20.9	6.2	60.3
2-2.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8.4	9.6	20.9	5.1	54.1
2-3.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7.4	9.8	17.4	4.1	48.7
2-4.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2.6	10.1	16.4	3.6	42.8
2-5.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7.5	8.9	18.1	4.8	49.3
3-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6.4	10.4	16.0	5.0	47.8
3-2.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6.3	10.2	16.6	5.4	48.4
3-3.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9	14.8	21.2	6.4	62.0
4-1.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15.0	17.0	17.0	7.0	56.0
4-2.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7.0	17.0	24.0	8.0	76.0
4-3.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15.8	10.1	13.0	4.8	42.3
총점(평균)	17.2	11.5	18.3	5.1	51.9

주: 4-1, 4-2 과제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 아니므로 총점(평균)에 반영 안함.

[요약그림 2] 과제별 평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 비교(2016-2017)



□ 과제별 평가결과

○ 평가결과를 4개의 절대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해당 등급에 어떤 광역자치단체가 해당되는지를 평가한 결과, 먼저 총점은 매우우수 2개, 우수 5개, 보통 10개로 구분되었으며 미흡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음.

- 2016년은 매우우수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었으나 2017년에는 2개 지역이 해당된 점, 2016년 4개 지역이 우수인 것에 비해 2017년은 5개 지역이 우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점수가 상승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보통에 가장 많은 지역이 분포되어 있음.
- 종합점수를 통해 평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제별 등급을 보아도 1-②, 2-① 과제에서는 많은 지역이 매우우수와 우수에 해당하고 있으며 다른 과제에는 주로 보통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요약표 4〉 과제별 평가결과(2016~2017)

세부과제명	연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1-1.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2017	서울, 경기	대구, 전남, 강원, 세종, 경남	대전, 충북, 부산, 충남, 인천, 전북, 경북, 울산, 광주, 제주	-
	2016	서울, 인천, 세종, 대전	경기, 울산,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상, 부산, 충북, 대구, 광주, 경북	제주
1-2.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2017	대전, 대구, 서울	부산, 경기, 전남, 인천, 제주, 강원, 전북, 경남, 세종, 울산	경북, 충북, 광주, 충남	-
	2016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제주, 강원, 전북, 전남, 광주, 경북, 울산, 충북, 충남, 부산, 대구, 경남, 제주, 경기, 전남, 부산, 충북, 세종, 강원, 인천, 전남, 전북		
2-1.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2017	대전, 대구, 서울	부산, 충북, 세종, 강원, 인천, 전남, 전북	울산, 광주, 경북, 충남	-
	2016	서울, 경기, 대전, 인천	광주, 강원, 경북, 경남, 울산, 제주, 세종, 충북,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충남		

세부과제명	연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2-2.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2017	대전, 경남	서울, 대구, 전남, 경기, 제주	인천, 전북, 세종, 강원, 부산, 광주, 충북, 충남, 경북	울산
	2016	대전	인천, 경기, 경남, 전북	경북, 광주, 충북, 대구, 전남, 충남, 강원, 제주, 울산, 세종, 전남, 제주	부산, 서울
2-3.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2017	서울, 대전, 대구	경남, 경기, 경북	부산, 전남, 제주, 세종, 충남, 인천, 전북, 강원, 울산, 광주	충북
	2016	서울, 대전	인천, 경기, 세종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충남, 제주, 울산, 충북, 강원	부산, 전북, 대구
2-4.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2017	서울, 대구	대전, 제주, 인천	부산, 경기, 전북,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전남, 울산	충남, 충북, 광주
	2016	인천, 대전	서울, 경기, 제주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북, 부산, 충남, 전남, 세종, 경북	울산, 경남
2-5.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2017	대전, 서울	대구, 제주, 경남, 경기	세종, 부산, 강원, 전북, 인천,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울산	광주
	2016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울산, 부산, 충북, 경남, 대구, 제주, 경북	강원
3-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2017	서울, 대전	경기, 제주, 대구, 부산, 전남	울산, 경남, 충북, 강원, 경북, 광주, 충남, 경북, 인천	세종
	2016	-	서울, 경기, 인천, 전남, 울산	전북, 경남, 대전, 강원, 제주, 부산, 세종, 경북, 광주, 충북, 대구, 충남	-
3-2.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017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서울, 제주	경북, 충남, 전남, 인천, 세종, 광주, 강원, 경남, 울산, 전북, 충북	-
	2016	-	대전, 경기, 인천, 부산, 서울, 충북, 경북	광주, 경남, 대구, 강원, 전북, 전남, 충남, 울산, 제주, 세종	-
3-3.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17	서울, 경기, 대전	인천, 대구, 충북, 제주, 세종, 전북, 전남, 경남, 광주, 부산	울산, 강원, 충남, 경북	-
	2016	인천, 경기	서울, 제주, 대전, 대구, 전북, 경북	세종, 경남, 광주, 충북, 울산, 전남, 충남, 강원, 부산	-

세부과제명	연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4-3.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017	-	대구, 경기, 경남, 전남, 광주, 서울	대전, 충남, 부산, 충북, 세종, 제주, 전북	경북, 인천, 울산, 강원
총점	2017	서울, 대전	대구, 경기, 경남, 전남, 부산, 제주	인천,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충남, 전북, 광주, 울산	-
	2016	-	대전, 인천, 경기, 서울	전북, 세종, 전남, 광주, 울산, 경북, 제주, 경남, 충북, 충남, 강원, 대구, 부산	-

주: 1) 4-1, 4-2 과제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 아니므로 평가결과 분류 안았으며, 4-3 과제는 201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가 아니므로 제시하지 않음

2)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별 평가결과

- 광역자치단체별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보면 2017년에는 서울과 대구, 대전이 매우우수와 우수에 해당하는 과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은 보통 등급에 많은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요약표 5〉 광역자치단체별 평가결과(2016~2017)

구분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서울	2017	2-3, 1-1, 2-5, 3-3, 3-1, 2-4, 1-2, 2-1	2-2, 3-2, 4-3		
	2016	2-1, 1-1, 1-2, 2-3	2-5, 3-3, 3-1, 2-4, 3-2		2-2
부산	2017		1-2, 3-2, 2-1, 3-1, 3-3	2-3, 1-1, 2-4, 2-2, 2-5, 4-3	
	2016		3-2, 2-1, 1-2	3-1, 1-1, 2-5, 3-3, 2-4	2-3, 2-2
대구	2017	2-1, 2-3, 2-4, 1-2, 3-2	3-3, 4-3, 2-2, 2-5, 1-1, 3-1		
	2016		1-2, 3-3, 2-1	3-2, 2-4, 2-2, 3-1, 1-1, 2-5	2-3
인천	2017		3-3, 1-2, 2-4, 2-1	2-2, 3-2, 2-5, 1-1, 2-3, 3-1	4-3,
	2016	1-2, 2-4, 3-3, 1-1, 2-1	2-2, 3-2, 2-5, 3-1, 2-3		

구분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광주	2017		4-3, 3-3	1-2, 2-1, 2-2, 3-2, 3-1, 1-1, 2-3	2-5, 2-4
	2016		2-1, 1-2	3-2, 3-3, 2-2, 2-4, 2-3, 2-5, 3-1, 1-1	
대전	2017	2-2, 2-3, 2-5, 2-1, 1-2, 3-1, 3-3, 3-2	2-4	4-3, 1-1,	
	2016	1-2, 2-1, 2-2, 2-4, 1-1, 2-3, 2-5	3-2, 3-3,	3-1	
울산	2017		1-2	3-1, 2-1, 3-3, 3-2, 1-1, 2-3, 2-5, 2-4,	2-2, 4-3,
	2016		1-1, 2-1, 1-2, 3-1	3-3, 3-2, 2-2, 2-5, 2-3	2-4
세종	2017		1-2, 3-3, 2-1, 1-1,	2-2, 2-5, 3-2, 2-3, 4-3, 2-4,	3-1
	2016	1-1, 1-2,	2-1, 2-3,	3-3, 3-1, 2-5, 3-2, 2-2, 2-4	
경기	2017	1-1, 3-3	1-2, 2-1, 4-3, 3-1, 3-2, 2-2, 2-3, 2-5,	2-4	
	2016	1-2, 2-1, 3-3	1-1, 3-2, 2-5, 2-2, 3-1, 2-3, 2-4		
강원	2017		1-2, 1-1, 2-1	2-2, 3-3, 3-1, 2-5, 3-2, 2-4, 2-3,	4-3
	2016		1-2, 2-1,	3-1, 3-2, 2-4, 1-1, 2-2, 3-3, 2-3	2-5
충북	2017		3-3, 2-1	1-2, 1-1, 3-1, 4-3, 2-2, 2-5, 3-2,	2-3, 2-4,
	2016		2-1, 1-2, 3-2,	3-3, 2-2, 2-4, 3-1, 1-1, 2-5, 2-3	
충남	2017			3-3, 1-1, 3-2, 1-2, 2-1, 4-3, 2-2, 2-5, 2-3, 3-1,	2-4
	2016		1-1, 1-2, 2-1,	2-5, 3-2, 3-3, 2-2, 2-3, 2-4, 3-1	
전북	2017		1-2, 3-3, 2-1	2-2, 2-5, 1-1, 3-1, 2-4, 2-3, 4-3, 3-2,	
	2016		1-2, 2-1, 2-2, 3-3,	3-1, 1-1, 2-5, 3-2, 2-4	2-3
전남	2017		1-2, 2-2, 1-1, 4-3, 3-3, 2-1, 3-1	2-3, 3-2, 2-5, 2-4,	
	2016		1-2, 2-1, 3-1,	2-3, 3-2, 1-1, 2-5, 3-3, 2-2, 2-4	

52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구분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경북	2017		2-3	1-2, 3-2, 2-1, 3-3, 2-5, 2-2, 1-1, 2-4, 3-1,	4-3
	2016		2-1, 1-2, 3-2, 3-3,	2-2, 3-1, 2-3, 1-1, 2-4, 2-5	
경남	2017	2-2	2-1, 1-2, 4-3, 2-3, 2-5, 3-3, 1-1	3-1, 3-2, 2-4,	
	2016		2-1, 2-2, 1-2,	3-2, 3-1, 3-3, 2-3, 1-1, 2-5	2-4
제주	2017		3-3, 2-1, 2-4, 1-2, 2-5, 3-1, 2-2, 3-2	2-3, 1-1, 4-3	
	2016		1-2, 2-1, 3-3, 2-4,	3-1, 3-2, 2-2, 2-3, 2-5	1-1
계	2017	24	65	87	11
	2016	21	59	81	9

주: 1) 4-1, 4-2 과제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 아니므로 평가결과 분류 안았으며, 4-3 과제는 201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가 아니므로 제시하지 않음

2)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주요용어: 노숙인 복지, 자립지원, 성과평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2년 6월)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법 제2조).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따라서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숙인의 생활 특징으로 인해 정책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발생예방과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음(「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매 5년마다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제1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2016~2020)

□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하고, 노숙인 등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필요함.

○ 노숙인복지법 제8조의 2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법적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제3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29.]</p>	<p>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 노숙인 복지법 제정과 함께 2016년 제1차 종합계획은 수립되었으며, 2017년 종합계획 수립의 연차별 점검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16년 추진실적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수행하였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지표는 계획, 집행, 성과, 환류의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4개의 평가부문과 1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음.

- 법 제정 이후 2016년 추진실적에 대한 첫 번째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종합적 평가를 통해 노숙인 정책에 대한 가이드마련에 중점을 두었음.
- 그러나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정책의 과제에 대한 계획을 매년 제출하여야 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함.
 - 종합계획에 상응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시행 계획 수립은 사업목적의 논리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세워야함.
 -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이 복지체계 담당자 및 실무자의 개인적 역량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공식적이고 의식적인 개입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함.
 - 이에, 노숙인 지원정책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핵심적인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적 여건 및 특색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함.
- 또한 본 평가연구를 통하여 노숙인 정책의 지역적 편차를 좁혀 모든 노숙인 등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노숙인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할 것임.
 - 현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무료현장진료소 등의 서비스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노숙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킴.
 - 이에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이원화된 정책지원을 극복하고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법이 제정('12)되며, 다양한 형태의 노숙인 복지시설과 주거와 복지, 의료,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1차 년도에 대한 과제로 분절적이고 파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연속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평가도구를 토대로, 성과지표 달성도와 과정평가를 실행함으로써 노숙인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연차별 평가는 중기계획의 매년 시행결과 산출에 대한 1년 단위의 과정평가이며 추진 절차와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으로서의 평가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연차별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의 계획과 비교하여 정확성 및 충실성을 평가하고자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효율성 및 효과성 판단의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단기·중기·장기적인 노숙인 정책에 대한 핵심정책 전략을 구성하는데 환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보고서는 총 8장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장을 포함한 제1장은 서론으로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소개하며, 제2장은 평가를 및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과제에 대한 개요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평가지표에 대해 제시함.
- 제3장 노숙인 등의 현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전체 및 지역별 규모를 제시하며, 생활시설 현황 및 생활시설 입소자 규모 등을 분석하고 쪽방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파악하여 제시함.
- 제4장부터 제7장까지는 4대 분야 13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먼저 과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한 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제8장 결론부분에서는 공통 성과지표 및 자율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롯한 노숙인 지원정책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과제별 평가결과에 대한 제언, 향후 평가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평가지표는 계획P 집행D 성과C 환류F의 논리모형(logic model)에 근거하며, 평가분야를 종합계획 수립의 체계성, 부문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기반마련의 충실성,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달성도, 소관기관의 관심도, 책임성 및 일관성으로 구분하여 노숙인 복지정책의 원칙(목표)과 광역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평가함.

- 투입관련 지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행·재정 지원계획의 적절성과 노숙인을 위한 현장보호활동 비율, 주거지원건수 등과 같은 세부지표로 투입된 자원의 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수립의 체계성을 평가하고자 함.

- 과정관련 지표: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선정의 객관성 평가를 통한 부문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과 민간자원 연계 및 서비스의 통합성, 시설 서비스 기준 충족도 등을 통한 기반마련의 충실성을 평가하고자 함.
 - 산출관련 지표: 노숙인의 규모 증감, 고용·주거 등 지원 서비스의 지원 수(노숙인 수 대비 비율) 등 성과목표치 달성도 평가를 통해 연도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환류관련 지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중앙부처간,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간, 민관협력 정도,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한 성과 등을 평가하고 차년도 정책 집행에 반영하고자 함.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는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검토(사전교육 포함),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진행함.
- 평가는 종합계획 과제, 부문별(노숙예방, 응급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지원, 사후관리, 인프라 등) 및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성과, 예산집행실적 등에 주안점을 두고자 함.
- 마지막으로 영역 및 지표별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종합적인 해석 및 진단을 내림.
- 종합적 진단은 종합계획 수립의 체계성, 부문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기반마련의 충실성,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달성도,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일관성, 추진 상 애로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자 함.
 - 종합적인 진단을 토대로 향후 노숙인 정책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차기 계획 수립 시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노숙인 지원정책 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검토(사전교육 포함)

-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함. 또한 사전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전교육을 통해 추진 실적 제출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

□ 노숙인 지원정책 추진 실적 평가

- 평가분야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 소관기관의 관심도로 구분됨.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에는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수립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함.
 - 시행과정의 적정성에는 추진과정의 충실성, 추진과정의 구체성, 사업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함.
 -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에는 사업성과 이행정도,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목표달성률,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 평가함.
 - 소관기관의 관심도에서는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에 대해 평가함.
- 평가방법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 평가의 주안점은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에 대한 핵심적인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 지역적 여건 및 특색에 맞는 성과, 타당한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등 평가함.

□ 평가결과의 종합적 진단 및 정책 개선 방안 모색(컨설팅 포함)

- 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통해 향후 노숙인 정책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차기 계획 수립 시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종합적 진단의 주안점은 종합계획 수립의 체계성, 부문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기반마련의 충실성,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달성도,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일관성, 추진 상 애로사항 등 진단함.

□ 자문회의 및 평가단 구성

- 개발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 종합적 진단 평가, 개선방안 모색 및 핵심정책 전략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
- 평가자간 신뢰도 및 타당도, 교차검증 등 총괄을 위한 위탁 기관 내부와 외부 평가단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사업성과 평가관련 전문가, 노숙인 분야별 관련 연구자로 평가단(평가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지역 전문가로 구성
 - 관련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 실무자, 현장 실무자 등의 자문의견 수렴

□ 연차별 평가 과정



제 2 장

평가틀 및 평가지표

제1절 평가개요 및 평가과제

제2절 평가틀 및 평가지표

제1절 평가개요 및 평가과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노숙이 발생한다고 보고 근본적인 노숙인 감소를 위한 가족 해체 문제, 경제 활성화, 실업 대책 등의 경제·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
- 노숙인 종합계획은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노숙 취약계층의 노숙 방지 예방 및 특성별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둬(보건복지부, 2016).
- 먼저, 예방적인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거리노숙 유입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하고자 함.
 - 세부적인 과제로는 기존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노숙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
 -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노숙 조기발견과 거리로의 유입 가능성을 축소
 - 거리에서 생활하는 위기 노숙인에 대한 응급지원을 통해 조속히 거리노숙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계획 기간 내 거리노숙인의 감소를 유도
- 두 번째로 지원적인 측면에서 거리노숙인과 만성적 노숙인의 특성별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세부적인 과제로는 노숙인 시설의 기능을 재편하고 시설에 생활하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감소를 유도

- 노숙인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 의료, 고용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
- 세 번째로 사회복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회 재정착을 위한 관련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함.
 - 세부적인 과제로는 노숙인이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 노숙을 경험한 이들이 거리노숙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고용·의료 등과 관련복지서비스를 연계
-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함.
 - 세부적인 과제로는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노숙인 정책평가 및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
 - 범부처간, 민관합동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

[그림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의 목적, 목표, 분야별 추진 과제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p.15.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의 목적 및 목표를 기준으로 13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1-1.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 및 공적 및 민간자원연계

- 위גיע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강화
- 1-2.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 제공 및 계획 수립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상담활동의 전문성 강화
 - 거리노숙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
- 2-1.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 응급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운영
 -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
- 2-2.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은 시설인력기준 마련
 -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체계 마련
 -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인에 대한 보호강화
- 2-3.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강화
 -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대
 - 여성, 만성적 거리노숙인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우선지원
- 2-4.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 노숙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의 향상
 - 노숙인 현장진료소 운영 확대
 -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 2-5.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 노숙인 고용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
 - 근로능력이 약한 인원에 대한 ‘공공 일자리’ 제공 활성화

- 3-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 자립지원금 지원 등 마련
 -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
- 3-2.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 관련서비스와 연계
 -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 3-3.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
 -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
- 4-1.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 4-2.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 중앙-지자체간 노숙인 지원협력을 위한 회의구조 마련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 4-3.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표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4대 분야 및 13개 과제

4대 분야	과제명	소관기관
1.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자원 시스템 확립	1-① 노숙유인 예방을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지자체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 및 공적 및 민간자원연계	보건복지부·지자체
	- 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강화	지자체
	1-②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지자체
	-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 제공 및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상담활동의 전문성 강화	지자체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거리노숙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	지자체
	2-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지자체
	- 응급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운영	지자체
	-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지자체
	-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2-②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보건복지부·지자체
	-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은 시설인력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지자체
	-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인에 대한 보호강화	지자체
	2-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국토교통부·지자체
	-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강화	지자체
	-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대	국토교통부·지자체
	- 여성, 만성적 거리노숙인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우선지원	지자체
	2-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보건복지부·지자체
3.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 노숙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의 향상	보건복지부·지자체
	- 노숙인 현장진료소 운영 확대	지자체
	-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지자체
	2-⑤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지자체
	- 노숙인 고용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	고용노동부·지자체
	- 근로능력이 약한 인원에 대한 '공공 일자리' 제공 활성화	지자체
	3-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지자체
	- 자립지원금 지원 등 마련	지자체
	-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	지자체
	3-②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자체
4. (인프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 관련서비스와 연계	지자체
	-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지자체
	3-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자체
	-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	지자체
	-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	지자체
	4-①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4-②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 중앙-지자체간 노숙인 지원협력을 위한 회의구조 마련	보건복지부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4-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지자체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지자체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제2절 평가를 및 평가지표

1. 평가를 및 평가지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지표는 계획P 집행D 성과C 환류F의 논리모형(logic model)에 근거하며, 4개의 평가부문과 1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평가부문은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 시행 결과의 성과 달성도, 「4. 소관기관의 관심도」임.

□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종합계획의 내용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
-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사업목적에서 과제 내용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로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 주요사업내용과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
-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 「2. 시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 추진체계와 추진과정의 연관성, 추진체계와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성에 대한 평가
-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 추진과정에 대해, 세부추진내용에 대한 평가
-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3. 시행결과와 성과 달성도」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사업성과 내용 중 주요사업성과의 정책효과, 수요자 및 결과 내용 등 평가
-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사업성과 내용 중 성과지표 목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
- ③ 목표달성률: 사업성과 내용 중 실적, 달성률에 대한 평가
- ④ 예산집행 실적: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평가

□ 「4. 소관기관의 관심도」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에 대한 평가

〈표 2-2〉 2016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평가기준	지표성격	배점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종합계획 과제와의 일치성 여부	정성	5	30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 사업목적의 논리성, 구체성 여부	정성	10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사업내용의 연계성 여부	정성	5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여부 -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명확성, 합리성 여부	정성	10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충실성 여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성 여부	정성	10	30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 세부 추진내용의 구체성 여부 - 추진과정의 적정성 여부	정성	10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정성	10	
3. 시행결과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 사업성과 결과에 대한 달성 여부 - 사업성과에 대한 수요자 충족 여부	정성	5	30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여부 - 측정방법 및 실적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혼합	10	
	③ 목표달성률	-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	정량	10	
	④ 예산집행 실적	-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정량	5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혼합	10	10
소계				100	

2. 평가결과 제시방법

-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는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2016년에는 법 제정 이후 첫 번째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노숙인 정책에 대한 가이드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평가 시 투입과 집행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더 많이 고려하였음.
- 2017년에는 실적자료 제출 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전교육을 통해 추진 실적 제출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평가 시 계획, 집행, 성과, 환류의 논리모형을 동일한 기준으로 고려하였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의 과제는 총 13개의 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과제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 함.
- 중앙부처는 각 부처별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다름
 - 보건복지부는 1-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②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2-②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2-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4-①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4-②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4-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과제를 평가함.
 - 국토교통부는 2-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에 대한 과제를 평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2-⑤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에 대한 과제를 평가함.
- 광역자치단체는 1-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②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2-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2-②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2-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2-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2-⑤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3-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3-②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3-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4-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과제를 평가함.

- 다만, 4-①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4-②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한 과제 중 실적을 제출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실적으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한 후,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수로 시행하여야 하는 과제에서 가점을 주었음.

□ 평가점수는 각 과제별 100점 만점 점수를 기준으로 절대등급으로 구분하였음.

- 매우우수: 76점에서 100점까지를 의미하며,
- 우수: 51점에서 75점까지를 의미.
- 보통: 26점에서 50점까지를 의미.
- 미흡: 0~25점까지를 의미함.

제 3 장

노숙인 등의 현황

제1절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

제2절 거리노숙인 현황

제3절 시설노숙인 현황

제4절 쪽방주민 현황

3

노숙인 등의 현황 <<

제1절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

□ 노숙인 등의 규모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노숙인 전체수는 10,645명에서 10,82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쪽방주민은 6,063명에서 5,705명으로 감소하였음.

○ 노숙인을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2016년 969명에서 2017년 86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일시보호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798명에서 994명으로 증가함.

○ 자활시설의 경우는 2016년 1,613명에서 2017년 1,58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재활시설 및 요양시설의 경우는 7,265명에서 7,389명으로 증가함.

〈표 3-1〉 노숙인 등의 규모 추세(2006~2017)

(단위 : 명)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노 숙 인	거리	1,317	1,260	1,077	1,121	1,081	1,197	1,138	1,125	969	862
	일시보호	-	-	-	-	-	844	899	1,045	798	994
	자활	3,479	3,404	3,117	3,282	2,741	2,095	1,949	1,683	1,613	1,583
	재활·요양	9,492	9,266	8,958	8,742	8,569	8,520	8,361	8,048	7,265	7,389
	전체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쪽방주민		6,119	6,394	6,232	5,991	5,891	5,992	6,147	6,072	6,053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 2017년 12월 기준 노숙인 등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노숙인은 10,828명이며, 쪽방주민은 5,705명임.

○ 거리노숙인은 거리뿐만 아니라 일시보호시설(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을 포함)에서 집계된 노숙인을 포함하며, 이는 두 시설이 거리노숙인의 상담 및 서비스 연계와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제공, 응급처리 등 일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거리노숙인은 862명이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은 994명으로 총 거리노숙인은 1,856명임.

○ 생활시설 노숙인은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노숙인을 의미함.

- 자활시설 노숙인은 1,583명, 재활시설 노숙인은 4,123명, 요양시설 노숙인은 3,266명으로 총 생활시설 노숙인은 8,972명임.

〈표 3-2〉 노숙인 등의 규모(2017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노숙인 전체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
		전체	거리	일시보호	전체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국	10,828	1,856	862	994	8,972	1,583	4,123	3,266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등의 규모를 살펴보면 노숙인 전체는 서울 3,6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가 1,001명, 경기도가 924명, 부산이 880명, 전남이 735명, 인천이 718명, 충북이 712명 순이었음,

○ 거리노숙인의 경우는 서울이 9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산 257명, 경기 174명, 인천 141명, 대구 103명 순이었음,

○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역시 서울이 2,7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가 898명, 경기도가 750명, 전남이 724명, 충북이 705명, 부산이 623명, 인천이 577명 순이었음.

- 쪽방주민은 서울이 3,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산이 881명, 대구가 808명 순이었음.

〈표 3-3〉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등의 규모

(단위: 명)

구분	노숙인 전체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서울	3,653	927	2,726	3,174
부산	880	257	623	881
대구	1,001	103	898	808
인천	718	141	577	430
광주	154	14	140	-
대전	293	52	241	412
울산	43	12	31	-
세종	115	13	102	-
경기	924	174	750	-
강원	287	30	257	-
충북	712	7	705	-
충남	76	54	22	-
전북	235	21	214	-
전남	735	11	724	-
경북	345	7	338	-
경남	498	21	477	-
제주	159	12	147	-
전체	10,828	1,856	8,972	5,705

주: 거리노숙인은 거리뿐만 아니라 일시보호시설(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포함)에서 집계된 노숙인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성별 노숙인 등의 규모를 살펴보면, 남성이 8,014명, 여성이 2,814명으로 약 3배 정도 많았음.

- 거리노숙인의 경우는 남성이 1,744명, 여성이 112명이며, 생활시설 노숙인은 남성이 6,270명, 여성이 2,702명임.

- 쪽방주민의 경우는 남성이 4,729명, 여성이 976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5배 정도 많았음.

〈표 3-4〉 성별 노숙인 등의 규모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노숙인 전체		8,014	2,814	10,828
	거리노숙인	1,744	112	1,856
	생활시설 노숙인	6,270	2,702	8,972
쪽방주민		4,729	976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제2절 거리노숙인 현황

- 거리노숙인과 이용시설 노숙인은 전체 1,856명으로 남성은 1,744명, 여성은 112명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전체 862명 중에서 남성은 802명, 여성은 60명임.
- 일시보호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남성은 588명, 여성은 52명이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는 남성 354명으로 파악됨.

〈표 3-5〉 성별 거리노숙인 현황

(단위: 명)

구분	거리	이용시설		전체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남성	802	588	354	1,744
여성	60	52	-	112
전체	862	640	354	1,856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거리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면, 거리노숙인 862명, 이용시설 노숙인 994명으로 전체 거리노숙인은 1,856명임.
-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전체 거리노숙인은 서울이 9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산이 257명, 경기도가 174명, 인천이 141명, 대구가 103명 순이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서울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천이 130명, 부산과 경기도가 각각 123명 순이었음.
 - 이용시설 노숙인의 경우는 서울이 6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부산이 134명, 경기도가 51명이었음.

〈표 3-6〉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현황

(단위: 명)

구분	거리	이용시설	전체
서울	237	690	927
부산	123	134	257
대구	76	27	103
인천	130	11	141
광주	13	1	14
대전	30	22	52
울산	4	8	12
세종	10	3	13
경기	123	51	174
강원	28	2	30
충북	3	4	7
충남	53	1	54
전북	10	11	21
전남	5	6	11
경북	2	5	7
경남	15	6	21
제주	0	12	12
전체	862	994	1,856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서울이 8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서울과 부산이 각각 36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221명, 경기도가 165명, 인천이 133명, 대구가 100명 순이었음.

○ 여성은 서울, 부산 다음으로 경기도가 9명, 인천이 8명 순이었음.

〈표 3-7〉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성별 현황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서울	891	36	927
부산	221	36	257
대구	100	3	103
인천	133	8	141
광주	12	2	14
대전	49	3	52
울산	11	1	12
세종	13	0	13
경기	165	9	174
강원	28	2	30
충북	6	1	7
충남	50	4	54
전북	20	1	21
전남	8	3	11
경북	6	1	7
경남	20	1	21
제주	11	1	12
전체	1,744	112	1,856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제3절 시설노숙인 현황

□ 노숙인 생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18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재활 시설이 61개소, 재활시설이 35개소, 요양시설이 22개소 임.

○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8개소로 생활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5개소임.

○ 생활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활시설은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많으며, 재활시설은 서울과 전남, 요양시설은 서울과 부산, 인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표 3-8〉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생활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서울	24	8	6	38
부산	4	2	3	9
대구	5	1	1	7
인천	3	1	3	7
광주	1	1	-	2
대전	4	1	-	5
울산	1	-	-	1
세종	-	1	-	1
경기	11	3	1	15
강원	3	2	1	6
충북	1	2	1	4
충남	1	-	-	1
전북	2	2	1	5
전남	-	5	2	7
경북	1	1	2	4
경남	-	3	1	4
제주	-	2	-	2
전체	61	35	22	118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법정보호인원은 10,359명이며 현원은 8,972명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활시설은 현원이 1,583명, 재활시설은 4,123명, 요양시설은 3,266명임.

〈표 3-9〉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법정보호	2,090	4,449	3,820	10,359
현원	1,583	4,123	3,266	8,972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이 가장 많이 있는 서울이 가장 생활시설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 경기, 전남, 충북, 부산, 인천 지역임.

○ 생활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활시설은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으며, 재활시설은 전남과 대구, 인천, 경남, 부산, 경기도에 가장 많음. 요양시설은 서울과 충북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표 3-10〉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서울	896	301	1,529	2,726
부산	75	365	183	623
대구	94	581	223	898
인천	37	485	55	577
광주	23	117	-	140
대전	95	146	-	241
울산	31	-	-	31
세종	-	102	-	102
경기	218	382	150	750
강원	44	125	88	257
충북	11	184	510	705
충남	22	-	-	22
전북	35	126	53	214
전남	-	601	123	724
경북	2	76	260	338
경남	-	385	92	477
제주	-	147	-	147
전체	1,583	4,123	3,266	8,972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0대가 2,938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가 2,622명, 40대가 1,453명, 70대가 1,054명임.
- 생활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활시설은 40~60대 이외에 30대 이하가 299명이며, 재활시설은 30대 이하가 220명, 요양시설은 178명임.
- 반면, 70대 이상은 요양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재활시설, 자활시설 순임.

〈표 3-11〉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10대 이하	32	1	-	33
20대	77	29	34	140
30대	190	190	144	524
40대	362	627	464	1,453
50대	502	1,410	1,026	2,938
60대	331	1,315	976	2,622
70대	79	454	521	1,054
80대 이상	10	97	101	208
전체	1,583	4,123	3,266	8,972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생활시설 노숙인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장애없음이 4,450명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고 정신장애, 지적장애 순임

〈표 3-12〉 생활시설 노숙인 장애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장애없음	1,486	1,657	1,307	4,450
지체장애	43	191	189	423
뇌병변장애	4	57	142	203
시각장애	11	38	37	86
청각장애	5	45	34	84
언어장애	-	29	10	39
지적장애	19	795	786	1,600
자폐성장애	-	-	3	3
정신장애	15	1,231	757	2,003
기타장애	-	110	51	161
복합장애	-	30	50	80
전체	1,583	4,183	3,366	9,132

주: 복합장애의 경우 시설마다 중복으로 집계되어 전체 노숙인 현황이 초과되어 집계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제4절 쪽방주민 현황

□ 쪽방주민의 현황은 쪽방상당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쪽방상당소는 10개소가 있으며, 쪽방주민은 전체적으로 5,705명으로 파악됨.

○ 이 중 서울역쪽방상당소에 있는 쪽방주민이 1,0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쪽방상당소에 있는 쪽방주민이 808명, 남대문쪽방상당소에 있는 쪽방주민이 781명 순이었음.

〈표 3-13〉 쪽방상당소별 쪽방주민 현황

(단위: 명)

구분		명
서울	돈의동쪽방상당소	550
	창신동쪽방상당소	323
	남대문쪽방상당소	781
	서울역쪽방상당소	1,004
	영등포쪽방상당소	516
	소계	3,174
부산	동구쪽방상당소	444
	부산진구쪽방상당소	437
	소계	881
대구	대구쪽방상당소	808
인천	인천쪽방상당소	430
대전	대전쪽방상당소	412
전체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성별 쪽방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705명 중에서 남성은 4,729명, 여성은 976명임.

○ 지역별, 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174명 중에서 남성이 2,724명, 여성이 4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은 전체 881명 중에서 남성이 760명, 여성이

121명이고, 대구는 전체 808명 중에서 남성이 730명, 여성이 78명임.

○ 인천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4〉 지역별, 성별 쪽방주민 현황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서울	2,724	450	3,174
부산	760	121	881
대구	730	78	808
인천	208	222	430
대전	307	105	412
전체	4,729	976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연령별 쪽방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705명 중에서 50대가 1,8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가 1,751명, 70대 이상이 1,097명이었음.

〈표 3-15〉 연령대별 쪽방주민 현황

(단위: 명)

구분	쪽방주민
10대 이하	30
20대	40
30대	146
40대	792
50대	1,849
60대	1,751
70대 이상	1,097
전체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쪽방주민의 주민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647명이며,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는 94명임.

○ 주민등록 등록 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도 964명으로 파악됨.

〈표 3-16〉 쪽방주민 주민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쪽방주민
유	4,647
무	94
미파악	964
전체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쪽방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3,070명이었음.

○ 비수급자는 2,391명이며,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244명임.

〈표 3-17〉 쪽방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구분	쪽방주민
수급(조건부수급자 포함)	3,070
비수급	2,391
미파악	244
전체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쪽방주민의 의료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1종을 받는 경우는 1,647명, 의료급여 2종은 244명이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811명임.

○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192명이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2,811명으로 파악됨.

〈표 3-18〉 쪽방주민 의료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쪽방주민
의료급여1종	1,647
의료급여2종	244
건강보험	811
비보험	192
미파악	2,811
전체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 쪽방주민의 난방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2,1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기장판판넬이 1,808명이었음.

○ 그 밖에 연탄 사용은 880명, 난방유 사용은 779명이었음.

〈표 3-19〉 쪽방주민 난방 현황

(단위: 명)

구분	쪽방주민
도시가스(LPG)	2,187
난방유	779
전기장판판넬	1,808
연탄	880
기타	51
전체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2017년 12월 기준

제 4 장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제1절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제2절 효과적인 현장보호 활동 체계 구축

4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제1절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1.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시스템 확립	-
1-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 및 공적 및 민간자원연계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강화	광역자치단체

□ 노숙 예방정책의 중요성과 포괄성

- 노숙생활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노숙인 발생을 예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책임. 또한 한번 노숙 상태로 전락하면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어려움.
- 노숙인 자활까지의 경로를 생각하면, 발생한 노숙인에 대한 지원 비용보다 노숙인 발생을 예방하는 비용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임.
- 일반적인 노숙인 지원대책에 비하여 노숙인 예방정책은 매우 포괄적임. 대책의 범주가 광범위하고, 정책 집행의 단위와 주체가 다양한 선택지점이 있음. 노숙인 예방정책은 노숙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야하는데, 노숙 원인이 다양하고 중첩적이기 때문임.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과제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과제는 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 ② 노숙

위기계층에 대한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 연계, ③ 노숙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 강화로 제시되었음.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를 위해서 정보시스템 구축과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15.7.1)으로 단전·단수·월세체납 등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사전 발굴, 지원이 가능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15.12.15 오픈)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적극 발굴
-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노숙전락 위험 가구 발굴 강화 필요

○ 노숙위기계층에 대한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 연계 강화

- 소득기준 등이 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 혹은 관련사회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 연계를 통해 노숙을 방지
- 공적 자원 제공 자격에 부합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 등은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노숙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 홍보

- 초기 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구에 긴급지원 신청을 활성화
- 이를 위해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 PC방, 찜질방 등 노숙과 유사상태인 다중이용업소 이용자가 거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숙인 복지시설 등의 안내를 위한 현장보호활동 강화
- 노숙인 유입 위험이 높은 취약가구가 주로 방문하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 노숙인복지관련 정보의 구비 및 안내상담 시행 등 다양한 예방 대책 강구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노숙유입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중 보건복지부만 해당됨. 다음의 <표 4-1>은 평가영역별 평가결과를 요약한 표임.

<표 4-1>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3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수립은 예방정책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적절함. 그런데 다양한 예방정책(세부과제)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9	빅데이터 연계정보 추가(재난피해자, 임대료제납자),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발견가능성 및 발굴 정확도 향상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5	사업목적과 내용의 연계성이 높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평가됨 (14개 기관 27종 빅데이터). 소관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된 사업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8	예방사업 시행계획의 적절성, 명확성, 합리성은 인정되나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과제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구체성의 측면에서 감점.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	추진체계가 외부기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자체, 지역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8	추진 과정이 1차('17.2 ~ '17.4), 2차('17.5 ~ '17.6), 3차 ('17.7 ~ '17.8), 4차('17.8 ~ '17.10), 5차('17.11~'17.12)로 구분하여 제시됨.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9	10회에 걸쳐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과 현장의견 수렴이 이루어짐.
3.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5점)	5	지원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혜자 중심의 사업성과가 정확하게 평가되고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음.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6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위험예상자 30만명 중 7만7천여명 지원(25.6%), 2016년 대비 지원을 증가 명시함
	③ 목표달성률(10점)	6	2016년 대비 증가(18.9% →25.6%)
	④ 예산집행 실적(5점)	0	예산 집행 내용이 없음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6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예산집행실적이 미흡하게 평가되었지만, 노숙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남.
총 점		73	

□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내용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사업내용과 동일함.

- 단전·단수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사회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숙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
- 또한 발굴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력을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수립은 예방정책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됨.

- 그런데 예방정책의 다른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 예방사업은 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 ② 노숙위기계층에 대한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 연계강화 ③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 강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실적이 없었음. 이런 점에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보완이 필요함.

○ 계획수립의 적합성은 빅데이터 연계정보가 추가(재난피해자, 임대료채납자)되었고,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발견가능성 및 발굴 정확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의 적합성은 전년도보다 높은 점수(7점 → 9점)를 부여받았음.

○ 사업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두 번째 평가부문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세 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추진과정의 충실성, ②추진과정의 구체성, ③사업관리의 적정성으로 각 10점 만점이 부여됨.

○ 보건복지부는 시행과정의 적정성에서는 세 지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각각 8점, 8점, 9점을 획득함.

○ 추진체계가 외부기관(공공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정보 입수 및 선별), 사회보

장정보시스템(빅데이터 분석, 발굴대상자 정보제공), 지자체(읍·면·동 사각지대 발굴), 지역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임. 추진과정의 충실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추진 과정은 분기별로 제시되었는데, 1차('15.12 ~ '16.3), 2차('16.4 ~ '16.6), 3차('16.7 ~ '16.10), 4차('16.10 ~ '16.12)로 구분하여 추진과정을 제시하였음. 세부 진행내용이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의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사업관리의 적정성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느냐의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 점검과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우수'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 총 10회에 걸친 간담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지만, 문제점 파악과 개선실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세 번째 평가부문인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영역은 ①사업성과 이행정도, ②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③목표달성률, ④예산집행실적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음. 이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의 평가점수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성과 이행정도는 '우수'로 평가되었지만, 성과지표 목표의 적정성과 목표달성률은 '보통'으로,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은 '미흡'으로 평가되었음.

○ 사업성과 이행정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5점), 분기별 발굴대상자 지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제시하였음.

- 분기별로 고위험예상 대상자(후보자) 규모가 제시되었고, 복지서비스 지원 내역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기타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원 실적을 제시하였음.

○ 성과지표 설정과 목표달성률의 측면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고위험예상 대상자 30만 명 중 7만7천여 명 지원(25.6%), 2016년 대비 지원율 증가(18.9% → 25.6%) 등으로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목표달성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집행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흡’으로 평가되었음. 정보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지자체와의 환류(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예산집행 실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실적을 구축하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함.

□ ‘노숙유입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 평가 요약 및 제언

○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숙유입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분야’의 세 가지 세부 사업, 즉 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강화, ② 노숙위기 계층에 대한 공적자원 및 민간 자원연계 강화, ③ 노숙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 강화로 구분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첫 번째 사업에 한정되었고, 두 번째 사업과 세 번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행계획이 미약함.

- 물론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적자원 및 민간 자원연계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나머지 세부 과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시행계획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는 빅데이터 구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이 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추진과정과 체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으나,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목표달성율의 근거가 불명확하였고, 예산집행실적이 없었음.

- 불완전 하더라도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연도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수립과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광역자치단체의 최고 점수는 89점, 최저 점수는 26점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은 51.6점으로서 전년도 평가 점수와 유사하였음.

○ 평균점수는 유사하였지만, 개별 자치단체들의 점수 등락이 있었고,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점수가 상승한 반면, 7개 광역자치단체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18.0으로서 전년도의 22.0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점수 편차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표 4-2〉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00	51.6	89.00	26.0	48.0	18.0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7.7	27.0	6.0	18.0	6.2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3.9	5.0	2.0	4.0	0.7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5.3	9.0	2.0	5.0	2.8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3	5.0	1.0	3.0	1.2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5.2	9.0	1.0	5.0	2.4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1.5	26.0	4.0	10.0	6.3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4.8	9.0	2.0	4.0	2.1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3.6	9.0	1.0	3.0	2.2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3.1	8.0	0.0	2.0	2.5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17.8	28.0	10.0	18.0	4.9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2.5	5.0	0.0	2.0	1.3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4.8	9.0	2.0	5.0	2.0
③ 목표달성률	10	7.2	10.0	5.0	7.0	1.0
④ 예산집행 실적	5	3.3	5.0	0.0	4.0	1.5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4.7	9.0	1.0	4.0	2.2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4.7	9.0	1.0	4.0	2.2

□ 전년도(2016년) 실적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의 혼선과 자료정리의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성과지표 설정과 목표달성률 산정 방식에 관한 것이었음. 2017년에는 사전에 공동적인 성과지표를 제공하여 혼선을 해소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는 공동 성과지표로 두 가지(거리노숙인 수 감소, 긴급복지지원 건수) 수치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와 더불어 개별 지역의 정책 특성에 따른 자율적 성과지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4-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거리노숙인 수	100% 미만	2
	100% 이상 200% 미만	11
	200% 이상	1
긴급복지지원	100% 미만	2
	100% 이상 200% 미만	12
	200% 이상	3

○ 거리노숙인 수 성과지표는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하였고(3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았음), 긴급복지지원 성과지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음.

- 거리노숙인 수 감소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광역자치단체가 약 70.6% (12/17) 이었고, 긴급복지지원 관련 목표성취률은 88.2%의 광역자치단체가 100% 이상의 목표달성률을 보여주었음.

○ 공동 성과지표에 더하여 지자체 고유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률을 점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세 곳이었음.

- 대전은 쪽방거주자 임대주택지원 실적과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세종은 월동 난방비 지원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강원은 귀향여비

지원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표 4-4〉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대전	폭방생활인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입주자 명부
	거리노숙인등 임시주거지원 사업	주거지원인원	주거지원일지
세종	월동난방비 지원 수	월동난방비 지원 수	주거지원인원/시청
강원	노숙인 등 귀향여비지원	$(\text{당해년도 지원 건수} \div \text{전년도 지원 건수}) \times 100$	귀향여비집행실적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전년도 성과평가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 유입예방을 위한 예산집행실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실적이 없었는데, 2017년의 경우 2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예산집행 여부	예산집행	15
	비예산으로 진행	2

□ 다음의 〈표 4-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간 점수의 평준화 현상도 보여지는데, 2016년에 비해 2017년은 ‘매우 우수’ 광역자치단체는 감소 한 반면 ‘우수’ 광역자치단체가 증가하였으며, ‘미흡’으로 평가된 광역자치단체가 사라진 반면, ‘보통’으로 평가된 광역자치단체가 증가하였음.

○ 2년 연속 매우우수 등급을 유지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이었고, 2016년 우수

등급에서 2017년 매우 우수 등급으로 상승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이었음.

- 경기의 경우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개발되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음. 찾아가는 주거취약계층 일제조사를 실시하여(17. 5.15~11.30.) 고시원, 여관모텔, 찜질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도민을 50,814세대 조사함. 이를 통해 취약계층 385가구 발굴하고 기초수급, 긴급복지, 무한돌봄서비스 등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노숙으로 유입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둠.

○ 평가 등급이 상승한 10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이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이었음.

- 전년도에 보통 등급이었는데 2017년에는 34점이 상승하여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달구벌복지공동체’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노숙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초기 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둠.

〈표 4-6〉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세부과제명	2017년 평가 등급(점수)				2016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서울, 경기	대구, 전남, 강원, 세종, 경남	대전, 충북, 부산, 충남, 인천, 전북, 경북, 울산, 광주, 제주	-	서울, 인천, 세종, 대전	경기, 울산,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상, 부산, 충북, 대구, 광주, 경북	제주

주: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제2절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1.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시스템 확립	-
1-②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 제공 및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상담활동의 전문성 강화	광역자치단체
- 거리노숙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

□ 노숙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임. 2000년대 이전에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어 있었지만, 경제위기이후 거리 노숙인이 증가하고 그 발생 원인이 국가와 사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

○ 2000년대 들어 노숙인 보호에 대한 관심과 민간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숙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시작

- 하지만 파편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특성에 맞추어 진행되던 노숙인 보호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 조직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됨.

○ 이후 거리 노숙인 지원이 “제1차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체계화되었으며, 거리 노숙인 보호의 적극적 지원방안으로 “효과적인 현장 보호 활동체계 구축”을 포함.

□ 효과적인 현장보호 활동을 통해 거리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광역자치단체의 관심 역시 노숙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노숙인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좀 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거리 노숙인 보호 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보호 혹은 지원매뉴얼

이 필요하며, 노숙인 계획에서도 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많은 일과 보호 업무가 주로 현장 활동가나 전문가 등의 경험에 따라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함.

□ “제1차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서는 거리 노숙인의 체계적인 보호와 탈수급을 돕기 위해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첫째, 중앙정부는 노숙인 서비스와 관련 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기관(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현장보호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둘째, 거리노숙인 등을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정기보호활동을 포함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숙인 지원기관(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응급잠자리 등)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함.

○ 셋째, 거리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는 민간 혹은 광역자치단체 혼자만의 조직과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함.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현장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

○ 2016년에 비해 2017년 평가결과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시행계획의 적절성, 시행계획의 성과 달성도 등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반면에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2016년과 비교시 변화가 많이 없었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었으면 함

- 일부 항목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의지에 따라서는 발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 노숙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보급한 점은 의미가 있음.
 하지만 매뉴얼 작성과 더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이 향후 함께 병행되었으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7〉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5	시행계획서와 동일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4	사업목적에 대한 내용이 부족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3	노숙인 보호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5	사업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6	시행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음(적극성이 추가되었으면 함)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6	추진과정이 세부적이지 못함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0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설명이 미흡
3. 시행결과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5점)	5	결과가 분명함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6	성과지표와 목표가 잘 설정됨. 성과목표가 모든 내용을 포괄하기에는 부족
	③ 목표달성률(10점)	10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
	④ 예산집행 실적(5점)	5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7	노숙인 사업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총 점		62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 결과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 간 편차가 11.8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잘 받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컨설팅 등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전(81점), 서울, 대구, 경기 및 부산 등의 시행계획 등을 참조하여 차년도에는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분발이 필요함

□ 평가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각 평가 항목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부문평가는 다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항목은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음
 - 10점이 부여되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이 각각 4.2점과 5.6점을 받아 전체적인 평가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계획수립의 적합성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도 6점에 불과해 계획수립시 많은 검토가 필요함
-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나게 평가됨. 10점 만점의 평가점수 중에서 5점대를 받고 있음
 - 우수한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간 최대 및 최소 점수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에 대한 컨설팅이 요구됨
- 성과달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목표달성률은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동 평가항목에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분발이 요구되는 측면은 예산집행 실적임. 노숙인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적절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비예산사업으로 노숙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 노숙인 사업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있음
 - 서울, 대전, 대구 등은 관심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결국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노숙인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이 노숙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반적 평가에서 인천과 광주는 2016년 대비 평가가 크게 악화된 반면에 대구와 부산은 전년 대비 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대

비 되는 특성을 지님

〈표 4-8〉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00	63.6	81.0	44.0	65.0	11.8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8.2	23.0	15.0	17.0	2.7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5.0	5.0	5.0	5.0	0.0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4.2	6.0	3.0	4.0	1.0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4	4.0	3.0	3.0	0.5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5.6	8.0	4.0	5.0	1.4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5.8	22.0	7.0	17.0	4.7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5.5	8.0	4.0	5.0	1.7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5.4	6.0	3.0	6.0	1.0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5.0	8.0	0.0	6.0	2.8
3.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30	23.5	27.0	18.0	25.0	3.3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4	4.0	2.0	4.0	0.8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7.1	8.0	6.0	7.0	0.7
③ 목표달성률	10	10.0	10.0	10.0	10.0	0.0
④ 예산집행 실적	5	2.9	5.0	0.0	5.0	2.5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6.1	9.0	3.0	6.0	2.0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6.1	9.0	3.0	6.0	2.0

□ 효과적 현장보호 활동 관련하여 두 가지 공통지표인 ①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비용, ② 아웃리치 활동횟수 이외에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율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한 것을 보면 노숙인 규모 파악과 관련하여 서울, 부산, 광주, 충남 등에서 실태조사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 이외에 노숙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가 활동, 위기관리 및 병의원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한 자율지표로 제시되고 있음.

○ 주로 양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자율지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성 평가

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함께 제시되었으면 함.

- 예를 들어, 대구의 전문가 활동건수 이외에, 상담횟수 및 이를 통한 노숙인의 양태 변화 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표 4-9〉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서울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일시집계횟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부산	거리노숙인 수	목표대비 거리노숙인수	통계보고
대구	전문가 활동건수	정신보건 전문가 동행	센터집계
광주	노숙인실태조사 횟수	-	-
대전	위기관리팀 활동 횟수 병원입원치료 유관기관 보호연계	위기관리팀 활동 회차 병원 입원 인원 보호의뢰 인원	위기관리 활동일지 병원입원 통계 보호요청서
세종	거리노숙인 보호의뢰 인원	거리노숙인 보호의뢰 인원수	보호의뢰/시청, 금이성마을
충북	노숙인지원 네트워크 운영 노숙인 응급의료 병원 지정 운영	시군별 지원체계 구축	결재공문 지정공문
충남	노숙인 실태조사		노숙인시설 업무자료
전남	아웃리치팀 운영	아웃리치팀 운영	내부계획
제주	노숙위험자 시설입소 등 보호횟수	노숙인생활시설 입소+병원이송 횟수	실적보고서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은 두 가지 공통지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별 달성률을 보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100~200% 내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됨

○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200% 이상을 달성한 경우도 지표별로 한 지역씩 있었으며, 100% 미만을 달성한 광역자치단체도 많이 있었음

-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비율에서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100% 미만의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 아웃리치 활동 횟수에서는 3개 광역자치단체가 100% 미만 성과를 보여줌

〈표 4-10〉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비율	100% 미만	7
	100% 이상 200% 미만	9
	200% 이상	1
아웃리치 활동 횟수	100% 미만	3
	100% 이상 200% 미만	13
	200% 이상	1

□ 현장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함. 하지만 실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0개이었으며, 7개 자치단체는 예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표 4-11〉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예산집행	10
	비예산으로 진행	7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의 2016년, 2017년 평가등급 비교표는 다음과 같음

〈표 4-12〉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세부과제명	2017년 평가 등급(점수)				2016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대전, 대구, 서울	부산, 경기, 전남, 인천, 제주, 강원, 전북, 경남, 세종, 울산	경북, 충북, 광주, 충남	-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제주, 강원, 전북, 전남, 광주, 경북, 울산, 충북, 충남, 부산, 대구, 경남		

주: 2016년 평가 등급(점수)은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제 5 장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제1절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제2절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제3절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제4절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제5절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5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 구축

제1절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1.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2-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광역시자치단체
- 응급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운영	광역시자치단체
-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광역시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광역시자치단체

□ 정부는 노숙인 등에 대한 상시적인 보호강화를 위해 동절기 및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

○ 여름과 겨울의 기온 변화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거리노숙인의 경우 생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보호가 필요한 시기임

○ 특히 65세 이상 노인(독거노인 등),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 여성노숙인 등은 계절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제1차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서는 혹서기 및 혹한기 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등에 거리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그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혹서기 및 혹한기 등의 계절에 응급잠자리 및 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위기상황이 발생시 긴급한 조치를 위해 거리 노숙인이 발견되거나 발견된 경

우 위험에 대비하여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별로 혹서기 및 혹한기 등에서는 노숙인 지원기관의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종합지원센터 별로 현장대응팀 및 보건팀을 구성하여 응급상황에 대비

- 무엇보다 노숙인 중에서도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취약한 여성, 장애인, 고령 노숙인 등을 위한 임시주거비 지원과 아웃리치 활동 강화를 통해 구호용품(침낭, 매트, 얼음물 등)을 제공할 것을 포함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중앙부처에서는 본 과제를 시행하지 않은 관계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음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에 관한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전년대비 평가에서는 전체 평균점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로는 대전, 대구 및 서울 등을 들 수 있으며, 작년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경기와 인천은 올해에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줌

- 세부적인 평가는 네 개의 평가틀속에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에서는 만점대비 50%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일부 항목인 계획수립의 적합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부문은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음
 - 최소점수에서도 0점을 받은 광역자치단체가 있어 광역자치단체간 편차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거의 중간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사업관리의 적정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음. 이와 같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주로 모니터링 체계가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5-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00	60.3	87.0	42.0	58.0	13.0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7.9	25.0	13.0	16.0	3.9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5.0	5.0	5.0	5.0	0.0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4.8	8.0	0.0	4.0	2.0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2.9	4.0	2.0	3.0	0.5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5.2	9.0	3.0	5.0	1.8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5.4	25.0	9.0	14.0	5.2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5.5	9.0	3.0	5.0	1.9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5.4	8.0	3.0	5.0	1.5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4.5	8.0	0.0	4.0	2.5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20.9	28.0	16.0	21.0	3.3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1	4.0	2.0	3.0	0.7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6.2	9.0	4.0	6.0	1.5
③ 목표달성률	10	9.9	10.0	9.0	10.0	0.3
④ 예산집행 실적	5	1.8	5.0	0.0	0.0	2.5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6.2	9.0	3.0	6.0	1.9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6.2	9.0	3.0	6.0	1.9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는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음. 특히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목표달성률은 무난히 넘은 것으로 평가됨
- 반면에 예산 집행 실적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음.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취약시기 노숙인 보호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임
 -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사업에 동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향후 차년도 평가에서는 가능한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

어졌다면 다른 사업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평가자료에 명시함으로써 평가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관련하여 두가지 공통지표인 ① 폭염, 저체온증 사망자수, ② 거리노숙인(쪽방포함)상담실적 이외에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율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한 것을 보면 주로 취약시기 노숙인 보호인원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외에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인원, 핫라인 구축 등이 주요한 자율지표로 제시되고 있음

〈표 5-2〉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부산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	계획수립 및 시행
대구	취약시기 아웃리치 활동횟수	7~8월 12~1월 활동 횟수	센터집계
인천	응급잠자리 이용	$(\text{당해년도 이용실적} \div \text{전년도 이용실적}) \times 100$	이용대장
광주	노숙인 임시보호 인원	-	-
대전	일시보호센터 응급잠자리 이용인원	응급잠자리 이용이원	일시보호센터 운영일지
	시설입소 연계인원	입소연계 인원	입소의뢰
세종	시설입소 연계인원	시설입소 연계인원수	노숙인통계
경기	응급잠자리 및 쉼터 운영개수	-	노숙인통계
충북	거리노숙인 임시보호인원	일시보호인원	-
	임시보호소 및 무더위 쉼터 운영	-	-
충남	시설내 임시보호	-	노숙인시설 업무자료
전북	핫라인 구축여부	여/부	비상연락망
제주	노숙위기계층 귀향, 귀가 건수	귀향, 귀가 건수	실적보고서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은 두가 공통지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별 성과달성률을 보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100~200% 내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됨
- 폭염, 저체온증 사망자수는 100% 미만이 7개, 100~200%가 10개로 평가됨.
하지만 동 지표의 성과지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
- 사망자수를 성과지표로 두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사망자수를 0명으로 하고 이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평가를 낮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검토가 필요
- 거리노숙인 상담실적은 100% 미만은 4곳이, 100~200% 미만은 12곳이었으며 200% 이상은 세종 한군데 인 것으로 평가됨

〈표 5-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폭염, 저체온증 사망자수	100% 미만	7
	100% 이상 200% 미만	10
	200% 이상	0
거리노숙인(폭방포함)상담실적	100% 미만	4
	100% 이상 200% 미만	12
	200% 이상	1

- 동절기 및 하절기 실질적으로 노숙인 등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등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함.
- 평가결과 실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6개이었으며,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을 현장보호 활동(아웃리치) 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료를 통한 평가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움
- 차년도 평가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제시된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5-4〉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예산집행	6
	비예산으로 진행	11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의 2016년, 2017년 평가등급 비교표는 다음과 같음

〈표 5-5〉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세부과제명	2017년 평가 등급(점수)				2016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대전, 대구, 서울	제주, 경기, 경남, 부산, 충북, 세종, 강원, 인천, 전남, 전북	울산, 광주, 경북, 충남	-	서울, 경기, 대전, 인천	광주, 강원, 경북, 경남, 울산, 제주, 세종, 충북,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충남		

주: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제2절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2-②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은 시설인력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체계 마련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인에 대한 보호강화	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 과제는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의 세부 과제임

- 기존의 거리노숙 대응 전략은 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해 운영되었음
 - 기존의 거리노숙인 시설보호 체계는 거리노숙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였으나 그 내용이 임의적이고 단순 보호에 그쳐 노숙인의 자립과 욕구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서종균 외, 2012)
- 기존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숙인시설체계 전문화 과제는 노숙인 시설보호 시스템을 보다 전문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
- 노숙인 대상 서비스는 노숙 탈피 및 자립을 지향해야한다는 방향 하에 노숙인 시설관련 사업을 재편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됨
- 기존 노숙인 시설 서비스의 전문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설정함

□ 보건복지부 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노숙인 시설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법적으로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유형은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로 총 7유형이 운영

되고 있음

○ 법적으로는 시설 유형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이용자가 혼재되어 있고 서비스의 특성이 유형 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 발견됨

- 시설보호를 통한 노숙탈피 지원 등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에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특징이 있음
- 또한 시설보호가 단어 그대로 ‘보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규모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개별의 욕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보호체계가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노숙인이 생활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등 기본적 주거권이나 서비스 이용의 효과성 및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보건복지부, 2016)

○ 대부분의 시설이 남성 노숙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이나 청소년 노숙인이 효과적인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발견됨

○ 여성·청소년 노숙인의 경우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 범죄 노출이나 성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이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시설 서비스는 매우 부족함 (보건복지부 2016).

□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2016년 노숙인 종합계획에서는 시설의 전문화를 위한 세 가지 세부 계획을 제시함

○ 노숙인시설 유형에 맞는 시설·인력기준 마련,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절차 개선,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보호강화임

□ 이러한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노숙인 시설 전문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음

- 본 평가는 이러한 책임을 관련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지난 2017년 동안 충분히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 목적이 있음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담당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를 위한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아래 표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사업 평가 결과는 총 100점 만점에 24점을 기록하여 그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은 30점 만점에 11점,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30점 만점에 0점, 그리고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의 경우 11점, 전체적인 노숙인 등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점으로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있으나 이를 적절한 사업목적으로 구체화하지 못함
 - 사업 내용이 전문가 회의 개최, 노숙인 종합센터와 연계한 이력 종합관리, 시설 연계 및 서비스 관리를 통해 시설되소 및 재노숙 예방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각각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체계를 평가하기 어려움
 -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노숙인 시설체계로의 전문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추진체계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회의안을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중앙부처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모호하고 소극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사업체계의 재편이 요구되며 동시에 사업 성과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성과지표가 2017년 2016년과 동일하게 전문가 간담회 2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16년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영역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전문가회의가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사업의 성과지표로 적절한지에 대한 근거나 논리적 연계성이 매우 부족함
 - 세부사업 중 한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으나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의 궁극적 사업 성과 지표로 보기 어려움
 - 전문가회의의 내용과 그 목적, 참여자, 일시 등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하여 회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의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17년 보건복지부의 해당 영역의 예산은 총 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보임

〈표 5-6〉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3	종합계획의 일부를 반영하였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대상에 대한 과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0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목적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내용, 운영체계, 지표 구성, 모니터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4	사업내용은 다소 부족하나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4	추진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단순하게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정도로 사업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본 사업 영역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단순 권고 혹은 협조 요청 등으로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0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 사업은 사업 내용을 구성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정적 절차의 적절한 마련이 필요함.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업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 적극성이 매우 부족함. 노숙인 문제의 가장 주체적인 중앙부처로서의 책임있는 사업 체계 마련이 촉구됨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0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0	
3.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5점)	0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2	2016년도에 이어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문제가 발견됨. 전문가회의 2회 개최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회의의 내용, 본 사업과의 연계성,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에 도움되는 정도, 그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 지표 자체가 적절한지 재평가 하기 바람
	③ 목표달성률(10점)	7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지표의 적절성은 위의 평가 결과를 참조하기 바람
	④ 예산집행 실적(5점)	2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일년 동안 백만원임. 중앙부처의 노숙인 시설전문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규모 및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기 바람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2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본 사업에 대한 관심도나 적극성이 매우 부족함. 2016년도에 이어 부족한 점이 매우 다수 발견되었음. 위의 세부 평가 내역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사업 구성을 재 검토하기 바람
총 점		24	

□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해당영역에 미흡 등급을 평가받았으며 올 해 역시 동일하게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 성과를 보여줌

○ 2016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영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에 있어 책임과 적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됨

○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기 바람 향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표 5-7〉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00	54.1	94.0	24.0	50.0	17.8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8.4	28.0	8.0	18.0	5.8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3.4	5.0	2.0	3.0	0.8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6.5	10.0	2.0	7.0	2.6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4.0	5.0	2.0	4.0	1.1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4.6	10.0	0.0	5.0	2.7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9.6	28.0	0.0	7.0	7.4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3.3	10.0	0.0	3.0	3.0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2.1	8.0	0.0	1.0	2.8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4.3	10.0	0.0	3.0	3.6
3.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30	20.9	30.0	12.0	21.0	5.4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2	5.0	1.0	3.0	1.3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6.3	10.0	3.0	6.0	2.1
③ 목표달성률	10	8.0	10.0	5.0	8.0	1.3
④ 예산집행 실적	5	3.4	5.0	0.0	4.0	2.0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5.1	10.0	0.0	7.0	4.2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5.1	10.0	0.0	7.0	4.2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7년도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총 4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음

□ 우선 전체적인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은 총 30점 만점으로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은 18.4점 (표준편차=5.8) 인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영역에서 최대 점수는 28점이며 최소 점수는 8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점수 18점으로 분석 결과 나타남

○ 본 영역에서 최고점수 28점을 획득한 지역은 대구이었으며 최소 점수 8점을 획득한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남

- 대구의 경우 종합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노숙인 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사업 목적을 종합계획의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 과제 내용과 일치시켜 사업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계함
- 또한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를 사업 목적의 세부 내용에 맞추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울산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있어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종합계획의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 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목적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내용 및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구체화 전략이 요구됨

○ 본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 (20점 이상)를 획득한 지역은 서울 (23점), 대전 (26점), 충남 (20점), 전북 (23점), 전남 (25점), 경남 (24점)로 나타남

- 고득점 지역의 공통적 특성은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의 사업 내용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점임
- 특히 사업 목적이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내용을 대표할 수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 특징임

○ 이에 비해 20점 이하 점수를 기록한 부산 (12점), 인천 (16점), 광주 (18점), 세종 (18점), 경기 (16점), 강원 (12점), 충북 (11점), 경북 (18점), 제주 (15점), 울산 (8점)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내용이나 사업목적과 연계되기 어려운 사업을 구성하였거나, 사업 목적이 모호하거나, 혹은 추진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남

□ 다음 영역은 시행과정의 적정성 영역으로 총 3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

석 결과, 평균은 9.6점 (표준편차= 7.4), 최대값은 28점, 최소값은 0점, 중위값은 7.0점인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추진과정의 충실성은 평균 3.3, 추진과정의 구체성은 2.1점, 그리고 사업관리의 적절성 영역은 4.3점으로 본 영역에서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영역에서는 대전이 28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시행과정을 가장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의 경우 추진과정을 시계열 적으로 뚜렷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세부 사업별로 운영과정을 별도로 구체화시켜 운영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모니터링에 대한 노력과 모니터링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우수하여 본 영역에 있어 우수성을 평가함
- 본 영역에서는 20점이 넘는 우수 지역은 대전 및 경남으로 나타나 다른 영역에 비해 광역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으로 나타남
- 각 광역자치단체는 사업 운영에 있어 적절한 시행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30점 만점에 평균 20.9점 (표준편차 =5.4), 최대값 30점, 최소값 12점, 중위점수 21점으로 나타남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이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영역에 비해 성과영역인 본 영역의 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영역에서 30점을 기록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대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점인 12점은 광주인 것으로 나타남

- 본 영역에서 20점 이상을 기록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로 나타났으며 20점 이하를 기록한 지역은 부산 (16점), 광주 (12점), 울산 (16점), 충남 (13점), 경북 (15점)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과 대전 및 우수한 점수를 기록한 광역자치단체들은 공통지표 (노숙인 시설 유형별 시설입소 지원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 비율)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신뢰할만한 자료수집 방법과 출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달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표 구성에 있어 공통지표 외 추가지표를 광역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자율지표로 구성이 가능하였는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제주가 추가지표 (자율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는 그 성과지표 내용의 적절성, 데이터의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공통지표가 하더라도 지역 간에 이를 지표화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공통지표인 노숙인시설 유형별 시설입소 지원의 경우 서울의 경우 1,500건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부산의 경우도 628건을 제시하였으나 대구의 경우 19명을 제시하여 비슷한 지역인 울산의 40건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의 경우 3건으로 경남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목표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주의 경우도 147건으로 목표치를 제시함)
- 두 번째 지표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비율의 경우 역시 지역별로 적정할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도와 노력 정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소관기관의 관심도 영역에서는 총 10점 만점에 평균 5.1점 (표준편차=4.2), 최대 10점, 최소 0점 그리고 중위값 7점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남

○ 본 영역은 광역자치단체가 노숙인 관련 지원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 분석 결과 세종 (10점) 대전 (10점), 대구 (9점), 서울 (8점), 경기 (9점), 강원 (8점), 경남 (9점), 제주 (8점), 전남 (7점), 부산 (6점)으로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에 본 광역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거나 혹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그 외 지역이 경우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을 때,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그 체계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노력 정도가 부족하여 관심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우수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의 성과지표 중 공통지표를 제외한 자율지표를 제출한 자치단체와 자율지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표 5-8〉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부산	지원계획수립	실적/목표*100	계획수립 및 시행
대구	여성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지원	연말기준 여성입소자수	노숙인시설통계
광주	노숙인 상담건수		
대전	여성노숙인 보호건수	일시보호센터 보호인원	일시보호센터 운영일지
경기	여성노숙인 시설 보호 비율	-	노숙인 통계
충남	노숙인시설 유형별 상담 입소	-	노숙인시설 업무자료
제주	시설노숙인 수 감소	전년(153명) 대비 2% 감	실적보고서/노숙인재활시설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과제에 있어 총 7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지표를 제출함

○ 이 중 3개의 자치단체의 경우 종합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노력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자율지표로 구성함

-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여성노숙인 자활시설 입소 지원을 대전은 여성노숙인 보호건수를 경기의 경우 여성노숙인 보호 비율을 주요 자율지표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부산의 경우 지원계획수립을 자율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광주의 경우 노숙인 상담건수를 충남의 경우도 유형별 상담 건수를 마지막으로 제주의 경우 시

설보호 노숙인 수 감소를 주요 자율지표로 구성함

○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지표를 구성할 때 자율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노숙인 상담건수는 그 상담의 내용이 본 과제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와 관련한 상담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시설보호를 체계화 하는 것은 노숙인 수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며 노숙인들의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숙인 수 감소가 효과적인 자율지표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자율지표 구성에 있어 공통지표가 담아내지 못하는 과제와 관련한 지표를 중심으로 적절성을 평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정도를 살펴봄

- 첫 번째 공통지표인 노숙인 시설 유형별 시설입소지원의 경우 100% 미만인 광역자치단체가 3군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200%의 달성도를 보여준 광역자치단체는 총 14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 달성도가 비교적 낮은 100% 미만 그룹 안에서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에서 86%까지 달성도가 분포되어 있어 동일한 달성도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또한 달성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도 성과지표 목표치가 낮아 목표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은 지역에 비교하였을 때 달성도가 높은 경우도 있어 절대적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 성과지표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절성 그리고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5-9〉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노숙인 시설 유형별 시설입소 지원	100% 미만	3
	100% 이상 200% 미만	14
	200% 이상	0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 비율	100% 미만	3
	100% 이상 200% 미만	14
	200% 이상	0

□ 노숙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편성은 안정적인 사업구성을 위해 중요함.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 과제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분석 결과 예산집행으로 진행한 광역자치단체가 13개로 나타났으며 비예산인 경우가 4개로 나타남
- 예산편성을 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금액이 매우 적거나 그 구성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특성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노숙인 사업을 비예산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의지는 예산편성이 기반이 되어야 함
- 비예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비예산의 광역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예산구성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5-10〉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예산집행 13
	비예산으로 진행 4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과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2017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2016년도 사업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2016년도와 2017년도 지속적으로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사업 평가 결과, 보통의 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6년도 10개 광역자치단체, 2017년도 9개 광역자치단체)
- 매우 우수 등급은 2016년도 1개 지역 (대전)이었으나 2017년 경남이 새롭게 매우 우수등급을 받아 대전과 경남 총 두 광역자치단체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해 미흡등급을 평가받은 부산 및 서울의 경우 부산은 보통등급으로 서울은 우수 등급으로 상향됨
- 올 해 미흡 등급은 울산 한 군데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해 우수였던 인천, 전북은 2017년 보통 등급으로 하향됨
- 2016년 보통 등급이었던 대구, 전남, 제주의 경우 2017년 우수등급을 평가받아 노숙인 시설체계에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표 5-11〉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세부과제명	2017년 평가 등급(점수)				2016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대전, 경남	서울, 대구, 전남, 경기, 제주	인천, 전북, 세종, 강원, 부산, 광주, 충북, 충남, 경북	울산	대전	인천, 경기, 경남, 전북	경북, 광주, 충북, 대구, 전남, 충남, 강원, 제주, 울산, 세종	부산, 서울

주: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 본 평가는 매 년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매 해 등급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

- 각 광역자치단체는 2017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를 위한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특히 보통, 혹은 미흡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됨

제3절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2-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국토교통부·광역자치단체
-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강화	광역자치단체
-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대	국토교통부·광역자치단체
- 여성, 만성적 거리노숙인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우선지원	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은 그 사업의 방향과 배경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서 그 근거를 살펴볼 수 있음

○ 주거는 노숙인의 자립과 노숙탈피를 돕는 데 있어 결정적인 서비스이며 노숙으로의 유입과도 관련 있는 중요한 요인임

○ 그러나 현재 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주거 공급은 다양한 노숙인 서비스 체계 속에서도 취약한 영역 중 하나로 파악됨

- 국토교통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대상 주거지원사업 물량 자체가 매우 부족함
- 노숙인은 이 주거공급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취약한 특성이 있음
- 노숙인은 주거지원사업에 있어 주요 사각지대로서 존재함

□ 주거는 개인의 자립생활의 주요 조건이 될 수 있으며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개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음

○ 기존의 거리노숙인의 임시보호에 머물렀던 노숙인 지원서비스의 초점이 전환된 필요가 있음 (서종균 외, 2012)

○ 그 초점은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상황에 처한 대상의 경우 노숙을 벗어날 수 있

도록 돕는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음

□ 이러한 주거공급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임시주거비지원이나 임대주택지원사업 등의 주거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왔으나 한계점들을 보여줌

○ 전체적으로 수량이 매우 부족하고 지원시기도 장기적이지 못하여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매우 짧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지원이 이루어져 노숙의 재경험의 가능성을 높임
- 결국 물량공급의 부족이 노숙인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현황을 통해 알 수 있음

○ 노숙인 대상적 특성에 있어서도 주거공급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음

-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만성적 노숙인의 경우 더욱 더 서비스에서 소외가 되고 있음
- 현재 주거서비스는 자활의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자활의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날 수 있는 대상들은 주거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짐

□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2016년 노숙인 종합계획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제시된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 보호 강화
-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확대
- 여성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우선지원

○ 관련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사업개요를 바탕으로 2016년 노숙인 종합계획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역할에 따라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본 평가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국토교통부의 경우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 있어 주요 중앙부처로서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시행의 책임이 있음
- 2017년도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총 100점 중 35점으로 다소 저조한 평가 결과를 보여줌
- 각 평가 영역별 평가 결과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은 총 30점 만점에 15점으로 나타났음
- 종합계획의 세부과제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시설 보호 부분은 보건복지부 담당으로 볼 수 있으나, 종합계획 중 취약 노숙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한 사업 의지나 내용이 부족함
 - 종합계획의 이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2017년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보완자료에서 후에 추가적으로 사업목적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평가를 위해서는 목적 제시가 필수임
 - 보완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업목적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로 제시함
 - 본 목적이 노숙인에게 초점을 맞춘 주거지원사업 강화라는 사업 방향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사업 체계에서의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민간 단체 등의 역할 분담과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는데 후에 추가자료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체계를 제시함

○ 현재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부족함이 발견됨

- 사업 체계는 세부사업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사업 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함
- 사업의 순서와 과정 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영역에서는 총 30점 만점에 18점을 평가받았으며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사업성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영역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급실적을 성과지표로 제시하였는데 목표치는 60호, 실제 실적은 93호(보완자료에서 실제 실적 자료가 추가됨)로 목표 달성도는 매우 높으나 목표치가 2016년 대비 감소한 형태로 제시되어 물량 확대라는 사업의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표 5-12〉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3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음.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0	종합계획 과제에 따라 적절한 사업목적을 구성하여야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4	사업 내용은 주거지원사업에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나 물량확대라는 종합계획과제와는 달리 물량이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줌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8	추진체계는 비교적 매우 구체적임. 특히 주거 유형에 따라 추진체계를 별도로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추진과정을 제시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민간 단체와의 역할 분담이나 관계 등이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음. 이는 주거공급의 전달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0	본 영역이 가장 취약한 부분임. 사업체제는 있으나 이 사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따라서 그 과정의 구체성 또한 평가하기 어려움. 모니터링과 같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역시 보완되어야 함.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0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0	
3. 시행결과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5점)	0	국토교통부가 본 영역에서 달성한 대표적인 사업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7	성과지표는 목표 60호 대비 실적 63호로 달성도는 100%이상이나 그 목표가 작년 실적 115호에 미치지 못하는 60건으로 제시되어 물량확대라는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③ 목표달성률(10점)	7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달성도는 100% 이상이나 지표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예산집행 실적(5점)	4	예산의 경우 현재 기금을 토대로 운영 중임. 주거 서비스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일반예산과 같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입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2	국토교통부의 경우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임. 사업의 체계는 있으나 이를 개선하거나 확대하려는 노력은 비교적 적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총 점		35	

□ 국토교통부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올 해 미흡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평가 결과 등급은 상향되었으나 상향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노숙인 주거서비스강화에 대한 중앙부처로서 종합계획의 방향과 종합계획에서 이루고자하는 목표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함

○ 특히 종합계획에서 강조하는 주거서비스 물량확대 뿐 아니라 취약계층 노숙인에 대한 주거공급 및 주거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노숙인에 대한 주거공급이나 주거서비스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주택공급노력을 강화하고 가이드를 제공하는 중앙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노숙인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노력에 대해 전국 17개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노력은 평가 결과 총 100점 만점 중 평균 49점 (표준편차 22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96점, 최소값은 25점, 그리고 중위값은 45점으로 나타남
- 최대값 96점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이었으며 25점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충북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노숙인 주거사업에 대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한 사업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숙인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주거지원사업의 방향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 사업목적이나 내용, 운영체계가 일관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서울의 사업목적은 “시설보호가 어려운 거리노숙인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시설에 거주하면서 자립준비를 갖춘 노숙인은 공공 임대주택 등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며 재노숙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를 적극 시행함”으로 매우 구체적인 형태를 보임
 - 세부사업은 사업목적의 방향에 맞게 주택제공의 노력, 사례관리의 노력 뿐 아니라 취약계층 (정신질환 여성 및 알콜중독 남성노숙인)에 대한 세부사업을 운영 중임
- 비교적 저조한 평가를 받은 충북의 경우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관심도나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며 종합계획의 방향이나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목적 마련과 사업내용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비슷한 한계점이 비교적 저조한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충남, 세종, 인천, 울산)에서 나타남

-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의 자원파악이나 제도 이해가 부족하며 광역자치단체 자체적인 주거자원발굴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노력은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및 LH에서 추진하는 주거사업에 대한 이해와 광역자치단체의 주거자원에 대한 이해 및 발굴 노력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 내 노숙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연계는 현존하는 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로부터 시작함
 - 특히 국토교통부 또는 LH에서 진행하는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원 연계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민해야 함
 - 이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자체적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과 자원 발굴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영역별로 평가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평가 첫 번째 영역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보면 전체 30점 만점에서 평균 17.4점 (표준편차 =6.5)이며 최대값 30점, 최소값 9점, 중위점수 16점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 영역인 시행과정의 적정성 영역은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으로 나타남
 - 총 30점 만점에 9.8점의 평균값 (표준편차 = 9.0)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값 30점 최소값 0점, 중위점수 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결과를 보여줌
 - 특히 추진과정의 구체성이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원사업에 있어 사업운영의 구체화와 체계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다음으로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를 보면 총 30점 만점에 평균 17.7점 (표준편차 = 6.2), 최대값 30점, 최소값 11점, 중위값 17점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성과달성도는 높게 나타나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발견됨
- 공통지표인 노숙인 주거지원 인원수의 경우 측정산식을 기준 (임시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지원주택)으로 산출하지 않고 시설입소 등의 성과를 더해 결과로 제시한 광역자치단체가 있어 성과 달성도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산식 및 자료수집방법, 목표 설정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소관기관의 관심도는 총 10점 만점에 평균 4.1 (표준편차 3.4), 최대값 10점, 최소값 0점, 중위값 4점인 것으로 나타남⁸

〈표 5-13〉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00	49.0	96.0	25.0	45.0	22.0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7.4	30.0	9.0	16.0	6.5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3.4	5.0	2.0	4.0	0.9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5.3	10.0	0.0	5.0	2.7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6	5.0	0.0	4.0	1.5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5.1	10.0	2.0	5.0	2.6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9.8	30.0	0.0	7.0	9.0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3.7	10.0	0.0	3.0	3.0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2.8	10.0	0.0	2.0	2.8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3.3	10.0	0.0	3.0	3.6
3.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30	17.7	30.0	11.0	17.0	6.2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2	5.0	0.0	3.0	1.4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4.5	10.0	2.0	4.0	2.5
③ 목표달성률	10	6.9	10.0	2.0	7.0	2.1
④ 예산집행 실적	5	2.8	4.0	0.0	4.0	1.9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4.1	10.0	0.0	4.0	3.4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4.1	10.0	0.0	4.0	3.4

□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의 경우 공통지표는 1개로 그 내용은 노숙인 주거지원인원 수를 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자율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사업에서 자율지표를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는 총 9개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두 개의 자율지표를 제시하였으며 그 외 8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하나씩의 자율지표를 구성하여 제시함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비를 보조하거나 긴급주거지원과 관련한 자율지표가 발견되며 주거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한 자율지표를 제시한 경우도 있었으며 주택공급 수 혹은 신규입주자 수를 고려한 자율지표도 발견되었으며 주거지원 후 자립지원을 돕는 활동을 자율지표로 제시하기도 함
- 자율지표구성은 사업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자율지표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제주의 경우 노숙인 일시보호 건수를 제시하였는데, 일시보호건수가 적절한 자율지표인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제주의 경우 공통지표의 실적이 매우 낮아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제시한 자율지표 역시 제주의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음
 - 충남의 경우 타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여성 및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 노숙인 주거비 우선지원이라는 자율지표를 구성함
 - 종합계획에서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강화의 방향에 적절한 자율지표라고 볼 수 있음

〈표 5-14〉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서울	임시주거지원자 자립지원	임시주거지원 대상자 수급신청인원+일자리제공인원	사례관리사업 지원실적 보고
부산	주거지원 참여기관	실적/목표×100	기관실적보고
대구	지원주택공급수	지원주택 공급 수	자체 통계
대전	주거비 일부보조	주거비 일부 보조 지원인원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 일지
경기	매입임대주택 등 신규입주자 수	-	노숙인 통계
충남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 노숙인 주거비 우선지원	-	노숙인시설 업무자료
	노숙인 주거비지원 및 민간 연계	-	노숙인시설 업무자료
전남	[명칭 생략]	지원자 수	관련문서
경북	노숙인긴급주거지원(가설건축물)		노숙인예산지원
제주	노숙인 일시보호 건수	노숙인재활시설 연간 일시보호 건수	실적보고서/노숙인재활시설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본 과제의 공통지표인 노숙인 주거지원 인원수에 대한 각 광역자치단체별 성과달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과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역은 총 3개로 나타났으며 100%~200%의 달성도를 보여준 광역자치단체는 11개, 그리고 2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여준 지역도 3개 지역으로 나타남
- 공통지표의 경우 지표값을 산출하기 위한 산식 (임시주거비지원+공공임대주택+지원주택)에 따라 지표값을 산출하여야함에도 몇몇의 지역의 경우 산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시설입소 등과 같은 추가적 지표의 값을 더해 지표를 구성하여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 특히 2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여준 지역 중 서울 및 부산의 경우 지표값을 적

절하게 산출한 것으로 보이거나 세종의 경우 시설입소 지표를 더해 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달성도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지표값에 대해 별도로 산식을 구성하여 값을 산출한 경우도 문제이지만 측정 산식을 제시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도 발견되어 향후 평가에 있어서는 지표구성의 적절성과 근거를 평가하기 위한 설명 및 자료 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달성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 측정산식을 당해 연도 입소인원으로 제시하여 입소인원이 시설입소 노숙인 수라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지표구성인 것으로 보이며 달성도 또한 낮음
- 제주의 경우 유일하게 달성도가 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배경과 이유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향후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5-15〉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노숙인 주거지원 인원수	100% 미만	3
	100% 이상 200% 미만	11
	200% 이상	3

□ 다음으로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집행 노력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고자 함

- 분석 결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광역자치단체는 13개였으며 비예산으로 진행한 광역자치단체는 총 4개 지역으로 나타남
 - 작년 2016년도 평가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 비예산 운영 뿐 아니라 적절한 예산액과 안정된 예산의 편성에 대한 노력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요구됨
- 지역에 따라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예산의 금액이 차이가 나며 그 구성

역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예산편성은 그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서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함

〈표 5-16〉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예산집행	13
	비예산으로 진행	4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2017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2016년도 사업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2016년도와 2017년도 지속적으로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사업 평가 결과, 보통의 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6년도 9개 광역자치단체, 2017년도 10개 광역자치단체)
- 매우 우수 등급은 2016년도 2 광역자치단체, 2017년도에는 3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해당되었는데 서울과 대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의 경우 2016년도 미흡 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 매우 우수 등급으로 상향되어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대구의 경우 2016년도 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2017년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노숙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사업 체계 마련의 기틀을 마련하여 2017년도 매우우수 등급을 평가 받음
- 등급 평가 결과에 있어 2016년도와 2017년도에서 차이가 발견됨
 - 경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인천과 세종은 2017년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경남, 경북의 경우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향되어 노숙인 주거지원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다소 등급

차이가 관찰됨

○ 본 평가는 매 년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광역자치단체의 등급 변화는 지속적으로 추적 평가될 것으로 예상됨

- 각 광역자치단체는 2017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통, 혹은 미흡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됨

〈표 5-17〉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세부과제명	2017년 평가 등급(점수)				2016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노숙인 주거지원사 업 강화	서울, 대전, 대구	경남, 경기, 경북	부산, 전남, 제주, 세종, 충남, 인천, 전북, 강원, 울산, 광주	충북	서울, 대전	인천, 경기, 세종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충남, 제주, 울산, 충북, 강원	부산, 전북, 대구

주: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제4절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2-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의 향상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현장진료소 운영 확대	광역자치단체
-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의료이용 현실

- 2017년 12월말 현재 260개의 노숙인 진료시설이 지정되었음. 일단 1차 진료 기관(210개)과 2차 진료기관(50개)으로 역할이 나뉘어 일종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지역에 따라서 2차 진료기관이 없는 경우(광주광역시)도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에 대해서만 소수의 기관으로 별도의 진료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노숙인 의료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임.
- 또한 여전히 시설입소자가 아닌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요건도 까다로워서 그들이 적기에 의료적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음. 게다가 거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진료소 또한 충분치 않아 사각지역 노숙인들의 기초적인 의료접근성은 특히 매우 취약한 상황임.

□ 노숙인 건강실태

- 2016년도 조사결과(이태진 외, 2017)에 따르면 노숙인 등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하여 보건학적으로 훨씬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일반인구집단보다 대략 10% 정도는 낮고, 만성질환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대사성질환들(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경우도 젊

은 나이에서부터 시작하여 10세 증가함에 따라서 약 10%씩 그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질병부담이 큰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경우도 ‘쪽방’에서 그리고 ‘70세 이상’에서 높게 확인되고 있는 등, 질환이나 노숙유형 또는 연령군에 따라서 보다 섬세한 선제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 2016년도에는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등에 대한 기술은 있었으나 광역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언급정도만 있었고, 사업추진실적 부분에서도 일부 추진체계, 과정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았음.
- 반면에 2017년도에는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수립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은 비교적 잘 확인되었으나 구체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였음.

□ 시행과정의 적정성

- 2016년도에는 ‘노숙인 의료급여 진료시설’ 운영 개수(252개)만 기술하였을 뿐이어서 시행과정을 알 수 없었고, 광역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수행한 결과가 없었음.
- 반면에 2017년도에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하였음. 그러나 구체성은 역시 부족하였고, 모니터링도 이루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 2016년도에는 주요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 반면에 2017년도에는 주요사업성과도 제시되었고, 성과지표가 포괄적이고 적정하였으며, 실제로 달성한 목표달성률도 충분히 높았음. 다만 소요예산이 없이

사업이 수행되었다는 부분이 사업성과의 신뢰성을 다소 떨어뜨렸다고 생각됨.

□ 소관기관의 관심도

○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 등이 사실상 충분히 잘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5-18〉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5	종합계획과제가 2017년 시행계획서와 일치함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7	논리적 인과관계는 뚜렷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4	연계성은 높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7	적절성, 명확성, 합리성은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7	연관성, 적극성은 반영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3	적시성, 체계성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구체성이 부족함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0	모니터링이 없었음
3. 시행결과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5점)	3	주요사업성과가 제시되었으나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7	성과지표가 포괄적이고 적정하며 신뢰성이 있음
	③ 목표달성률(10점)	9	목표(254개소)보다 높은수준(260개소) 지정을 달성함
	④ 예산집행 실적(5점)	0	소요예산이 없었음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4	일단 목표달성도가 80%를 넘었으나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은 잘 보이지 않음
총 점		56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영역에서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는 42.8점(100점 만점)으로서 다소 미흡한 수준임. 물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80점으로서 우수한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중위수가 36.0점으로서 주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 광역자치단체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평가점수가 높은 영역 순으로 보면,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가 평균 16.4점(30점 만점),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이 평균 12.6점(30점 만점), ‘소관기관의 관심도’가 평균 3.6점(10점 만점), ‘시행과정의 적정성’이 평균 10.1점(30점 만점)이었음.

〈표 5-19〉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점수: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00	42.8	80.0	15.0	36.0	21.2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2.6	29.0	5.0	10.0	6.5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0.9	5.0	0.0	0.0	2.0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3.4	10.0	0.0	3.0	2.6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2	5.0	2.0	2.0	1.4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5.2	10.0	2.0	3.0	3.0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0.1	23.0	0.0	9.0	6.6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4.2	9.0	0.0	3.0	2.5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3.4	7.0	0.0	3.0	1.9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2.5	9.0	0.0	3.0	2.9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16.4	28.0	0.0	15.0	8.8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1	5.0	0.0	3.0	1.6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4.8	9.0	0.0	5.0	3.2
③ 목표달성률	10	6.4	9.0	0.0	7.0	3.2
④ 예산집행 실적	5	2.2	5.0	0.0	4.0	2.1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3.6	9.0	0.0	4.0	2.4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3.6	9.0	0.0	4.0	2.4

□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현황

- 공통지표인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연계관리’와 ‘위기관리(알콜중독자 포함) 개입’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광역자치단체들이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한 지표(자율성과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 그 중에서 독특한 지표들이라면 서울의 ‘결핵검진 실적, 독감예방 실적’이나, 대전과 세종의 ‘건강검진 노숙인 수 / 건강검진 지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 그 외 대부분은 공통지표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표들이었음.
- 문제는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율지표들의 ‘측정산식(측정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그들의 주무부서를 대상으로 보건사업기획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5-20〉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서울	결핵검진 실적	목표 대비 검진건수	수행기관 제출
	독감예방 실적	목표 대비 예방건수	수행기관 제출
부산	무료진료 월 인원수	실적/목표 x 100	기관실적 보고
광주	노숙인 신규 입원자 수	없음	없음
대전	건강검진 노숙인 수	건강검진 인원	건강검진 명부
세종	건강검진 지원	시설입소자 건강검진지원 인원수	노숙인시설 통계/시청
충북	노숙인시설과 지정병원간 협약	없음	협약서
	찾아가는 의료상담진료소 운영	없음	의료기록지
	노숙인 정신 알콜치료 프로그램 연계	없음	노숙인 연계현황
충남	신규의료급여 책정	없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
전남	비급여 노숙인 의료지원 연계 수	비급여 노숙인 의료지원 연계 수	노숙인시설 업무자료
경남	무료진료소 지정	당해연도 지정개소	결과보고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제주	의료비지원 노숙인 수	의료비지원 노숙인 수	실적보고서/노숙인재활 시설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통지표인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연계관리’와 ‘위기관리(알콜중독자 포함) 개입’에 대하여 그 달성정도를 평가한 결과, ‘100% 미만’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수가 각각 6개(35.3%), 7개(41.2%)로 파악되었음.
- 게다가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목표수준도 매우 낮게 잡음으로써 달성률이 쉽게 100%를 넘는 경우들이 많았음에도 2016년도(17개 중에서 2곳만 100% 미만)보다도 더 낮은 이런 성과를 보인 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됨.
- 또한 여전히 ‘산출(output)지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능한 한 ‘결과(outcome)지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5-21〉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연계관리	100% 미만	6
	100% 이상 200% 미만	10
	200% 이상	1
위기관리(알콜중독자 포함) 개입	100% 미만	7
	100% 이상 200% 미만	9
	200% 이상	1

주 1) 울산의 경우는, ‘위기관리(알콜중독자 포함) 개입’ 항목에서 목표는 없었으나 실적은 4명으로 제시되었음. 이 경우는 ‘100% 미만’의 달성률에 포함시킴.

2) 전남의 경우는, 두 항목 모두에서 목표는 있었으나 실적은 제시되지 않았음.

3)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연계관리’와 ‘위기관리(알콜중독자 포함) 개입’의 두 항목 모두에서 목표와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던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충북이었음.

4) ‘위기관리(알콜중독자 포함) 개입’의 한 항목에서 목표와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던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전북, 경남이었음.

□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 2016년도에는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한 지자체가 7곳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3곳이 추가되어 10곳으로 늘었음.
- 그러나 여전히 7곳의 광역자치단체들은 ‘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임. 이는 2016년도 결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없이 사업을 했다면 이는 해당지역의 민간 시설과 기관들이 애써 수행한 그들의 자체사업들을 마치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한 것처럼 위장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5-22〉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예산집행	10
	비예산으로 진행	7

주: ‘비예산으로 진행’된 7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이었음.

□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평가결과

- 2016년도에는 ‘매우우수(100점~76점)’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인천과 대전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서울과 대구로 바뀌었음. 주목할 부분은 1년 사이에 대구가 ‘보통’에서 ‘매우우수’로 두 단계나 상승한 부분인데 이렇게 상승한 동인을 파악·전파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주무부서(및 노숙인 시설 등)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매우우수’ 했던 인천과 대전이 ‘우수(75점~51점)’ 영역으로 한 단계 떨어진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이 역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6년도에 ‘미흡(25~0점)’에 속해있었던 울산과 경남의 경우는 2017년도에

한 단계 올라서 ‘보통(50점~26점)’ 영역에 포함되었으나, 반면에 충남, 충북, 광주,의 경우는 한 단계 떨어져서 ‘미흡’영역에 포함되게 되었음. 사실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점수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졌었다고 본다면 2017년도의 평가결과가 현실을 보다 더 잘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그렇다면 해당 3개 광역자치단체들의 노숙인 지원노력을 제고할 방안 에 대하여 모두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봄.

〈표 5-23〉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세부과제명	2017년 평가 등급(점수)				2016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서울, 대구	대전, 제주, 인천	부산, 경기, 전북,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전남, 울산	충남, 충북, 광주	인천, 대전	서울, 경기, 제주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북, 부산, 충남, 전남, 세종, 경북	울산, 경남

주: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제5절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2-⑤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고용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
- 근로능력이 약한 인원에 대한 '공공 일자리' 제공 활성화	광역자치단체

□ 노숙의 발생요인 중 고용은 임금과 연결되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은 노숙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직은 노숙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임

○ 따라서 노숙인의 탈빈곤 및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가 전제적으로 필요하며 모든 노숙인은 근로능력과 의지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중요함

□ 고용지원서비스를 접근성 및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노숙인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숙인 복지시설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보건복지부a, 2013)

○ 특히 노숙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시설별 노숙인에게 취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근로능력이 약한 노숙인에게는 공공일자리 등 적합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함

○ 고용확대는 노숙인의 생계안정 뿐만 아니라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노숙 장기화 예방 및 탈노숙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임

- 노숙인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에 따라「제 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의 분야에서는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하였음
-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노숙인 고용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를 위한 과제를 시행해야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근로능력이 약한 인원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활성화해야함
- 노숙인의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각 시설별 고용업무를 설정하고 아웃리치나 취업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지원하며 고용 알선된 노숙인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해야함
- 모든 노숙인시설이 고용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지원 수준의 설정이 필요함
 - 시설별 업무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고용업무는 공통고용업무와 더불어 주류 고용프로그램으로의 연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지방고용청의 연계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고용촉진서비스 등 노숙인이 주류고용지원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과의 연동으로 상시적인 일자리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회적 기업 등과의 연계 등도 수행하여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고용업무는 각 시설 즉, 노숙인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연계를 받거나 고용획득을 위해 직접 내방한 인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노숙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류 고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연계를 위한 상담을 진행을 하며, 프로

그럼 참여를 위한 신청 등의 행정적 업무를 관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노숙인 시설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와 상담을 전담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야 함

- 2016년 고용지원 강화의 시행 계획 및 실적은 앞의 주요 고용지원의 세부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공공일자리 지원, 민간협업을 통한 민간일자리 발굴 등의 과제로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였음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본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사업을 검토하여 평가함
- 전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경우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총점을 획득하여 비교적 효과적으로 노숙인 고용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세부적인 평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함
 -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업의 내용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노숙인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의 확대와 고용노동부 역할의 강화가 요구됨
 - 또한 노숙인의 고용은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분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의 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 전달체계 마련이 요구됨
 - 2017년도 사업에서는 사업 내용이 '노숙인 취업상담, 알선 및 사후관리'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역할의 담당과 다양한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의 역할 및 위치는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노숙인 고용지원 사업에서는 지방고용센터의 역할만 제시되어 있을 뿐 다양한 노숙인 단체들과 어떠한 역할을 배분할 것

인지에 대한 사업체계가 제시되지 않음

- 현재 고용노동부는 민간기관 및 지방고용센터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데 적극적인 제도 마련, 사업의 체계적 확대, 직업의 발굴 등을 통해 노숙인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제출한 보완자료에서는 현재 노숙인 취업지원 민간기관에 대한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함
 -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성과에 있어 2017년도 목표를 상용 432건, 일용 798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고용안정정보망에 등록된 취업건수로 산정하였음

- 실제 실적은 상용 327건, 일용 989건으로 나타남
- 작년 지표 실적 (상용 460건, 일용 898건)에 비해 상용의 경우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용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상용 및 일용의 증감의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후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구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표 5-24〉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3	종합계획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약한 인원에 대한 고용지원강화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종합계획의 전체적인 과제 내용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함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4	사업목적을 제시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목적 제시가 필요함. 종합계획의 세부과제의 배경과 그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3	노숙인 고용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취업상담의 내용이나 직업 알선 및 사후관리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5	노숙인 고용 사업은 다양한 민간기관과 고용센터 등이 얹혀있는 전달체계로 구성됨. 또한 각각의 역할과 사업의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이를 추가적으로 체계 안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	추진과정에 있어 시계열적인 제시 노력이 있었으며 사업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평가됨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8	사업의 추진과정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편임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8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결과 및 후속조치가 동일하여 모니터링의 효과성 부분에서 평가가 어려움. 또한 모니터링을 현장지도점 검 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과정의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 성과가 지원 정도에서 기술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적극적 취업처 발굴, 취업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숙인 노동력 강화에 개입하기 위한 사업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3.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5점)	4	공통지표를 신뢰있는 자료로 실적을 계산하여 제시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8	목표 달성은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임
	③ 목표달성률(10점)	9	현재 본 사업의 예산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일반회계 등의 안정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④ 예산집행 실적(5점)	4	고용노동부의 경우 노숙인 고용지원강화를 실제 취업 및 일자리 연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 비교적 체계가 잡혀 있으며 사업 관리에 있어서도 우수성이 평가됨. 그러나 사업 내용 전반에서 고용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나 세부사업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근로능력이 부족한 대상들에 대한 공공 일자리 관련 사업의 확대 등의 노력이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종합계획에서 노숙인의 근로지원강화를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연계 강화, 그리고 근로능력이 약한 노숙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 활성화 등이 주요 세부과제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위한 세부 사업의 마련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7	
총 점		71	

□ 지난 2016년도 고용노동부는 본 사업의 영역에서 보통의 등급을 평가받음

□ 올 해 2017년도의 경우 우수 등급으로 분류되어 향상된 사업 체계를 보여줌

○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시한 사업 자체의 체계는 적절하나 사업 구성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성을 평가하기에도 사업 내용이나 그 체계가 다소 부족한 면이 발견됨

- 추진상 애로사항은 작년과 동일하게 취업의지 향상 및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을 제시함
- 2016년 평가에 동일한 애로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와 관련한 사업 구성이나 별도의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개선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와 관련한 2017년도 사업 평가를 실시함
-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49.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8.6점임
- 최대값은 89점이었으며 최소값은 20점이며 중위값은 44.0점으로 지역 간에 차이가 발견됨
- 최고점, 89점을 받은 지역은 대전으로 대전의 경우 전 영역에 걸쳐 사업운영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 영역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함
 - 대전의 경우 노숙인 고용지원 사업에 있어 우수함이 사업 계획 및 관리 전 영역에서 평가됨
 - 고용지원의 필요성과 노숙인의 욕구 등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종합계획의 과제 내용을 토대로 지역의 사업목적을 마련하였으며 추진배경을 통해 노숙인 고용 사업의 방향과 지역의 특성을 제시함
 - 주요 사업으로 4가지의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고용 사업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이해가 높

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추진과정은 사업별로 제시하였으며 모니터링 역시 광역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 두 주체의 역할과 활동내용을 제시함
- 노숙인의 심리상태불안정으로 인한 공공일자리 연계의 어려움을 현재 노숙인 고용지원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제시함
 - 이는 노숙인 고용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 노숙인의 경우 단순연계가 아닌 심리지원 또는 자립의지 고취 등과 같은 사전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하기도 함
 - 현재 고용지원은 고용 알선 및 정보제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는 노숙인들의 심리상태나 취업의지가 적절하다는 전제 하에 계획된 사업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노숙인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함

○ 최저점 20점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노숙인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체계적 사업 마련 및 운영이 요구됨

○ 50점을 기준으로 미달지역을 살펴보면 광주 외 울산 (27점), 강원 (44점), 충북 (37점), 충남 (43점), 전북 (43점), 전남 (35점), 경북 (42점)이 비교적 노숙인 고용지원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점수가 낮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사업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의 모호, 그리고 노숙인 고용지원에 대한 적극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업목적은 사업의 방향을 잡는 방향키와도 같으며 향후 사업체계 및 성과지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목적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노숙인 고용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적 자원이나 관련기관, 그리고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한 사업체계가 아닌 단순 보조금 교부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한정 짓는 경우가 많음

-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서도 공통지표 측정산식이 아닌 개별적 운용을 통해 실적이 증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발견됨
- 또한 지표 자료수집 방법이나 출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어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활용을 촉구함

〈표 5-25〉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00	49.3	89.0	20.0	44.0	18.6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7.5	28.5	9.0	17.0	5.5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3.9	5.0	2.0	4.0	0.8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5.5	10.0	0.0	5.0	3.1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5	5.0	0.0	3.0	1.3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4.6	9.0	1.0	5.0	2.1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8.9	25.0	0.0	6.0	7.4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3.1	10.0	0.0	3.0	2.9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2.3	7.0	0.0	2.0	2.3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3.5	9.0	0.0	3.0	3.4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18.1	26.0	9.0	17.0	5.3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3.2	5.0	0.0	3.0	1.7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5.2	8.0	2.0	5.0	1.6
③ 목표달성률	10	7.4	10.0	2.0	7.0	1.7
④ 예산집행 실적	5	2.4	5.0	0.0	4.0	2.1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4.8	10.0	0.0	5.0	3.0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4.8	10.0	0.0	5.0	3.0

□ 영역별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이 30점 만점에 가장 낮은 평균 8.9점을 기록한 시행과정 영역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영역은 서울 (23점), 대전 (25점), 경남 (18점), 부산 (12점), 제주 (15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1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성과달성도 영역은 평균 18.1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목표달성률 평가 영역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해석됨

□ 노숙인 고용지원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도는 평균 4.8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별로 공통지표 외 자율지표를 제시한 결과를 표로 정리함

○ 본 과제에서 공통지표는 노숙인 일자리 참여인원 수임

○ 이 외 광역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자율지표를 구성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총 8개의 지역이 자율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대구의 경우 공통지표 측정산식이 취업지원실적 + 정부지원일자리 실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자율지표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공통지표를 분리하여 각각의 실적을 제시한 것으로 엄밀한 기준에서 자율지표로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 자율지표의 경우 구체성이나 내용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 부산의 경우 노숙인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지표로 구성하였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이 어떠한 교육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지원과 관계있는 자율지표인지 평가가 어려움

- 광주 역시 신규입원자수를 제시하였는데 이 입원자수가 어떠한 기관 혹은 프로그램에 등록한 노숙인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부족하여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측정산식이나 자료수집이 모호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됨

○ 자율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사업을 다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

나 사업과제와 관련있고 신뢰성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5-26〉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서울	일자리박람회 개최	개최횟수	서울시 결과보고서
부산	노숙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	실적/목표*100	광역자활 위탁교육
대구	취업지원 실적	상용직+일용직 취업실적	센터통계
	정부지원 일자리 실적	정부지원 일자리 취업실적	센터통계
광주	노숙인 신규입원자 수	-	-
충북	노숙인 고용복지센터 연계	-	상담일지
충남	취업성공패키지 및 자활사업 참여자수	-	노숙인시설 업무자료
경남	지역 일자리 연계실적	당해연도 연계건수	결과보고
제주	자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노숙인 수	(목표인원/참여인원)*100	실적보고서/노숙인재활시설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다음으로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사업에 관련한 공통지표 달성도를 살펴보면 100% 미만의 낮은 달성도를 보여준 지역이 2 지역이었으며 100%에서 200%의 달성도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가 13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2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여준 경우도 2 곳이 나타남

○ 달성도가 낮은 (100% 미만) 지역은 광주와 전남으로 나타났는데, 광주의 경우 공통지표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아 달성도 평가가 어려웠으며 전남의 경우 2017년도 목표 5건에서 실적이 3건으로 나타나 낮은 달성도를 보여줌

- 달성도 자체 뿐 아니라 전남의 경우 목표치 5건이 적절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됨

□ 달성도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목표치와 실적의 수준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많기 때문임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대대적으로 요구됨

- 예를 들어 충북의 경우 200%가 넘는 달성도를 보였으나 2017년 목표치가 5건으로 실적이 20건으로 나타나 높은 달성도가 가능했던 것이며 전남의 경우 목표치 5건, 경북의 경우 목표치 3건, 경남의 경우 1건, 제주 13건, 충남 10건 등으로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목표치는 현황과 욕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발전의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지역은 지나치게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도는 이루었으나 그 수치의 적절성에 있어 긍정적 평가가 어려움

〈표 5-27〉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노숙인 일자리 참여인원 수	100% 미만	2
	100% 이상 200% 미만	13
	200% 이상	2

□ 분석 결과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사업의 경우 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7 광역자치단체로 나타남

□ 예산편성을 진행한 광역자치단체는 10곳으로 나타났는데 비예산집행 비율이 비교적 높은 사업인 것으로 분석됨

- 노숙인 고용은 민간, 혹은 고용 서비스 기관에만 역할을 맡겨서는 확대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노숙인의 노동시장의 경쟁력이나 직업자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노숙인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용확대나 공공일자리 등과의 연계는 광역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책임인

식이 요구되는 영역임

- 노숙인고용지원 관련 센터 및 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예산편성은 필수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음

〈표 5-28〉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예산집행	10
	비예산으로 진행	7

-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영역에 있어 대전은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서울의 경우 작년에는 우수 등급이었으나 올 해 2017년도 평가에서는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도 평가에서 보통 등급이었던 대구와 제주, 경남의 경우 2017년 평가에서는 우수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2016년 우수 평가를 받은 인천의 경우 2017년 보통 등급으로 하향되었음
- 미흡 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2016년에는 강원이었으나 올 해 보통 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광주가 새롭게 미흡등급으로 하향되었음
- 광역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노숙인 고용지원의 수준과 질은 개선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표 5-29〉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세부과제명	2017년 평가 등급(점수)				2016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대전, 서울	대구, 제주, 경남, 경기	세종, 부산, 강원, 전북, 인천,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울산	광주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울산, 부산, 충북, 경남, 대구, 제주, 경북	강원

주: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제 6 장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제1절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제2절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제3절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6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제1절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3.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
3-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광역자치단체
- 자립지원금 지원 등 마련	광역자치단체
-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	광역자치단체

□ 노숙인의 탈노숙을 돕고 지역사회보호를 구축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강화되어야함.

□ 만성 노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리와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나 정작 탈노숙과 지역사회복귀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임.

○ 실제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이 탈노숙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회전문 현상을 보이면서 노숙인복지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노숙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함.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등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함. 또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 체계가 연결되어야함.

□ 먼저, 자립지원금 등의 마련을 위한 지원 안에는 신용 등의 법적 문제가 해소되어

취업 등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안정적 수단을 취할 수 있어야함.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를 마련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비가 필요함.

○ 경제적 문제로 노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용불량이나 채무 등의 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함. 이러한 신분상의 제약을 해소하고 일자리 등으로 연계 되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역사회재정착을 위한 기본 단계임.

○ 시설 입소 후 노숙인은 자활프로그램 등 일정한 일자리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때 발생한 소득을 저축함. 이것을 시설폐소시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시설에서는 노숙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 소득으로부터 얻어진 임금을 자립정착금으로 잘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함. 부족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 하여 시설폐소 시 자립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

□ 둘째, 시설 폐소 후, 지역사회에 새롭게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이러한 재정착 과정을 돕는 중요한 실천 방법이 사례관리임.

○ 지역사회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부족이 재노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재정착에 필요한 생활 정보, 예를 들면 주거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 및 단절된 관계 회복에 필요한 기술을 안내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음.

○ 노숙인복지시설 폐소 이후에 지역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실질적인 재정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 사례관리임.

○ 현재는 노숙인에게 자활의 집이나 임시주거지원 등을 통한 지원 외에는 지역사회재정착을 돕는 서비스가 미흡함. 지역사회재정착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는 사례관리 서비스는 그 중요성을 인식함

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실정임. 지역사회로의 복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주거, 고용, 의료, 복지 등의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류 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함.

- 특히나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가 마련되어 살아간다 해도 제대로 된 투약관리가 안되면서 재노숙 되는 경우가 빈번함. 따라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재노숙의 위험을 미연에 예방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사례관리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 사례관리는 노동집약적 서비스이므로 충분한 인력 제공이 곧 서비스 질과 직결됨. 그리고 그 인력이 노숙인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인력 충원과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노숙인의 재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됨.

2. 중앙부처 평가 결과

- 중앙부처에서는 본 과제를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음.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다음 표는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임. 100점 만점 기준에서 중간값(50점)에 미치지 못한 47.8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음. 최대는 81.0점이었고 중위값은 49.0점, 표준편차는 19.9점이었음.

〈표 6-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00	47.8	81.0	0.0	49.0	19.9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6.4	27.0	0.0	16.0	6.0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4.4	5.0	0.0	5.0	1.5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4.2	10.0	0.0	3.0	2.5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3	5.0	0.0	3.0	1.4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4.6	9.0	0.0	4.0	2.7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0.4	23.0	0.0	10.0	6.2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5.1	9.0	0.0	5.0	2.7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3.4	6.0	0.0	4.0	1.8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1.9	8.0	0.0	1.0	2.5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16.0	26.0	0.0	15.0	7.0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2.9	5.0	0.0	3.0	1.3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5.1	9.0	0.0	5.0	2.6
③ 목표달성률	10	6.9	10.0	0.0	7.0	3.0
④ 예산집행 실적	5	1.0	4.0	0.0	0.0	1.7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5.0	9.0	0.0	5.0	2.3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5.0	9.0	0.0	5.0	2.3

□ 평가부분에서 30점 배점을 받는 영역(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연차별 시행 계획의 적정성이었음(16.4점). 반면 시행 과정의 적정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10.4점). 그리고 소관기관의 관심도 즉, 본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서 5점을 받아, 중간값에 해당하였음.

□ 4가지 평가 기준 중 연차별 시행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평가 영역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은 4가지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종합계획 과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사업목적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구

체적인지, 사업 목적과 추진배경 및 사업 내용 사이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하고 세부사업 추진 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를 평가함.

- 연차별 시행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4가지 하위지표 중 만점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었는데, 5점 만점에서 4.4점(5점만점의 88% 수준)을 획득함. 그 다음으로 사업내용의 적합성이 5점 만점에서 3.3점(5점 만점의 66%수준)으로 뒤를 이었음.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하위 지표는 계획수립의 적합성으로 10점 만점에서 4.2점(10점 만점의 42% 수준)을 획득하였음. 그 다음으로 비슷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던 지표는 추진체계의 적절성으로, 10점 만점에서 4.6점(10점 만점의 46% 수준)이었음.
- 하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의 경우 17개 광역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5점 만점을 획득하였음. 즉,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이 ‘자립지원금 지원 등 마련’, 그리고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와 연계되어 있었음.
- 만점 기준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였던 계획수립의 적합성의 경우, 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이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음.
 - 서울의 경우, 사업목적을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내용(자립정착금 지원 등 마련,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과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신용회복, 저축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시설 퇴소 후 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을 위해 방문 사례관리 지원’으로 제시하였음.
 -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던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제시하였음.
 - 인천은 사업 목적을 ‘지역사회 재정착 강화를 통하여 노숙으로 환원 방지’라고 기술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내용과 연결된 사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음.

○ 사업내용의 적합성 지표와 관련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대구, 대전, 경기이었음.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였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이었음.

- 서울의 경우, 사업추진배경에 대하여 하나는 저축관리를 장려하여 자립을 돕고 있으나 신용회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축관리와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 입주한 노숙인이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여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 내용과의 적합성이 비교적 잘 드러남.
- 대구는 회전문 현상을 막기 위한 자립정착금 적립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자립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사례관리서비스의 중요성을 연관성있게 설명함.
- 대전은 노숙인이 지역사회로 퇴소하더라도 지역 내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재정착에 필요한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재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통합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추진배경과 주요사업내용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줌.
- 한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충남의 경우, 사업추진배경과 사업 내용 사이의 연관성 제시가 미흡하였음.

○ 추진체계의 적절성 역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는데,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용을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과 경기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던 광역자치단체는 세종과 충남이었음.

- 대전의 경우, 추진 체계를 설명할 때 자립하는 노숙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영역(정신질환, 중독, 고령, 경제적 근로능력)을 제시하고 이러한 지원 영역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기관을 지자체, 민간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로 수행해야하는 역할과 민관협력 방법을 제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추진체계를 설명하였음.
- 경기의 경우,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사업을 위한 주요 세부 사업으로 ‘노숙

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노숙인 신용회복지원’, ‘노숙인 인문학교육 대상자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를 제시하고 이들 사업의 추진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음.

-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던 세종은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제시하였음.
- 충남의 경우, 추진 주체를 노숙인 시설 한곳으로 지정하고, 추진 절차도 ‘시설 프로그램 사업 진행 → 사업 종료 시 평가’라고 간단하게 기술하여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나 구체적 추진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음.

□ 두 번째 평가영역인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크게 3가지 세부평가지표를 갖는데, 사업시행 절차가 얼마나 충실하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세부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추진과정이 적정한가,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정한가 등을 평가함.

○ 시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3가지 하위지표는 모두 10점 만점 기준을 가짐.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추진과정의 충실성이었는데, 10점 만점에서 5.1점을 획득함. 그 다음으로 추진과정의 구체성이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10점 만점에서 3.4점을 획득하였음.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하위 지표는 사업관리의 적정성으로 10점 만점에서 1.9점을 획득하였음.

○ 추진과정의 충실성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대전, 경기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이었음.

- 서울의 경우, 주요 사업을 ‘노숙인의 신용회복 관련 절차 이해, 노숙인 저축 관리 · 신용회복 등 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등으로 제시하여 이 사업들의 세부 진행 내용 및 방법(참석 인원, 저축금액 제시, 신용회복인원 수 제시, 사례관리의 구체적 활동 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대전의 경우,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하여 ‘동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 시설퇴소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자산형성사업 연계’ 등의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이 세부사업별로 추진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경기의 경우 앞서 제시하였듯이 ‘노숙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노숙인 신용회복지원’, ‘노숙인 인문학교육 대상자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에 대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운영 주체와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세종의 경우,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제시하였음.

○ 추진과정의 구체성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세종과 충남이었음.

- 대전은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부진행 내용과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사업추진 일정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기는 어려웠음.
- 한편 세종과 충남은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진행내용이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 사업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던 광역자치단체는 울산, 세종, 경기이었음.

- 대전의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하여 모니터링체계를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체계의 주체 범위와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반면 울산, 세종, 경기의 경우 모니터링체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미흡하였음.

□ 세 번째 평가영역인 시행과정의 성과달성도는 4가지 세부평가지표를 갖는데,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명확하며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성과지표가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측정방법 및 실적산출근거가 적정한지,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계획대비 예산 집행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에 대한 4가지 하위지표 중 만점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목표달성율이었는데, 10점 만점에서 6.9점(10점 만점의 69% 수준)을 획득함. 그 다음으로 사업성과 이행정도가 뒤를 이었는데, 5점 만점에서 2.9점(5점 만점에서 58% 수준),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절성이 10점 만점에서 5.1점(10점 만점의 51% 수준) 순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하위 지표는 예산집행실적으로 5점 만점에서 1점(5점 만점의 20% 수준)을 획득함.
- 사업성과 이행정도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대전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이었음.
 - 서울의 경우, 주요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사업의 참여자인 노숙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함. 예를 들어, 자립지원금 지원 등 마련 사업과 관련하여 저축관리 대상자와 저축관리금액, 신용회복된 노숙인 수와 파산면책금액을 제시하면서 효과를 보여주었음.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전담사례관리자 11명을 채용하고 방문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사례관리를 통하여 진행된 의료지원, 월세 체납 관리, 주택하자보수 신청 지원 등의 건수를 제시하면서 사업 효과를 보여주었음.
 - 대전의 경우,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을 위해 수행된 사업별로 수혜자입장에서 나타난 효과를 보여주려 노력하였음. 신용회복 교육을 받은 노숙인의 수, 저축관리를 지원받은 노숙인의 수를 보여주면서 사업 효과를 제시하였음. 사례관리 경우도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노숙인을 시설에서 퇴소한 노숙인, 주거지원 대상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거주 노숙인 등으로 세분하여,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사업 효과를 보여주었음.
 -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보고하였음.
-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적정성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

는 서울, 부산, 대구이었음.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이었음.

-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공통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성과지표 설정이 대체로 적절하였음.
- 반면, 광주는 공통성과지표를 따로 제시하는 대신 ‘노숙인 취업성공자수’를 선택지표로 제시하였다는 긍정성은 있으나, 측정산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였음.

□ 다음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공통지표 외에 개별적으로 제시하였던 자율지표를 보여줌.

□ 자율지표라고 제시하였지만 공통지표와 유사한 형태인 자율지표를 제외하면 크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음.

-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 대구에서는 자립정착금 지원 등 마련 사업을 위해 제시된 공통지표 외에 실제 자립정착금을 적립한 인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음.
- 노숙인의 취업 지원을 통한 재정착 노력을 자율성과지표로 제시하였던 광역자치단체도 대구, 광주, 충남이 있었음.
- 제주는 지역사회로 퇴소한 노숙인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지망을 결성하는 노력을 자율성과지표로 제시하였음.

〈표 6-2〉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서울	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방문상담건수	방문상담건수	수행기관실적보고
대구	자립정착금 적립 인원	보증금 의무 적립 인원 수	시설 통계
	취업자 사례관리 실적	사례관리 지원 실적	센터 통계
광주	노숙인 취업성공자수	-	노숙인시설 업무 자료
충남	시설 입소자 취업자수		노숙인시설 업무 자료
제주	시설 퇴소사 대상 모임 결성	(목표횟수/실적횟수)*100	실적보고서/노숙인재활시설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다음은 공통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목표달성을 제시한 수준을 보여줌.

□ 첫 번째 공통지표인 ‘노숙인 신용회복, 저축관리 등 지원 인원’에 대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0곳이었음(7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지 않았음). 이 중 9개 광역자치단체가 100%이상의 목표달성 정도를 보여주었음.

□ 두 번째 공통지표인 ‘노숙인 사례관리 인원’에 대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1곳이었음(6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지 않았음). 이 중 9개 광역자치단체가 100%이상의 목표달성 정도를 보여주었음.

〈표 6-3〉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노숙인 신용회복, 저축관리 등 지원 인원	100% 미만	1
	100% 이상 200% 미만	9
	200% 이상	0
노숙인 사례관리 인원	100% 미만	2
	100% 이상 200% 미만	9
	200% 이상	0

□ 다음은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예산현황을 정리한 것임.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비를 별도로 집행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대전, 경기이었음.

○ 집행예산의 범위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500만원에 이르렀음.

〈표 6-4〉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예산집행 여부	예산집행	4
	비예산으로 진행	13

□ 다음은 지역사회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평가에 대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것임.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보통 등급에 포함되었음. 등급별로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구간은 매우 우수 등급이었음.

○ 매우 우수 등급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가 2016년에는 없었으나 2017년에는 2개 광역자치단체(서울과 대전)가 포함되었음.

○ 우수 등급의 경우, 2016년과 동일하게 2017년도에도 5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었음.

○ 보통 등급의 경우, 2016년도에는 12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9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었음.

○ 미흡 등급의 경우, 2016년에는 없었으나 2017년도에는 세종이 포함되었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세종은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매우 미흡한 활동을 보였음.

〈표 6-5〉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세부과제명	2017년 평가 등급(점수)				2016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서울, 대전	경기, 제주, 대구, 부산, 전남	울산, 경남, 충북, 강원, 정북, 광주, 충남, 경북, 인천	세종	-	서울, 경기, 인천, 전남, 울산	전북, 경남, 대전, 강원, 제주, 부산, 세종, 경북, 광주, 충북, 대구, 충남	-

주: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제2절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3.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
3-②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광역자치단체
- 관련서비스와 연계	광역자치단체
-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광역자치단체

□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들의 지역사회재정착을 위해 중요함. 이러한 독립생활 기술은 시설에서 충분히 훈련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된 이후에 독립생활을 이끌어 갈 수 없어서 다시 노숙으로 전락하는 회전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실제로 만기 퇴소한 노숙인 중의 72%, 탈노숙한 사람 중의 42%는 노숙인 복지시설로 재입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보건복지부, 201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p.41).

○ 회전문 현상을 막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는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노숙인은 주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소외된다는 보고가 있음.

○ 2011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조사 결과에서 시설 입소 노숙인의 35.8%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거리노숙인의 경우에는 91.3%로 올라감.

○ 응급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으나, 공공제도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노숙인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 노숙인도 지역 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민간 복지기관의 서비스 대상이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함.
 - 최근 연구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연구(민소영 · 김소영, 2018)에서도 과거에 노숙인이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노숙인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읍면동의 사례관리 서비스 체계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나타남. 노숙인은 ‘골치아픈 케이스’라 생각하여 지역 내 서비스 기관이 연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음. 이 과정에서 시설 퇴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노숙생활을 하던 당시에 이용하였던 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여전히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됨.
 - 이처럼 주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 노숙인이 포섭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재정착이 어렵게 되고 있음.
- 따라서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첫째, 시설에서는 향후 노숙인이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함. 둘째, 지역 내 다양한 복지서비스로의 연계를 통하여 주류서비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함.
- 먼저, 노숙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함.
-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기술(식사, 청소, 빨래, 장보기 등), 건강유지 기술(약물복용 등), 이웃이나 가족과 관계를 맺는 기술, 경제적 생활을 꾸려가는 기술(금전관리, 관리비 납부 등), 구직과 취업 유지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됨.
 - 시설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숙인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노숙인은 다양한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연계되어야함.
-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시설 퇴소 이후 노숙인복지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노숙인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따라서 노숙인의 지역사회재정착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숙인복지 영역 이후에 일반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어야함. 즉, 노숙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일반적인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함.
-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동안, 노숙인이 지역사회 내 주류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어야함.
- 예를 들어 지역사회 방문간호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로 연계되어야함. 특히, 많은 노숙인이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정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
- 시설에서는 노숙인이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시설 거주 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2. 중앙부처 평가 결과

- 중앙부처에서는 본 과제를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음.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다음 표는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임. 100점 만점기준에서 중간값(50점)에 미치지 못한 48.5의 평균 점수를 보였음. 최대는 77.0점이었

고 중위값은 44.0점, 표준편차는 15.1점이었음.

〈표 6-6〉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00	48.5	77.0	30.0	44.0	15.1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6.2	24.0	8.0	16.0	4.7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4.5	5.0	2.0	5.0	1.2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3.4	7.0	3.0	3.0	1.1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6	5.0	2.0	4.0	1.1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4.7	9.0	1.0	4.0	2.6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0.3	21.0	0.0	9.0	5.5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4.9	9.0	0.0	4.0	2.6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3.4	7.0	0.0	3.0	2.1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2.1	8.0	0.0	1.0	2.5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16.6	27.0	5.0	17.0	6.3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2.4	5.0	0.0	2.0	1.1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5.6	9.0	3.0	6.0	2.2
③ 목표달성률	10	7.1	10.0	0.0	8.0	3.0
④ 예산집행 실적	5	1.4	4.0	0.0	0.0	2.0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5.4	8.0	1.0	6.0	1.7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5.4	8.0	1.0	6.0	1.7

□ 평가부문에서 30점 배점을 받는 영역(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였음(16.6점). 반면 시행 과정의 적정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10.3점). 그리고 소관기관의 관심도 즉, 본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서 5.4점을 받아, 중간값보다 약간 높은 점수에 그쳤음.

□ 평가부분 중 연차별 시행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평가 영역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은 4가지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되

어 있는데,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을 위해 제시하였던 광역자치단체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종합계획 과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사업목적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지, 사업 목적과 추진배경 및 사업 내용 사이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하고 세부사업 추진 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를 평가함.

- 연차별 시행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4가지 하위지표 중 만점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었는데, 5점 만점에서 4.5점(5점만점의 90% 수준)을 획득함. 그 다음으로 사업내용의 적합성이 5점 만점에서 3.6점(5점 만점의 72%수준)이 뒤를 이었음.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하위 지표는 계획수립의 적합성으로 10점 만점에서 3.4점(10점 만점의 34% 수준)을 획득하였음. 그 다음으로 비슷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던 지표는 추진체계의 적절성으로, 10점 만점에서 4.7점(10점 만점의 47% 수준)이었음.
- 하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의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5점 만점을 획득하였음. 즉,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이 ‘관련 서비스와 연계’, 그리고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와 연계되어 있었음.
- 다음으로 계획수립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용을 비교해보면, 대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 이 외에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광역자치단체는 동일하게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음.
 - 대구의 경우, 사업 목적에 첫째, 노숙인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의 원활한 연계 지원, 둘째,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노숙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 위해 필요 서비스 연계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음.
 - 낮은 점수를 획득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세부과제가 2가지(관련 서비스와 연계,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세부과제의 내용에서 이 2개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추상적인 목표를 하나만 제시하는 경향이 발견됨.
- 사업내용의 적합성 지표와 관련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대전, 경기, 충남이었음.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울산, 강원, 경남이었음.

- 높은 점수를 획득한 대전의 경우, 사업추진배경에 대하여 지역에서 자립생활 기반 부족으로 재노숙하는 상황을 설명하였음. 또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문제로 자립 과정에 더 많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을 언급함. 이러한 추진 배경을 기반으로 동 맞춤형복지팀 활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자산형성 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노숙인 정신보건네트워크 구축, 후원물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을 제시하였음.
- 경기는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제도 신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사례관리 운영, 위기관리팀(ACT팀) 운영을 통한 병원 내 사례관리, 시군별 정신보건과 중독관리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한 교육 및 상담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노숙인을 위해 특별한 사업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저소득층 사업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다거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하지 않거나, 3-1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음.

○ 추진체계의 적절성 역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과 경기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던 광역자치단체는 울산과 경남이었음.

- 대전의 경우, 노숙인의 자립준비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과의 협력을 구조화하였음. 노숙인 자립을 위하여 지자체와 민간기관의 참여 기관을 구체화하고, 각 참여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제시하였음.
- 경기는 앞서 언급하였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제도 신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사례관리 운영, 위기관리팀(ACT팀) 운영을 통한 병원 내 사례관리, 시군별 정신보건과 중독관리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통한 교육 및 상담 실시 사업' 별로 사업 수행을 진행하는 절차나 주체들을 제시하였음.
- 한편 낮은 점수를 획득한 울산은 사업 추진체계나 절차에서 구체성이 미흡하였음.

□ 두 번째 평가영역인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크게 3가지 세부평가지표를 갖는데, 사업시행 절차가 얼마나 충실하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세부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추진과정이 적정한가,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정한가 등을 평가함.

○ 시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3가지 하위지표는 모두 10점 만점 기준을 가짐.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추진과정의 충실성이었는데, 10점 만점에서 4.9점을 획득함. 그 다음으로 추진과정의 구체성이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10점 만점에서 3.4점을 획득하였음.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하위 지표는 사업관리의 적정성으로 10점 만점에서 2.1점을 획득하였음.

○ 추진과정의 충실성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이었음.

- 대전은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의 주요한 성과지표인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추진방법을 제시하였음.
- 한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울산의 경우,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 추진과정의 구체성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이었음.

- 경기도는 앞서 언급하였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제도 신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사례관리 운영, 위기관리팀(ACT팀) 운영을 통한 병원 내 사례관리, 시군별 정신보건과 중독관리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통한 교육 및 상담 실시 사업' 별로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시기별로 구체적인 추진과정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음.
-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울산은 사업추진 일정에서 구체성이 떨어짐.

○ 사업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던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총 8개이었음.

- 대전은 사업추진 모니터링 계획을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를 실시 하되 구체적으로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였음. 또한, 모니터링체계를 지자체 와 노숙인 시설로 구분하여 각 체계가 모니터링을 위해 수행할 활동 내용,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시기 등 운영 현황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모니터 링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 한편 가장 낮은 점수를 동일하게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니터링 방법 이나 시기에서 구체성이 떨어졌음.

□ 세 번째 평가영역인 시행과정의 성과달성도는 4가지 세부평가지표를 갖는데, 관 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명확하며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성과지표가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의 세부과제를 포괄적으 로 대표하고 있으며 측정방법 및 실적산출근거가 적정한지,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계획대비 예산 집행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4가지 하위지표 중 만점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 수를 차지한 것은 목표달성율이었는데, 10점 만점에서 7.1점(10점 만점의 71% 수준)을 획득함. 그 다음으로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절성이 10점 만점에 서 5.6점(10점 만점의 56% 수준), 사업성과 이행정도가 5점 만점에서 2.4점(5 점 만점에서 48% 수준) 순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하위 지표는 예산집행실적으로 5점 만점에서 1.4점(5점 만점의 28% 수준)을 획득하였음.
- 사업성과 이행정도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이 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이었음.
 - 대구는 사업 참여자인 노숙인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들의 삶이 어떠한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수혜자 입장에서 제시하였음.
 - 한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울산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수혜자의 변 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음.

○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적정성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 대전이었음.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이었음.

- 대구와 대전은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측정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목표치 설정도 작년 실적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음.
- 한편 동일하게 낮은 점수를 획득한 광역자치단체들은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이나 실적산출방법, 그리고 목표설정 근거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게 제시되었음.

□ 다음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관련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의 공통지표 외에 개별적으로 제시하였던 자율지표를 보여줌.

〈표 6-7〉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서울	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연계실적	수행기관제출
대구	주요서비스 연계 지원	주민등록 재등록 기초수급 긴급지원	센터 통계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지원	연계지원실적	센터 통계
대전	노숙인 시설 연계	시설연계 인원	시설 연계 통계
강원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실적	(당해연도 연계인원 + 전년도 연계인원)*100	연계 실적
충북	노숙인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인원	(목표횟수/실적횟수)*100	실적보고서/노숙인재활 시설
	지역 내 건강, 정신, 알코올 센터 연계	-	-
충남	지역 내 건강, 정신, 알코올 센터 연계	-	노숙인 시설 업무자료
경남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지원	당해연도 연계건수	결과보고
제주	알콜예방교육 실시	(목표인원/참여이원)*100	실적보고서/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자율지표라고 제시하였지만 공통지표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건수’와 거의 유사한 형태인 자율지표가 주를 이루었음.
 - 예를 들어, 서울의 ‘타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대구의 ‘주요서비스 연계 지원’, 충북의 ‘노숙인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인원’, 경남의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은 관련서비스와 연계를 위한 공통지표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건수’에 포함될 수 있음.
- 자율지표 중에는 정신보건서비스연계와 관련된 지표가 상당하였음.
 - 예를 들어, 대구의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지원’, 강원도의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실적’, 충북과 충남의 ‘지역 내 건강, 정신, 알코올 센터 연계’ 등이 정신 보건서비스와 연계된 지표이었음.
- 이러한 정신보건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지표는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의 하위 세부 사업인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공통지표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건수’에 포함될 수 있음.
- 이 외에 대전은 ‘노숙인 시설 연계’라는 자율지표를 제시하여, 노숙인 퇴소 이후 타 노숙인 시설로 전원하는 것을 성과라고 제시하였음.
 - 현재의 노숙인 시설이 노숙인의 기능상 부적합하다면 전원하는 것이 옳음. 따라서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음. 그러나 전원보다는 현재의 노숙인 시설에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함.
- 제주도는 알콜예방교육 실시로 자율지표로 제시하였음. 알콜문제가 자립기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성과지표로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알콜문제또한 정신건강문제이며 이는 관련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사업의 하위세부사업인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와 연결될 수 있음.
 - 따라서 ‘알콜예방교육’을 새로운 사업내용으로 설정하여 성과지표를 분리시키기보다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사업안으로 포함시키고, 성과지표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끝으로 측정산식은 목표대비 실적이었어야함에도, 작년대비 올해 실적이라고 제

시함으로써 목표달성율의 기준값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발생함.

□ 다음은 공통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목표달성을 제시한 수준을 보여줌.

- 첫 번째 공통지표인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수’에 대하여 목표달성정도를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2곳이었음(5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지 않았음). 12개 광역자치단체가 100%이상의 목표달성 정도를 보여주었으며, 이 중 1곳은 200%이상의 목표 달성률을 제시하였음.
- 두 번째 공통지표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건수’에 대하여 목표달성정도를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2곳이었음(5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지 않았음). 이 중 1개를 제외한 11개 광역자치단체가 100%이상의 목표달성 정도를 보여주었음.

〈표 6-8〉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수	100% 미만	0
	100% 이상 200% 미만	11
	200% 이상	1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건수	100% 미만	1
	100% 이상 200% 미만	11
	200% 이상	0

□ 다음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예산현황을 정리한 것임.

-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에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비를 별도로 집행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대전, 경기이었음.
 - 집행예산의 범위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600만원에 이르렀음.

〈표 6-9〉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예산집행 여부	예산집행	6
	비예산으로 진행	10

주: 예산집행 실적에 대하여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예산을 실적으로 제시한 경우(예- 세종특별자치시, “한눈에 보이는 복지자원 책자” 발간)가 있어서, 이는 실적에서 제외시켰음.

□ 다음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 평가에 대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것임.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보통 등급에 포함되었음. 등급별로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구간은 매우 우수 등급이었음.

- 매우 우수 등급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가 2016년에는 없었으나 2017년에는 2개 광역자치단체(대전, 대구)가 포함되었음.
- 우수 등급의 경우, 2016년에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었으나, 2017년에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었음.
- 보통 등급의 경우, 2016년도에는 10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11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었음.
- 미흡 등급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모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가 없었음.

〈표 6-10〉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세부과제명	2017년 평가 등급(점수)				2016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서울, 제주	경북, 충남, 전남, 인천, 세종, 광주, 강원, 경남, 울산, 전북, 충북	-	-	대전, 경기, 인천, 부산, 서울, 충북, 경북	광주, 경남, 대구, 강원, 전북, 전남, 충남, 울산, 제주, 세종	-

주: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제3절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3.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
3-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치단체
-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	광역자치단체
-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	광역자치단체

□ 노숙인복지정책의 원칙으로서 정부 및 민간은 노숙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거리노숙인에게는 거리 노숙 및 장기화를 예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시설 입소자에게는 근로와 생활기술 습득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함.

○ 또한 건강상 이유로 장기입소가 필요한 재활 및 요양시설 노숙인은 시설의 환경 개선과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재활시설 입소자에게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활을 지원해야 함.

□ 이러한 원칙하에 노숙인복지시설은 노숙인의 욕구에 적합한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시설의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 하지만 시설입소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시설의 특색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반면,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교육이나 사회복귀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 등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 있음. 따라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내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 첫째,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

- 이는 실제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자활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의식고취, 거리노숙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임.

○ 둘째, 거리 노숙인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

- 거리 노숙인의 노숙인시설의 입소를 유도하고, 시설생활에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단체생활의 규칙 등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

□ 따라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의 경우 거리노숙 → 시설입소 → 사회적응 훈련 → 사회복귀의 절차와 같이 거리노숙인뿐만 아니라 시설노숙인도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중앙부처에서는 본 과제를 시행하지 않은 관계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는 광역자치단체의 필수적인 과제임.

□ 2017년 성과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의 <표 6-11>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한 결과임.

○ 평균 62.0점, 최고점수 84.0점, 최저 점수 42.0점, 중위값 58.0점, 표준편차 13.7점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 평균점수 52.2점과 비교해 볼 때 10점 정도 상승한 결과임.

□ 평가영역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소관기관의 관심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평균이 21.2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행과정의 적정성 평균이 30점 만점에 14.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평가됨.

□ 전체적으로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순서, 소관기관의 관심도 순으로 나타남.

〈표 6-11〉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00	62.0	84.0	42.0	58.0	13.7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20.9	27.0	15.0	21.0	4.1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4.0	5.0	3.0	4.0	0.4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6.9	8.0	3.0	7.0	1.1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3.6	5.0	2.0	4.0	1.4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6.4	9.0	3.0	6.0	2.4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4.8	27.0	3.0	14.0	7.1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6.5	10.0	3.0	7.0	2.6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4.1	9.0	0.0	4.0	2.2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4.2	9.0	0.0	4.0	3.4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30	21.2	26.0	15.0	22.0	3.5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2.3	5.0	0.0	2.0	1.6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7.2	9.0	5.0	7.0	1.2
③ 목표달성률	10	8.4	9.0	6.0	9.0	1.0
④ 예산집행 실적	5	3.4	4.0	0.0	4.0	1.4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6.4	9.0	5.0	6.0	1.5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6.4	9.0	5.0	6.0	1.5

□ 평가 부문별로 상세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점수 평균은 30점 만점에 20.9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최고 점수는 27점, 최저 점수는 15점, 표준편차는 4.1점임.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의 세부지표 중에서는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광역자치단체별 편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 종합계획 과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이러한 결과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있어서 광역자치단체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우수 사례로서, 대구의 경우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의 각 프로그램이 종합계획의 세부과제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세부지표로서 계획수립의 적합성 지표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우수 수준의 평가를 받음.

-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목적 제시를 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가 2개였지만 2017년의 경우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목적 제시하였음. 대체로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을 위한 교육 훈련의 사업목적이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제시된 사업목적이 종합계획 과제와 논리적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음, 구체성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목적은 ‘시설입소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시설의 특성에 따라 운영’으로 제시되어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종합계획 과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종합계획의 내용으로는 1차적으로 거리노숙인을, 2차적으로는 시설노숙인을 교육훈련의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목적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우수 평가를 받은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노숙인자활시설, 재활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시설노숙인 중심이 아닌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이는 사업내용, 성과지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구체적 대상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도 낮고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세부지표는 추진체계의 적절성 지표임.

- 낮은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이 사업목적 달성을 수 있는 명확성이나 합리성이 미흡하게 반영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어 사업내용이 대인관계 및 자존감 향상 등 사회적인 프로그램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시행주체, 시행방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제시되어 있음이 확인됨.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체적으로 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노숙인 종합계획에서 요구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목적을 수립하며 이와 연계되어 세부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정성

○ 시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점수 평균은 30점 만점에 14.8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앞서 서술하였듯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최고 점수는 27점, 최저 점수는 3점, 표준편차는 7.1점으로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 시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지표 중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세부지표는 추진과정의 충실성 지표임. 각 광역자치단체는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평가 점수가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추진과정의 충실성 평가 점수가 높은 경기의 경우, 한신대학교, 수원시 다시 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인문학 정규수업과 치료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있으며,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평가됨. 특히 지역 치료자원 연계 프로그램으로 합창치유, 미술치유, 명상치유, 춤테라피 프로그램의 시행횟수가 10~30회가 될 정도로 충실하게 추진된 것으로 제시됨.
-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추진과정의 구체성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실적 중 추진과정의 일정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세부지표임. 평균 점수가 4.1점으로 3개의 세부지표 중 가장 낮은 평가로 나타남.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의 경우 서울시 자체 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 공모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사업주체의 역할과 민관협력 방법을 제시하고 추진 일정이 월별로 제시되어 추진과정의 구체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이와 같이 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들은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계획과 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추진과정의 일정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낮은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거리노숙 → 시설입소 → 사회적응훈련 → 사회복귀’의 절차를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추진과정도 ‘연간(수시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어떤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기간동안 시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사업관리의 적정성 지표는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어 개선결과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세부지표임.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광역자치단체는 15개로서 88.2%로 전년도 9개 광역자치단체, 52.9%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의 내용으로 모니터링 주체, 구체적인 기간과 횟수, 내용, 모니터링 결과 및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특히 모니터링 주체로서 지자체와 민간을 함께 제시하여 지자체의 실적 확인이나 지도점검 이상의 실질적 모니터링을 실시한 서울, 대전 등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될 수 있음. 또한 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년에 비해 모니터링 방법으로 실적 보고, 지도점검 외에 모니터링 회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모니터링을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지 않거나 모니터링 결과의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 '정상 추진' 등이 제시되어 실질적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향후 사업관리 및 집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도점검 이상의 실질적 개선 결과를 제시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 6-12〉 모니터링 실시 여부: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실시	15
	미실시	2

-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의 시행과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추진과정의 충실성과 구체성, 모니터링의 시행 여부 및 개선 결과 제시 등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 점수 평균은 30점 만점에 21.2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최고 점수는 26점, 최저 점수는 15점, 표준편차는 3.5점으로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 지표 중 사업성과 이행정도 세부지표의 경우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요사업성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를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4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확인됨.
-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지표의 경우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통성과지표인 노숙인 자활(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제시하여 종합계획의 세부과제의 사업목적으로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사업의 결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제시되지 않거나 실적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의 공통성과지표는 노숙인 자활(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임. 자율지표를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표와 같이 충남의 거리노숙인 교육 또는 상담자 수임.

〈표 6-13〉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충남	거리노숙인 교육 또는 상담자(명)	-	노숙인시설 업무자료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2017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88.3%~553%로 제시되고 있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래 표와 같이 100% 미만의 광역자치단체는 2개, 100% 이상 200% 미만의 광역자치단체는 13개, 200%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는 2개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의 사업 목표와 실적이 적정한 수준에서 계획되고 시행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표 6-14〉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목표달성률	100% 미만	2
	100% 이상 200% 미만	13
	200% 이상	2

○ 예산집행 실적의 경우 1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8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예산으로 진행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계획하고 시행과정에서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산을 집행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백만원에서 501백만원의 범위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또한 모든 광역자치단체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개선의 한 대안으로 각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예산집행 실적을 프로그램별로 좀더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시행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6-15〉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예산집행 여부	예산집행	16
	비예산으로 진행	1

□ 소관기관의 관심도

- 종합적인 평가로서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 과제 수행에 대한 소관기관의 관심도를 평가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추진 실적의 전반적 내용으로 지자체 스스로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의 경우 거리 및 시설 노숙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구체적 세부 일정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절히 시행하고 전반적으로 정책효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한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우 우수(100~76점), 우수(75~51점), 보통(50~26점), 미흡(25~0점)으로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매우 우수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대전 3개임.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로 84점으로 나타남.
- 우수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대구, 충북, 제주, 세종, 전북, 전남, 경남, 광주, 부산 10개임.
- 보통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 강원, 충남, 경북 4개임.
- 미흡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0개임.

-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2016년 2개에서 2017년 3개로 증가
 -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2016년 6개에서 2017년 10개로 증가
 - 반면, 보통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2016년 9개에서 2017년 4개로 감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상승된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16〉 2016~2017년 평가등급 비교: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세부과제명	2017년 평가 등급(점수)				2016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서울, 경기, 대전	인천, 대구, 충북, 제주, 세종, 전북, 전남, 경남, 광주, 부산	울산, 강원, 충남, 경북	-	인천, 경기	서울, 제주, 대전, 대구, 전북, 경북	세종, 경남, 광주, 충북, 울산, 전남, 충남, 강원, 부산	-

주: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제 7 장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제1절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제2절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3절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7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 인프라 강화

제1절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4.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
4-①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노숙인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숙인 등이 거리노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하지만, 현실은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일부 지자체와 민간에서 전국 단위 혹은 지역 단위의 일시집계조사(point-in-time counting)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현황 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 상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0년도와 2012년도에는 민간주도로 전국노숙인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법령에 의해 5년 주기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으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한편, 광역자치단체 실태조사는 2010년도에 민간주도로,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매년 광역자치단체 예산으

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음. 2016년도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의 자료 확인을 통해 대전과 충북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표 7-1〉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현황

구분	전국노숙인실태조사	광역자치단체 실태조사	조사시기
2010	민간주도	민간주도	10월
2011	보건복지부	조사없음	8월
2012	민간주도	조사없음	10월
2013	조사없음	서울	분기별
2014	조사없음	서울	분기별
2015	조사없음	서울	분기별
2016	보건복지부	대전, 충북	12월/분기별

□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내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추진계획이 다음과 같이 수립됨.

- 첫째,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기초적인 행정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거리노숙인 현황을 파악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둘째,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우선 2016년도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성과 및 모니터링을 종합계획 수립 근거로 제공함. 또한 이러한 정기실태조사 및 1차 노숙인 종합계획 평가 등을 근거로 2020년에 2차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를 소관하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도 추진실적 결과를 평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음.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에 대한 평

가 점수는 55점으로 우수 수준으로 평가됨.

□ 평가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은 30점 만점에 18점,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30점 만점에 12점,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는 30점 만점에 17점, 소관기관의 관심도는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됨.
- 소관기관의 관심도가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평가결과로 보건복지부의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정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각 지표별 세부적인 영역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종합과제 내용이「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중 추진계획(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노숙인, 쪽방주민 행정조사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사업내용의 적합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 하지만 사업목적이 제시되지 않아 종합계획 과제와 사업목적간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계획수립의 적합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정성

- 사업시행절차로 협조공문(보건복지부) → 결과보고(지자체) → 취합·분석(보건복지부)로 제시되어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있으며, 사업성과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추진과정의 충실성 지표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됨.

- 하지만 사업시행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만 추진 일정에 대한 세부 일정이 누락되어 적시성이 미흡함.
- 또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사업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측면에서 성과지표인 2017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 실시는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로 대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적정하고 실적 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로 평가되어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음.
- 또한 목표달성률의 경우 실태조사 완료로 100%로 평가되어 우수 평가를 받음.
- 하지만 사업성과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비예산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이와 같은 추진 과정으로 소관기관 스스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등 소관기관의 관심도에서 우수로 평가될 수 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목적의 제시,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 제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사업성과 내용 제시 및 예산집행 진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7-2〉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4	종합과제 내용이「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중 추진계획(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0	사업목적이 제시되지 않음.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4	17개 시도 노숙인, 쪽방주민 행정조사를 실시함.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10	17개 시도 노숙인, 쪽방주민 행정조사를 실시함. 광역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함.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있으며,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조공문 발송, 취합 및 분석의 과정이 제시되어 있음.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4	사업시행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만 추진 일정에 대한 세부 일정이 누락되어 적시성이 미흡함.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0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음.
3. 시행결과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5점)	0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8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는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로 대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적정하고 실적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임.
	③ 목표달성률(10점)	9	실태조사 완료의 목표를 달성함.
	④ 예산집행 실적(5점)	0	비예산으로 추진됨.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8	보건복지부에서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를 통하여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적극성, 실효성 모두 높다고 평가됨.
총 점		55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선택사항임. 2017년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를 수행한 광역자치단체는 세종과 강원 등 모두 2개임.

□ 2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 <표 7-3>과 같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평가 점수는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시행계획의 적절성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시행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수준임. 그에 대한 근거로 종합과제 내용이「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중 추진계획(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황조사 및 생활실태를 통하여 자립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종합계획과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또한 사업목적과 주요사업 내용(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간 연계성이 높고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음. 그리고 총 4회 참여인원 50명의 유관기관의 현장보호 활동 추진과 병행 실시하여 주요사업내용이 적절하며, 이에 따른 사업주체가 적합하여 추진체계의 적절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시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높지 않은 수준임.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 간 연관성이 있지만 적극적인 추진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추진과정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높지 않으며, 실태조사 일정이 연간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시 시기가 명확하지 않게 제시되어 있음. 또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사업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 결과도 우수 수준임. 성과지표가 거리노숙인 현황 및 실태조사 횟수로 제시되어 성과지표가 노숙인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하며, 세부 과제별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함. 또한 목표달성률이 175%로 나타나 100%를 상회하며, 예산집행률도 100%로 제시됨.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주요사업성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으로 거리노숙인 수가 아닌 아웃리치 참여인원 수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됨.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세종에서 추진한 노숙인 현황 및 실태조사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강원도의 경우 평가 점수는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소관기관의 관심도가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시행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보통 수준임. 사업목적과 주요사업 내용(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간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종합과제 내용이「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중 추진계획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거리노숙인 혹서기, 혹한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추진의 사업목적이 제시되어 있으나 종합계획과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수 수준임. 그 근거로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간 연관성이 있으며 적극적인 추진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실태조사 일정이 혹서기, 혹한기 기간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한편,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지만 개선결과물 적절성이 일부만 반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다음으로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보통 수준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성과가 서술되어 있으나 정책효과와 다르게 제시됨. 성과지표가 거리노숙인 수 감소율로 제시되어 있으나 측정산식이 적절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목표달성률의 경우 성과지표는 거리노숙인 실태조사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제시된 목표치와 실적은 거리노숙인 수로 제시되어 있고 목표달성률도 88%로 제시되어 측정산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숙인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숙인 현장보호와 연계하여 실시하여 함. 하지만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노숙인 수 감소의 정책효과의 성과로 제시하기에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미흡한 수준으로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됨.
- 강원에서 추진한 노숙인 현황 및 실태조사 시행이 노숙인 현장보호와 연계되어 있지만 그 구분이 모호하고 현황 및 실태조사의 목적 달성과 적절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

제2절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4.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
4-② 협의체에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 중앙-광역자치단체간 노숙인 지원협력을 위한 회의구조 마련	보건복지부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노숙인의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주거, 고용, 의료 등 노숙인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임. 또한 현재 노숙인 복지 정책 특성상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조가 필수적임.

□ 한편, 노숙인 복지 초창기부터 노숙인복지에서 종교계나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의 역할전통이 크며 현재도 그 민간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복지분야 보다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노숙인복지정책의 원칙의 하나로 다양한 주체(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민간단체 등)를 통한 유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중앙부처는 노숙인복지정책의 수립 및 조정, 주거·의료·고용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의 역할을 가짐.

○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차원의 전략과 실행계획의 수립, 지역 내 서비스 자원의 효과적인 조정, 지역 내 협력 및 혁신 체계의 확보의 역할을 가짐.

○ 민간기관은 민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자원활동가 활용 확대, 노숙인에 대한 직·간접적 서비스의 지원 및 관리의 역할을 가짐.

□ 하지만 노숙인 복지지원을 위한 주거, 고용, 의료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간의 업무협력을 위한 실질적 협

력체계는 미비한 상태임.

□ 또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도 현안 중심의 협의만 이루어질 뿐, 정기적이고 유기적인 논의구조는 부재한 상황임.

□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관계도 과거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쉼터 중심의 이원화된 민간 연합회(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의 분리 운영으로 인해 분절적이고 형식적인 민간협력에 그치고 있음.

□ 중장기적인 노숙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실질적인 노숙인 지원을 위한 각 참여주체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내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 첫째, 노숙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를 구성함.

- 이는 노숙인 지원을 위한 주거, 고용, 의료를 소관하는 중앙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협력사항을 조율 및 협의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중앙부처 노숙인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임.

〈표 7-3〉 중앙부처 노숙인지원 협의체 구성

구분	부서	인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기초의료보장과, 정신건강정책과	각 1명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관련 부서	1명
국토교통부	임대주택관리 부서	1명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1명

○ 둘째,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간 노숙인 지원 협력을 위한 회의 구조를 마련함.

- 이는 노숙인복지정책과 광역자치단체 현안 등 중장기적인 노숙인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정기적인 회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간의 논의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셋째, 노숙인복지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함.

- 이는 민간의 노숙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
- 또한 노숙인복지 정책의 평가 수행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 1회 운영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안)은 다음 <표 7-4>와 같음.

<표 7-4>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

구분	참여자	인원
노숙인 자활분야	노숙인자활분야 시설 대표	1명
노숙인재활/요양분야	노숙인재활/요양분야 시설 대표	1명
학계	노숙인 등의 연구 경력이 풍부한 학계(교수 등)	1명
공무원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각 1명
민간단체	노숙인 관련 지원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민간단체 활동가 등)	1명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를 소관하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도 추진실적 결과를 평가한 결과는 <표 ->에 제시되어 있음.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에 대한 평가 점수는 3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 평가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은 30점 만점에 12점,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30점

만점에 10점,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는 30점 만점에 9점, 소관기관의 관심도는 10점 만점에 6점으로 평가됨.

- 소관기관의 관심도가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지표별 세부적인 영역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점수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종합 계획 과제의 내용(중앙-지방정부의 유기적 논의 구조 필요)은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중앙부처 협의 체 구성, 중앙-광역-지자체간 협력 회의구조 마련, 민관협력 위원회 운영)과 일부 일치하도록 서술되어 있음. 또한 중앙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민관 협력관계의 파트너십이 미흡하다는 현황만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또한 국회세미나, 쪽방간담회, 종교계노숙인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에 대한 계획은 사업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 적절성과 명확성을 반영하였으나 사업 주체 및 시행절차의 합리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시행과정의 적정성

- 시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사업시행 절차로 보건복지부 ↔ 지자체 ↔ 민간단체 소통 강화로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과 회의를 활성화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정이 누락되어 있음.
- 또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사업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측면에서 회의개최 횟수는 성과지표로서 노숙인 복

지지원사업을 위한 민관협력관계의 파트너십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하며, 사업의 결과로 제시하기 적절함.

- 하지만 2017년 목표치(2회 이상)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실적과 목표달성률 결과가 제시되지 않음.
- 또한 사업성과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비예산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전반적으로 동일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의 비교에서 2017년도의 추진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17년노숙인 복지를 위한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추진 체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추진실적 자료에 의하면, 모니터링,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분석과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표 7-5〉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2	종합계획 과제의 내용(중앙-지방정부의 유기적 논의 구조 필요)은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중앙-광역-지자체간 협력 회의구조 마련, 민관협력 위원회 운영)과 일부 일치하도록 서술되어 있음.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0	사업목적이 제시되지 않음(현황으로만 서술).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4	주요 사업내용과「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의 내용의 연계성이 높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6	국회세미나, 쪽방간담회, 종교계노숙인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에 대한 계획은 사업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 적절성과 명확성을 반영하였으나 사업 주체 및 시행절차의 합리성은 미흡함.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6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의 연관성이 반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됨.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4	사업시행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만 추진 일정에 대한 세부 일정이 누락되어 적시성이 미흡함.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0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음.
3.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5점)	0	명확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음.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6	성과지표로서 회의개최는 노숙인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민관협력관계의 파트너십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하며, 사업의 결과로 제시하기 적절함.
	③ 목표달성률(10점)	0	목표달성률 결과가 제시되지 않음(2017년 목표치만 제시).
	④ 예산집행 실적(5점)	3	소요 예산이 해당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음.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6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지 않음.
총 점		37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선택사항임. 2017년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를 수행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 세종, 강원 등 모두 3개임. 그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노숙인 시설이 총 1개소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한 정책 모니터링 추진사항을 제시하여 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여 평가는 생략함.

□ 대전의 경우 평가 점수는 매우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대전의 경우 노숙인시설 등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 회의와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의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부문에서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중앙-광역시-광역시자치단체간 협력 회의구조 마련, 민관협력 위원회 운영)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참여 가능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 다음으로 시행과정의 적정성 부문에서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사업기간, 위원 수, 위원 임기, 역할, 기능, 회의 개최 수 등 사업추진과정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과정에 대한 실적이 제시되고 있음.

○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부문에서는 협의체 구성의 주요사업성으로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을 자문하여 노숙인복지사업의 민관협력의 기반의 구조를 마련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성과의 이행정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음. 또한 성과지표로 회의개최 수와 협의된 안전의 수 등 2개가 제시되었으며 모두 계획 대비 100%를 달성하였음.

○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이 매우 우수한 수준임.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대전에서 추진한 사업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강원도의 경우 평가 점수는 매우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노숙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노숙인 유입 예방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부문에서 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중앙-광역-지자체간 협력 회의구조 마련, 민관협력 위원회 운영) 중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참여 가능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사업목적이 강원도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의 내용이 제시되어 종합계획 과제와 사업목적 간 논리적 인과관계가 제시되어 있음. 하지만 노숙인시설 종사자 워크숍, 노숙인 정책 제안 및 우수프로그램 공유는 사업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의 연관성이 높지만, 노숙인시설 종사자 워크숍, 노숙인정책 제안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지만 개선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측면에서 주요사업성파로 워크숍 개최 및 참석자 수가 제시되어 있지만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하지만 성과지표로서 회의 개최 수와 협의된 안건 수로 제시되어 노숙인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로 제시되어 있음. 또한 목표달성률이 100%로 제시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치 방향이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추진방향과 일치함. 하지만 예산집행률이 100%이지만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 광역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 노숙인정책 제안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의 노력이 제시되어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이 매우 우수한 수준임.
- 강원외의 경우 강원도노숙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하여 워크숍 개최에 지원하고 노숙인 정책 제안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기관간의 협력을 높이려는 사업을 추진함.
- 하지만 1회의 워크숍으로 노숙인 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에 미흡한 수준으로 중장기적인 협의회 지속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제3절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1. 과제 개요

과제명	소관기관
4.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
4-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

□ 노숙인 시설 입소자는 장애인·노인·정신질환자가 대부분(87.7%)이나 생활복지시설 중 생활지도원 1인당 배치기준은 가장 열악한 상황임.

○ 종합계획에서 입소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도원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요양시설(생활지도원 1인당 기준 28명, 2017년의 경우 1인당 25명)의 배치기준에 근접하도록 인력증원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규모가 작은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있음.

○ 이는 단기간에 완성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5차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충족해가도록 도모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앙부처 평가결과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는 중앙부처 중 보건복지부만 해당됨. 다음의 <표 7-6>은 평가영역별 평가결과를 요약한 표임.

○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2016년 사업실적에서 밝힌 바가 있음. 2017년 사업추진 실적으로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시행규칙[별표 1]“3.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서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당 50

명을 25명으로 개정하였음.

〈표 7-6〉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4	종합계획의 과제 내용을 잘 반영함. 정신요양시설의 배치기준에 근접하도록 추진.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6	사업목적의 논리성과 구체성의 측면에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됨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4	주요사업내용과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은 우수함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8	세부사업 추진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임.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당 50명→25명으로 개정함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	사업시행절차와 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있으며, 성과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됨.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5	사업추진일정 등 구체성이 부족하여 보통으로 평가됨.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0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없음
3. 시행결과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5점)	5	종사자 배치기준을 종사자 1인당 시설생활인 25명으로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성과 이행 정도는 우수함.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됨.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5	포괄성의 측면에서 미흡하여 목표설정이 적절성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함
	③ 목표달성률(10점)	7	목표달성률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④ 예산집행 실적(5점)	2	소요예산을 미해당으로 설정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6	노력의지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함. 중앙정부는 배치기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총 점		60	

□ 2016년 평가 등급과 비교하면 2017년은 매우 많은 평가부문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실적이 없었던 반면 2017년은 실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임

3.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 광역자치단체의 최고 점수는 72점, 최저 점수는 14점, 평균 42.3점으로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로 평가됨.

○ 이 분야는 전년도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영역이어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수행의 경험이 부족하였음.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라는 분야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함.

〈표 7-7〉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과제명	만점	평균점수	최대	최소	중위	표준편차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100	42.3	72.0	14.0	40.0	18.3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30	15.8	22.0	6.0	16.0	4.8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5	3.5	4.0	1.0	4.0	1.1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10	4.7	8.0	2.0	3.0	2.1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5	2.9	4.0	1.0	3.0	0.8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4.6	6.0	2.0	6.0	1.8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	10.1	19.0	2.0	9.0	6.0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10	4.4	7.0	2.0	3.0	2.3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10	3.4	7.0	0.0	3.0	2.0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2.3	6.0	0.0	2.0	2.4
3. 시행결과와 성과달성도	30	13.0	22.0	0.0	14.0	7.5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	2.1	4.0	0.0	2.0	1.5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2.6	7.0	0.0	2.0	2.3
③ 목표달성률	10	5.4	7.0	0.0	7.0	3.1
④ 예산집행 실적	5	2.9	4.0	0.0	3.0	1.8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	4.8	7.0	3.0	5.0	1.6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10	4.8	7.0	3.0	5.0	1.6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없고, 우수 등급에 6개 보통 등급에 7개 그리고 미흡등급에 4개 광

역자치단체가 포함되었음.

○ 우수 등급에는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서울, 전남이 포함되었음.

〈표 7-8〉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등급 분포 상태

과제명	등급	광역자치단체 수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매우우수(100~76점)	0
	우수(75~51점)	6
	보통(50~26점)	7
	미흡(25~0점)	4

- 서울의 경우 자체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배치기준(499명) 보다 많은 581명이 시설운영 종사자로 배치되어 있고, 예산지원하고 있음. 다만 장기적인 개선 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대구의 경우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보수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여 우수자원을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등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함. 추진실적으로 자활시설장 직급 보조비 지원, 일시보호시설 조리원 배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정원 외 채용 배치 등의 사례를 확인함.
- 광주의 경우 관내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정신요양시설 기준인 1인당 28명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 경기의 경우 노숙인 종사자 보수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근무수당 지원, 처우개선비 지원(1인당 월 5만원) 등 시행. 입소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경남의 경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보조수당 지원(월 20만원), 노숙인 시설 취사원 시설 당 1명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 사기증진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이 분야의 성과지표로서 노숙인복지법 시행지침 개정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혼선이 있었음. 광역자치단체는 다양한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런 사례가 드물었음.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자체 성과지표를 제시한 곳은 11개 지자체였음. 그런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표현은 달리했으나 내용은 동일한 성과지표였음.

- 노숙인복지법의 시행지침에 다른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즉 배치기준 충족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경남과 서울이 다소 상이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는데, 경남의 경우 종사자 수당 지원 여부, 취사원 인건비 지원을 성과지표를 제시하였고, 서울은 시설 운영 지원계획 수립으로 설정함.

〈표 7-9〉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제출현황: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광역자치단체	자율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대구	종사자배치기준 충족률	배치기준 충족률	시설통계
인천	노숙인시설종사자 배치율	종사자 인원	종사자배치현황
광주	노숙인시설 입소자/생활지도원	-	-
대전	노숙인시설종사자 배치율	종사자 인원	종사자배치현황
세종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종사자 확보	종사자 배치기준	노숙인시설 현황
경기	종사자직종별 배치기준 준수	-	노숙인 통계
충북	노숙인시설 입소자/생활지도원	시설종사자 현황	시설현황자료
충남	노숙인시설 입소자/생활지도원	-	노숙인시설 업무자료
전북	종사자배치기준 충족률	(배치기준/종사자 수)*100	노숙인시설 현황
경남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건의	건의 건수	공문
	종사자 수당 지원	당해연도 지원현황	결과보고
	취사원 인건비 지원	당해연도 지원현황	결과보고
서울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계획 수립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서울시 문서관리시스템

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의 원본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 17개 광역자치단체 12개의 광역자치단체만 목표달성도 제시하였으며, 모두 100%를 상회하였으나, 200%를 초과한 곳은 없었음(5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지 않았음)

〈표 7-10〉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종사자 배치기준 달성률	100% 미만	0
	100% 이상 200% 미만	12
	200% 이상	0

주: 5개 광역자치단체는 달성률 확인 불가

□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를 위해 예산집행실적이 없었음. 예산을 집행한 광역자치단체가 8곳이었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비예산이거나 예산집행실적이 없었음.

〈표 7-11〉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구분		광역자치단체 수
예산집행 여부	예산집행	8
	비예산으로 진행	9

제 8 장

결론

제1절 2017년 노숙인 지원정책 성과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2017년 노숙인 지원정책 성과

1. 공통 성과지표 평가

□ 종합계획의 수립과 평가

- 우리나라 노숙인 지원정책은 2012년 6월 노숙인 복지법 제정 및 시행으로 포괄적인 정책수립의 기반이 마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매 5년마다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이에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
- 종합계획의 점검과 평가는 각 연차별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검과 5개년 기간의 계획추진 과정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확인하는 평가로 구성
 - 본 연구는 1차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2017년의 노숙인 지원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평가
 -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달성도와 과정평가를 실행함으로써 노숙인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

□ 2017년 노숙인 현황

- 성과지표 평가결과에 앞서 2017년 기준 노숙인 및 노숙인 시설 현황을 살펴봄 (<표 8-1>~<표 8-3>참조).
 - 2017년도 12월 말 기준 노숙인은 10,828명으로 거리노숙인 862명,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994명, 자활시설 노숙인 1,583명, 재활 및 요양시설 노숙인 7,389명, 쪽방주민은 5,705명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노숙인 수가 3,65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대구가 1,001명, 경기도가 924명
- 쪽방주민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 있는 쪽방상담소를 기준으로 파악되며 쪽방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서울이 3,174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881명, 대구 808명 순임.

〈표 8-1〉 연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자활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2,741	2,095	1,949	1,683	1,613	1,583
일시보호	-	-	-	-	-	-	-	844	899	1,045	798	994
거리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081	1,197	1,138	1,125	969	862
재활요양	10,317	9,722	9,492	9,266	8,958	8,742	8,569	8,520	8,361	8,048	7,265	7,389
합계	15,173	14,266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쪽방주민	-	-	6,119	6,394	6,232	5,991	5,891	5,992	6,147	6,072	6,053	5,70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7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행정자료

〈표 8-2〉 시·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활	1,583	896	75	94	37	23	95	31	-	218	44	11	22	35	-	2	-	-
일시보호	994	690	134	27	11	1	22	8	3	51	2	4	1	11	6	5	6	12
거리	862	237	123	76	130	13	30	4	10	123	28	3	53	10	5	2	15	-
재활요양	7,389	1,830	548	804	540	117	146	-	102	532	213	694	-	179	724	336	477	147
합계	10,828	3,653	880	1,001	718	154	293	43	115	924	287	712	76	235	735	345	498	159
쪽방주민	5,705	3,174	881	808	430	-	412	-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7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행정자료

- 노숙인 시설은 총 153개소로 노숙인 자활시설 61개소,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이 57개소로 자활·재활·요양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10개소, 일시보호시설 8개소, 쪽방상담소 10개소, 급식시설과 무료진료소가 7개소 순으로 나타남.

〈표 8-3〉 노숙인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6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종합지원센터 (구, 상담보호센터)	10	2	2	1	-	-	1	-	-	3	-	-	-	-	-	-	-	1
일시보호시설	8	4	-	1	-	-	1	-	-	1	1	-	-	-	-	-	-	-
노숙인자활시설 (구, 노숙인쉼터)	61	24	4	5	3	1	4	1	-	11	3	1	1	2	-	1	-	-
노숙인재활·요양시설 (구, 부랑인시설)	57	14	5	2	4	1	1	-	1	4	3	3	-	3	7	3	4	2
쪽방상담소	10	5	2	1	1	-	1	-	-	-	-	-	-	-	-	-	-	-
급식시설 무료진료소	7	4	1	-	-	-	-	-	-	2	-	-	-	-	-	-	-	-
합계	153	53	14	10	8	2	8	1	1	21	7	4	1	5	7	4	4	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7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행정자료

□ 공통 성과지표와 실적

○ 노숙인 등의 복지정책의 목적은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서는 공통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제시함.

- 공통 성과지표는 거리노숙인 수, 시설노숙인 수,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비율, 주거지원건 수이며, 5개년 종합계획에서 설정된 연도별 목표는 〈표 8-4〉와 같음.

〈표 8-4〉 공통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거리노숙인 수 (명)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각 시도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조사				
시설노숙인 수 (명)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text{전년도 시설입소자} - \text{평가년도 시설입소자}) \div \text{전년도 시설입소자} \times 100$ * 시설입소자: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 입소자				
현장보호활동 (아웃리치) 관리 비율 (%)	80%	85%	90%	95%	100%
	$\text{평가년도 현장활동 관리 수} \div \text{전년도 거리노숙인 수} \times 100$ * 현장활동 관리 수: 거리노숙인 중 현장보호활동 대상으로 관리 받은 자의 수				
주거지원 건수 (건)	전년대비 2% 증가	전년대비 2% 증가	전년대비 2% 증가	전년대비 2% 증가	전년대비 2% 증가
	$\text{평가년도 주거지원} \div \text{전년도 주거지원} \times 100$ * 주거지원 = 임시주거복지지원+공공임대주택+지원주택+시설입소(자활·재활·요양시설 입소)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 2016년 실적대비 2017년 실적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면,

- 거리노숙인 수의 경우 2016년 969명에서 2017년 862명으로 전년대비 11.0%가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설노숙인은 2016년 8,878명에서 2017년 8,972명으로 1.1%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비율은 2017년 1,317명으로 전년도 거리노숙인 수 969명을 상회하는 수치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주거지원건수 또한 전년대비 30.2%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함.

〈표 8-5〉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성과지표(단위)	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전년대비)	2017년 목표	2017년 실적	목표달성 여부 (전년대비)
거리노숙인 수(명)	1,125	969 (13.9%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862	달성 (11.0% 감소)
시설노숙인 수(명)	9,731	8,878 (8.8%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8,972	미달성 (1.1% 증가)
현장보호활동 (아웃리치) 관리 비율(%)	1,057	1,101 (전년도 거리노숙인 수의 97.9%)	전년도 거리노숙인 수의 85%	1,317	달성 (전년도 거리노숙인 수 초과)
주거지원건수(건)	653	460 (29.6% 감소)	전년대비 2% 증가	599	달성 (30.2% 증가)

주: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관리 비율과 주거지원건수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016년, 2017년 각각 제출한 실적의 평균 증가율로 전체 실적을 계산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2. 총괄평가

□ 과제별 종합평가

○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총 13개 과제의 평균 점수는 51.9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6.6점 상승

- 과제별로 보면 1-②, 2-①, 3-③ 과제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③, 3-① 과제는 전년대비 10점 이상 점수가 상승
- 광역자치단체는 현장보호활동과 거리노숙인 보호, 노숙인 교육훈련 사업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꾸준히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 다만 현장보호활동과 거리노숙인 보호가 높은 점수를 받기는 했으나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중앙정부는 1-①, 2-⑤, 과제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④, 2-⑤, 4-③ 과제는 전년대비 점수가 크게 상승함.

- 중앙정부는 노숙유입 예방과 고용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

년대비 점수와도 비교해볼 때 고용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노숙인 현황 조사와 실태조사는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함. 광역자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도 노숙인 현황 파악에 대해 어려운 점을 많이 피력한 것으로 보아, 향후 현황 조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의 개발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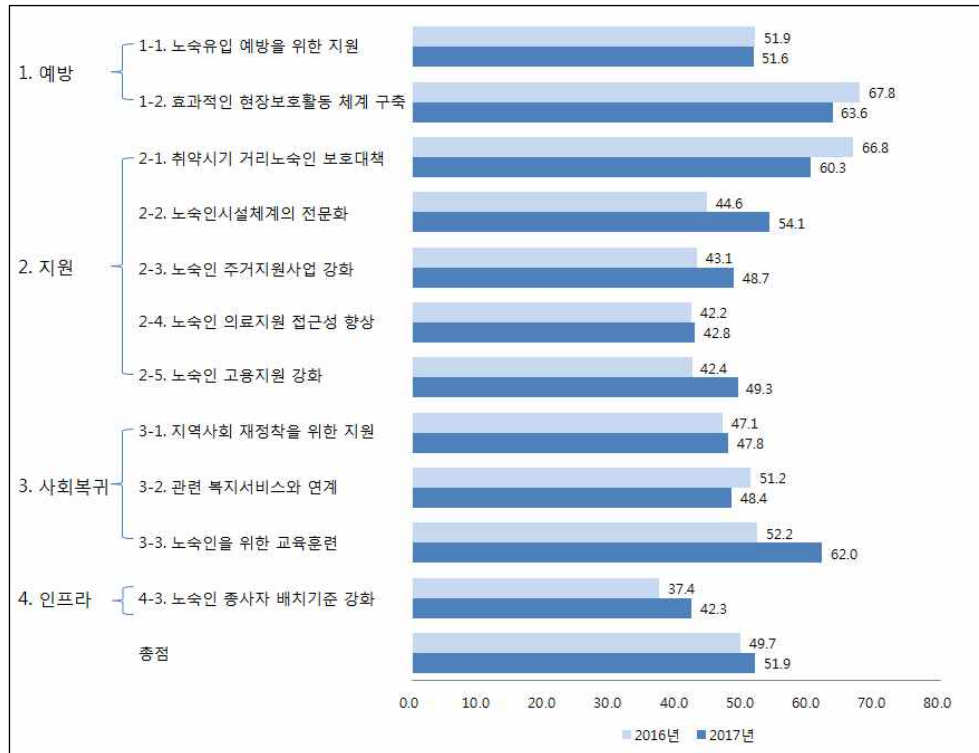
〈표 8-6〉 과제별 종합점수

과제명	평균		최대	최소	평균 비교(17-16년)	
	광역	중앙			광역	중앙
1-1.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51.6	73	89	26	1	17
1-2.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63.6	62	81	44	△8	6
2-1.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60.3	-	87	42	△2	-
2-2.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54.1	24	94	24	9	7
2-3.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48.7	35	96	25	10	15
2-4.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42.8	56	80	15	△4	51
2-5.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49.3	71	89	20	12	38
3-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47.8	-	81	0	14	-
3-2.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48.4	-	77	30	5	-
3-3.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62.0	-	84	42	1	-
4-1.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55	-	-	-	△16
4-2.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	37	-	-	-	9
4-3.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42.3	60	72	14	1	36
총점(평균)	51.9	52.6	84.5	25.6	6.6	22.4

주 1) 16년 대비 17년 평균 점수가 감소한 과제는 △ 표시.

2) 4-1, 4-2 과제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 아니므로 총점(평균)에 반영 안함.

[그림 8-1] 과제별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 비교(2016-2017)



□ 과제별 평가부분 평가

○ 과제별 평가부분 점수를 보면 1-②, 2-①, 2-②, 3-③ 과제가 각각의 지표별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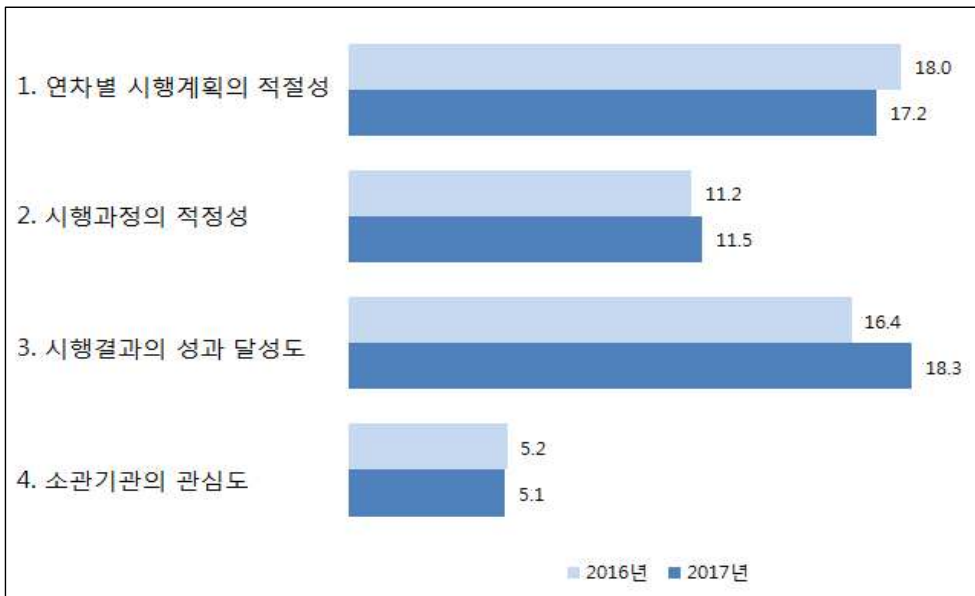
- 과제별 평가에서도 1-②, 2-① 과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볼 때, 현행 노숙인 정책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보호활동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지역사회 재정착, 복지서비스 연계,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수도 낮고 평가지표별로 봤을 때도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획득한 부분이 없음. 향후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8-7〉 과제별 평가부분 점수

과제명	시행계획의 적절성(30점)	시행과정의 적정성(30점)	성과 달성도(30점)	소관기관의 관심도(10점)	계(100점)
1-1.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17.7	11.5	17.8	4.7	51.6
1-2.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8.2	15.8	23.5	6.1	63.6
2-1.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7.9	15.4	20.9	6.2	60.3
2-2.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18.4	9.6	20.9	5.1	54.1
2-3.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7.4	9.8	17.4	4.1	48.7
2-4.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2.6	10.1	16.4	3.6	42.8
2-5.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7.5	8.9	18.1	4.8	49.3
3-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6.4	10.4	16.0	5.0	47.8
3-2.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6.3	10.2	16.6	5.4	48.4
3-3.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9	14.8	21.2	6.4	62.0
4-1.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15.0	17.0	17.0	7.0	56.0
4-2.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7.0	17.0	24.0	8.0	76.0
4-3.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15.8	10.1	13.0	4.8	42.3
총점(평균)	17.2	11.5	18.3	5.1	51.9

주: 4-1, 4-2 과제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 아니므로 총점(평균)에 반영 안함.

〔그림 8-2〕 과제별 평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 비교(2016-2017)



□ 과제별 평가결과

- 평가결과를 4개의 절대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해당 등급에 어떤 광역자치단체가 해당되는지를 평가한 결과, 먼저 총점은 매우우수 2개, 우수 5개, 보통 10개로 구분되었으며 미흡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음.
- 2016년은 매우우수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었으나 2017년에는 2개 지역이 해당된 점, 2016년 4개 지역이 우수인 것에 비해 2017년은 5개 지역이 우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점수가 상승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보통에 가장 많은 지역이 분포되어 있음.
- 종합점수를 통해 평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제별 등급을 보아도 1-②, 2-① 과제에서는 많은 지역이 매우우수와 우수에 해당하고 있으며 다른 과제에는 주로 보통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8-8〉 과제별 평가결과(2016-2017)

세부과제명	연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1-1.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2017	서울, 경기	대구, 전남, 강원, 세종, 경남	대전, 충북, 부산, 충남, 인천, 전북, 경북, 울산, 광주, 제주	-
	2016	서울, 인천, 세종, 대전	경기, 울산,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상, 부산, 충북, 대구, 광주, 경북	제주
1-2.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2017	대전, 대구, 서울	부산, 경기, 전남, 인천, 제주, 강원, 전북, 경남, 세종, 울산	경북, 충북, 광주, 충남	-
	2016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제주, 강원, 전북, 전남, 광주, 경북, 울산, 충북, 충남, 부산, 대구, 경남, 제주, 경기, 전남, 부산, 충북, 세종, 강원, 인천, 전남, 전북		
2-1.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2017	대전, 대구, 서울	광주, 강원, 경북, 경남, 울산, 제주, 세종, 충북,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충남	울산, 광주, 경북, 충남	-
	2016	서울, 경기, 대전, 인천	광주, 강원, 경북, 경남, 울산, 제주, 세종, 충북,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충남		

242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세부과제명	연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2-2.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2017	대전, 경남	서울, 대구, 전남, 경기, 제주	인천, 전북, 세종, 강원, 부산, 광주, 충북, 충남, 경북	울산
	2016	대전	인천, 경기, 경남, 전북	경북, 광주, 충북, 대구, 전남, 충남, 강원, 제주, 울산,	부산, 서울
2-3.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2017	서울, 대전, 대구	경남, 경기, 경북	부산, 전남, 제주, 세종, 충남, 인천, 전북, 강원, 울산, 광주	충북
	2016	서울, 대전	인천, 경기, 세종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충남, 제주, 울산, 충북, 강원	부산, 전북, 대구
2-4.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2017	서울, 대구	대전, 제주, 인천	부산, 경기, 전북,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전남, 울산	충남, 충북, 광주
	2016	인천, 대전	서울, 경기, 제주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북, 부산, 충남, 전남, 세종, 경북	울산, 경남
2-5.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2017	대전, 서울	대구, 제주, 경남, 경기	세종, 부산, 강원, 전북, 인천,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울산	광주
	2016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울산, 부산, 충북, 경남, 대구, 제주, 경북	강원
3-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2017	서울, 대전	경기, 제주, 대구, 부산, 전남	울산, 경남, 충북, 강원, 경북, 광주, 충남, 경북, 인천	세종
	2016	-	서울, 경기, 인천, 전남, 울산	전북, 경남, 대전, 강원, 제주, 부산, 세종, 경북, 광주, 충북, 대구, 충남, 경북, 충남, 전남,	-
3-2.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2017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서울, 제주	인천, 세종, 광주, 강원, 경남, 울산, 전북, 충북	-
	2016	-	대전, 경기, 인천, 부산, 서울, 충북, 경북	광주, 경남, 대구, 강원, 전북, 전남, 충남, 울산, 제주, 세종	-
3-3.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2017	서울, 경기, 대전	인천, 대구, 충북, 제주, 세종, 전북, 전남, 경남, 광주, 부산	울산, 강원, 충남, 경북	-
	2016	인천, 경기	서울, 제주, 대전, 대구, 전북, 경북	세종, 경남, 광주, 충북, 울산, 전남, 충남, 강원, 부산	-

세부과제명	연도	평가 등급(점수)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4-3.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017	-	대구, 경기, 경남, 전남, 광주, 서울	대전, 충남, 부산, 충북, 세종, 제주, 전북	경북, 인천, 울산, 강원
총점	2017	서울, 대전	대구, 경기, 경남, 전남, 부산, 제주	인천,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충남, 전북, 광주, 울산	-
	2016	-	대전, 인천, 경기, 서울	전북, 세종, 전남, 광주, 울산, 경북, 제주, 경남, 충북, 충남, 강원, 대구, 부산	-

주: 1) 4-1, 4-2 과제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 아니므로 평가결과 분류 안았으며, 4-3 과제는 201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가 아니므로 제시하지 않음

2)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별 평가결과

- 광역자치단체별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보면 2017년에는 서울과 대구, 대전이 매우우수와 우수에 해당하는 과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은 보통 등급에 많은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표 8-9〉 광역자치단체별 평가결과(2016~2017)

구분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서울	2017	2-3, 1-1, 2-5, 3-3, 3-1, 2-4, 1-2, 2-1	2-2, 3-2, 4-3		
	2016	2-1, 1-1, 1-2, 2-3	2-5, 3-3, 3-1, 2-4, 3-2		2-2
부산	2017		1-2, 3-2, 2-1, 3-1, 3-3	2-3, 1-1, 2-4, 2-2, 2-5, 4-3	
	2016		3-2, 2-1, 1-2	3-1, 1-1, 2-5, 3-3, 2-4	2-3, 2-2
대구	2017	2-1, 2-3, 2-4, 1-2, 3-2	3-3, 4-3, 2-2, 2-5, 1-1, 3-1		
	2016		1-2, 3-3, 2-1	3-2, 2-4, 2-2, 3-1, 1-1, 2-5	2-3
인천	2017		3-3, 1-2, 2-4, 2-1	2-2, 3-2, 2-5, 1-1, 2-3, 3-1	4-3,
	2016	1-2, 2-4, 3-3, 1-1, 2-1	2-2, 3-2, 2-5, 3-1, 2-3		

244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구분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광주	2017		4-3, 3-3	1-2, 2-1, 2-2, 3-2, 3-1, 1-1, 2-3	2-5, 2-4
	2016		2-1, 1-2	3-2, 3-3, 2-2, 2-4, 2-3, 2-5, 3-1, 1-1	
대전	2017	2-2, 2-3, 2-5, 2-1, 1-2, 3-1, 3-3, 3-2	2-4	4-3, 1-1,	
	2016	1-2, 2-1, 2-2, 2-4, 1-1, 2-3, 2-5	3-2, 3-3,	3-1	
울산	2017		1-2	3-1, 2-1, 3-3, 3-2, 1-1, 2-3, 2-5, 2-4,	2-2, 4-3,
	2016		1-1, 2-1, 1-2, 3-1	3-3, 3-2, 2-2, 2-5, 2-3	2-4
세종	2017		1-2, 3-3, 2-1, 1-1,	2-2, 2-5, 3-2, 2-3, 4-3, 2-4,	3-1
	2016	1-1, 1-2,	2-1, 2-3,	3-3, 3-1, 2-5, 3-2, 2-2, 2-4	
경기	2017	1-1, 3-3	1-2, 2-1, 4-3, 3-1, 3-2, 2-2, 2-3, 2-5,	2-4	
	2016	1-2, 2-1, 3-3	1-1, 3-2, 2-5, 2-2, 3-1, 2-3, 2-4		
강원	2017		1-2, 1-1, 2-1	2-2, 3-3, 3-1, 2-5, 3-2, 2-4, 2-3,	4-3
	2016		1-2, 2-1,	3-1, 3-2, 2-4, 1-1, 2-2, 3-3, 2-3	2-5
충북	2017		3-3, 2-1	1-2, 1-1, 3-1, 4-3, 2-2, 2-5, 3-2,	2-3, 2-4,
	2016		2-1, 1-2, 3-2,	3-3, 2-2, 2-4, 3-1, 1-1, 2-5, 2-3	
충남	2017			3-3, 1-1, 3-2, 1-2, 2-1, 4-3, 2-2, 2-5, 2-3, 3-1,	2-4
	2016		1-1, 1-2, 2-1,	2-5, 3-2, 3-3, 2-2, 2-3, 2-4, 3-1	
전북	2017		1-2, 3-3, 2-1	2-2, 2-5, 1-1, 3-1, 2-4, 2-3, 4-3, 3-2,	
	2016		1-2, 2-1, 2-2, 3-3,	3-1, 1-1, 2-5, 3-2, 2-4	2-3
전남	2017		1-2, 2-2, 1-1, 4-3, 3-3, 2-1, 3-1	2-3, 3-2, 2-5, 2-4,	
	2016		1-2, 2-1, 3-1,	2-3, 3-2, 1-1, 2-5, 3-3, 2-2, 2-4	
경북	2017		2-3	1-2, 3-2, 2-1, 3-3, 2-5, 2-2, 1-1, 2-4, 3-1,	4-3

구분		매우우수 (100~76점)	우수 (75~51점)	보통 (50~26점)	미흡 (25~0점)
경남	2016		2-1, 1-2, 3-2, 3-3,	2-2, 3-1, 2-3, 1-1, 2-4, 2-5	
	2017	2-2	2-1, 1-2, 4-3, 2-3, 2-5, 3-3, 1-1	3-1, 3-2, 2-4,	
	2016		2-1, 2-2, 1-2,	3-2, 3-1, 3-3, 2-3, 1-1, 2-5	2-4
제주	2017		3-3, 2-1, 2-4, 1-2, 2-5, 3-1, 2-2, 3-2	2-3, 1-1, 4-3	
	2016		1-2, 2-1, 3-3, 2-4,	3-1, 3-2, 2-2, 2-3, 2-5	1-1
계	2017	24	65	87	11
	2016	21	59	81	9

주: 1) 4-1, 4-2 과제는 광역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 아니므로 평가결과 분류 안았으며, 4-3 과제는 2016년에는 광역 자치단체 필수 평가과제가 아니므로 제시하지 않음

2) 2016년 평가 등급(점수)는 2017년 기준 절대등급으로 재분류하였음.

제2절 정책제언

1.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1-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노숙유입예방사업은 포괄성이 있었지만 다양성이 부족하였음.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노숙유입을 예방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적절함.

○ 주거취약계층의 노숙유입 예방을 위해서는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는 추진과정과 추진체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으나, 예산집행실적이 없었고,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제시가 미흡하였음.
- 고위험 예상자를 추정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율을 제시하는 등의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화의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향상이 있었다고 파악됨. 그렇지만, 여전히 명확한 성과지표와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하였음.
- 엄밀성과 정밀성이 부족하더라도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대책 수립 및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월별 혹은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는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되었던 바와 유사함.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적었음. 전년도 성과평가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세부사업별 또는 지원대상별로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거리노숙인수, 긴급복지지원, 현장보호활동 관리 비율, 주거지원 수 등으로 지표를 다층화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노숙유입예방 사업들이 있음.
 - 예컨대 서울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서비스’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등 특색이 있는 사업 전개함.
 - 경기의 경우 ‘찾아가는 주거취약계층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숙위기 가정을 사전에 발굴하여 복지 자원을 연계함. 2017년 5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관내 31개 시·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무한돌봄센터를 활용하여 고시원, 여관모텔, 찜질방, 비닐하우스 거주 주거취약 도민을 조사함. 총 50,814세대를 조사하여 취약계층 385가구를 발굴하여 공적자원으로 연계하였고, 243가구는 통합사례관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민간자원연계는 900건(128백만원)으로 집계됨.

- 대구의 경우 571백만원(시 400, 구군 171)의 예산을 배정하여 ‘달구벌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제도적 지원과 보호에서 소외된 노숙전락 위험가구를 발굴하여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함.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진료, 입원·외래의료지원을 위한 ‘달구벌건강주치의’ 제도 시행
- 효과적인 노숙 예방을 위해서는 주요 사회정책에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각 영역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주류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즉, 긴급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고용지원 등의 정책이 대응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사각지대 보완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는 앞에서 예를 든 서울, 대구, 경기 등의 프로그램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나. 2017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노숙유입예방을 위한 세부 과제는 크게 세 가지였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더 다양한 대책이 가능하겠지만, ①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강화 ②노숙위기 계층에 대한 공적자원 및 민간 자원 연계 강화 ③노숙위기 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 강화 등 세 가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성과지표를 하나로 한정하지 말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안내할 필요가 있음. 2017년의 경우 공동지표로 거리노숙인 수 감소, 주거지원 건수 증가를 제시하였는데, 이외에도 주거취약가구 발굴 건수, 노숙위기 계층에 대한 자원 연계 건수, 긴급복지지원 건수(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읍면동 희망도우미 교육활동 건수 등 다양한 지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러한 성과지표의 다양성을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②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제1차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두 번째 평가가 진행됨

○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체 평균은 물론 최고 및 최저 점수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 동 항목에 대한 전년도 평가점수는 평균 67.8점이었지만, 올해 평가의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최고 및 최저 점수 역시 전년도는 89점과 54점 이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81점과 44점으로 많이 낮아짐

□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별로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과 시행과정의 적정성 부문은 평균 점수가 하향되었으며,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및 소관기관의 관심도는 다소 점수가 상향됨

○ 결국 사업성과보다는 초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추진과정, 모니터링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전체적인 평가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보임

○ 평가 특성상 사업에 대한 성과가 주요한 비중을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정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하며, 사업진행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년대비 올해는 다소 준비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감소한 광역자치단체가 12곳에 이르고 있으며, 점수가 상향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분발과 관심이 필요

□ 경제위기 이후 지난 20여년간 대표적 취약계층인 노숙인 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하에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여러 부문에서 노숙인 보호의 취약성이 발견되

고 있다는 점에서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 등이 지역과 노숙인 특성에 부합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올해는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 보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통지표를 제안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율지표를 제시하도록 하였음
- 공통지표로 제시된 “현장보호활동 관리비율”과 “아웃리치 활동 횟수”는 동 항목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절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지표로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공통지표는 물론 자율지표 무도 양적 지표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년도 평가시 정성 평가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시되었으면 함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2-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 대책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제1차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취약시기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해 두 번째 평가가 진행됨
- 평가결과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임. 평균점수의 하락과 더불어 최고, 최저 및 중위 점수도 모두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에 대한 전년도 평가점수는 평균 66.8점이었지만, 이번 평가의 평균점수는 60.3점으로 6.5점이 줄어듦

- 최고 및 최저 점수 역시 전년도는 89점과 51점이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87점과 42점으로 최고 점수의 감소는 많지 않았지만, 최저점수는 많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전년대비 발전보다는 사업이 정체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노숙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개별개별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취약시기 노숙인 등의 보호가 노숙인 등의 생사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평가 결과가 낮아진 점은 노숙인 보호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 제고가 필요함.
- 세부 평가 항목별로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과 시행과정의 적정성 부문은 평균 점수가 하향되었으며,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및 소관기관의 관심도는 정체되거나 다소 점수가 상향됨
-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성과보다는 초기 사업 준비와 추진과정, 모니터링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옴
- 노숙인 보호와 사업의 안정적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노숙인 보호를 위한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하며, 사업진행 단계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년대비 올해는 취약시기 노숙인 보호를 위한 준비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감소한 광역자치단체가 12곳, 동일점수 1곳에 이르고 있으며, 점수가 상향된 곳은 4곳에 불과함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이번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 보호 및 관심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해 공통지표를 제안하였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율지표를 제시하도록 하였음
- 공통지표로 제시된 “폭염, 저체온증 사망자수”와 “거리노숙인 상담실적”의 두 가지 항목이었음

- 두 개의 지표중 거리노숙인 상담실적은 바람직한 지표로 판단됨. 반면에 “폭염, 저체온증 사망자수”는 적절한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 먼저 사망자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혹시 사망자 발생 시 성과를 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생명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인간윤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 만약 광역자치단체에서 사망자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예를 들어 “2명”이면 “2명”이 성과를 100%달성한 것인지 아니면 “1”명 혹은 “0”명이 성과를 달성한 것인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당연히 사망자가 없는 것이 성과를 달성한 것이지만,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지표는 차기에 수정될 필요가 있음

2-②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는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시설 보호 서비스가 긴급한 필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노숙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체계성과 전문성에서도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노숙 탈피 및 자립을 지향하는 시설체계의 전문화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구성됨
- 세 가지 주요 세부과제 (노숙인시설 유형에 맞는 시설·인력기준 마련,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절차 개선,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바탕으로 정부부처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매 년 적절한 사업계획과 구조를 바탕으로 노숙인 시설체계 전문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받아야 함

□ 우선 중앙부처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본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나 전문성이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도 평가에서 제언되었던 부분이 적절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2017년도 사업 역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미흡 등급으로 평가함
- 특히 시행과정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개선이 요구됨
- 노숙인 종합계획을 적절한 사업목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내용 역시 적절하고 풍부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간담회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일 수 있으나 주된 사업 내용이 되기는 어려움
- 또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로만 한정되어 있어 중앙부처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뚜렷한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사업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그 구성과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사업지표 역시 재검토가 요구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부처에 비해 비교적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 간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인 점수를 살펴보면 총 100점에 54.1점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사업 진행을 보여주었으나 최대값 94점 최소값 24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미흡 또는 낮은 점수를 평가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평가결과 및 세부평가 내용을 토대로 향후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추진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 사업의 순서나 흐름을 고려한 시계열적 구성을 따르지 않아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 체계 마련에 있어 부족함이 나타남
 - 이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활동내역이 모호하여 효과적 관리감독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함
 - 지표의 경우 공통지표 외 자율지표를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시하였으나 자율지표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됨
 - 공통지표 역시 제시된 측정산식을 따르지 않고 측정산식을 변경하거나 어떠한 측정산식을 따랐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자율지표는 공통지표에 담지 못하는 추가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을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광역자치단체가 2016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됨
 - 2016년도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변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몇몇의 광역자치단체 (서울, 대구, 경남, 전남, 제주 등)의 경우 작년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등급이 향상 되었음
 - 이에 비해 울산, 인천, 전북 등의 경우 작년에 비해 등급이 하향됨
- 평가 결과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은 효과적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부처는 본 사업 운영에 있어 역할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단순 협조요청이 아닌 사업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그리고 과정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정의 마련과 적절한 성과지표의 구성에 대

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성과지표, 특히 공동지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종합계획 및 사업목적에 적절한 세부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공통지표에 종합계획 세부과제별 하나의 지표를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본 영역의 경우 취약한 노숙인을 위한 시설보호 노력에 관련한 지표가 공통지표로 추가되는 것이 전체적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작성 안내에 있어 측정산식에 반드시 어떠한 산식을 적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
 - 자율지표는 광역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나 적어도 자율지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표 설정이나 제시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해야 함

2-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 있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35점을 기록하여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주거지원사업 중 시설보호 노력을 제외한 주거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우선공급과 같은 노숙인 중에서도 취약한 대상에 대한 사업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주거서비스를 주거공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후 관리 및 자립 지원과 같은 서비스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공급에 있어 지자체나 민간단체와의 역할 분담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에 대한 제시와 고민이 필요함
- 주거 공급 역시 올 해 목표치가 60호로 지난 년도에 비해 낮아진 목표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물량확대라는 사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며 목표를 하향 수정한 이유나 배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따라서 목표 달성도는 높을 수 있으나 지표의 효과성이나 적절성에 있어 긍정적 평가가 어려움
- 2016년도에 비해 보통 등급으로 상향되기는 하였으나 주거 분야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중요성과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개선해야 하는 영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49점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노력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 간 편차가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96점으로 가장 적극적인 주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북의 경우 25점으로 사업의 범위, 내용, 체계성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 내용에 있어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주거 공급에만 한정을 짓거나 주거 공급이 아닌 시설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종합계획에 시설보호에 대한 과제가 제시되어있으나 본 사업에서 핵심은 적절한 주거의 공급과 물량확대로 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함
- 노숙인 주거지원에 있어서도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이 시행과정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공통지표 외 자율지표를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는 총 9개 광역자치단체인 것으로

로 나타났으며 자율지표구성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나 많은 경우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공통지표 역시 달성도면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우수하나 공통지표에서 요구한 측정산식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값을 추가하여 달성도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서울, 대전의 경우 작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매우우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올 해 작년도에 미흡 평가를 받은 대구가 새롭게 매우우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단순 주거공급이 아닌 사후관리와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사업의 구성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노력도 요구되며 적절한 평가지표 구성 및 모니터링 강화의 노력 등이 향후 개선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나타남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종합계획 세부과제 중 시설보호 과제에 있어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2 사업과 중복되는 특징이 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닐 수 있음)
- 공통지표의 경우 측정산식을 따르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측정산식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측정산식 영역에 공란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고지가 필요함
- 취약계층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건수에 대한 지표 추가가 필요함

- 자율지표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지표를 제시할 때 자율지표의 적절성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2-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중앙부처 평가결과와 제언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영역의 경우는, 2017년도에는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수립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은 비교적 잘 확인되었으나 구체성 측면에서는 아직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시행과정의 적절성 영역에서는, 2017년도에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하였음. 그러나 구체성은 역시 부족하였고, 모니터링도 이루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에서는, 2017년도에는 주요사업성과도 제시되었고, 성과지표가 포괄적이고 적절하였으며, 실제로 달성한 목표달성률도 충분히 높았으나, 다만 소요예산이 없이 사업이 수행되었다는 부분이 사업성과의 신뢰성을 다소 떨어뜨렸다고 생각됨.
- 소관기관의 관심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 등이 잘 보이지 않았음. 향후 이의 정책적 중요성(혹은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그에 따른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와 제언

-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는 42.8점(100점 만점)으로서 다소 미흡한 수준임. 물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80점으로서 우수한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중위수가 36.0점으로서 주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 광역자치단

체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2016년도에는 ‘매우우수(100점~76점)’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인천과 대전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서울과 대구로 바뀌었음. 주목할 부분은 1년 사이에 대구가 ‘보통’에서 ‘매우우수’로 두 단계나 상승한 부분인데 이렇게 상승한 동인을 파악·전파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주무부서(및 노숙인 시설 등)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정도에서는, 공통지표인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연계관리’와 ‘위기관리(알콜중독자 포함) 개입’에 대하여 그 달성정도를 평가한 결과, ‘100% 미만’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수가 각각 6개(35.3%), 7개(41.2%)로 파악되었음. 게다가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목표수준도 매우 낮게 잡음으로써 달성률이 쉽게 100%를 넘는 경우들이 많았음에도 2016년도(17개 중에서 2곳만 100% 미만)보다도 더 낮은 이런 성과를 보인 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됨.
-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도에는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한 지자체가 7곳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3곳이 추가되어 10곳으로 늘었음. 그러나 여전히 7곳의 광역자치단체들은 ‘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임. 이는 2016년도 결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없이 사업을 했다면 이는 해당지역의 민간시설과 기관들이 애써 수행한 그들의 자체사업들을 마치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한 것처럼 위장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광역자치단체별 자율지표

- 대개는 공통지표인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연계관리’와 ‘위기관리(알콜중독자 포함) 개입’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광역자치단체들이 별도

로 구분하여 제시한 유사지표(자율성과지표)들을 보면 ‘무료진료 월 인원수’, ‘노숙인 신규 입원자 수’, ‘노숙인시설과 지정병원간 협약’, ‘찾아가는 의료상담진료소 운영’, ‘노숙인 정신 알콜치료 프로그램 연계’, ‘신규의료급여 책정’, ‘비급여 노숙인 의료지원 연계 수’, ‘무료진료소 지정’, ‘의료비지원 노숙인 수’ 등이 있었음.

- 일부 독특한 지표(자율성과지표)들이라면 서울의 ‘결핵검진 실적, 독감예방 실적’이나, 대전과 세종의 ‘건강검진 노숙인 수 / 건강검진 지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자율성과지표들을 굳이 새로운 공통지표로 넣을 필요는 없어 보임.

□ 성과지표에 대한 제언

- 다만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율지표들의 ‘측정산식(측정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인데, 이는 그들의 주무부서를 대상으로 보건사업기획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여전히 ‘산출(output)지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능한 한 ‘결과(outcome)지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⑤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사업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고용노동부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사업 구성을 마련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총점을 평가받음
- 그러나 평가 영역별로 보다 추가적인 노력과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이 발견됨

- 현재 편성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가 비교적 소극적이기 때문에 노숙인 고용확대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의 확대가 요구됨
 - 노숙인 취업지원 민간기관이 존재하나 전국 6개소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고용영역의 경우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얹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체계나 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전달체계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요구됨
-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본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 상황의 유지가 아닌 사업의 확대와 강화의 방향으로 전체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가 49.3점이며 (100점 만점)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보통 수준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사업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 사업을 미흡 또는 보통 수준으로 진행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개선을 펼칠 필요가 있음
 - 다른 영역과 비슷하게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의 내용 구성에 비해 사업의 체계와 운영과정, 모니터링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성과 지표 구성에 있어 공통지표의 측정산식을 철저하게 따를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자율지표 구성 시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고용확대나 고용자원발굴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 부분에 있어 비예산 운영이 7건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투입을 통한 장기적인 노숙인 고용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고용분야에 있어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의 확대와 강화, 그리고 노숙인 고용기회 증대를 위한 각각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노숙인 취업 연계를 민간 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발굴, 취업기회 확대 등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영역임
- 또한 사업의 체계 구성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의 구성이 요구됨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고용분야 평가에 있어 측정산식이 매우 불분명하여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평가산식을 철저하게 따를 것을 가이드 할 필요가 있음
- 자율지표 구성 시 적절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일자리 참여자 수 뿐 아니라 지역 내 노숙인 고용 관련 기관 수에 대한 지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3-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의 취지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나타남.
 - 예를 들어, 저축액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 금액 늘리기를 강조하거나, 자활시설

내 거주 노숙인 위주 사업에만 초점을 두기도 하였음.

□ 그럼에도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제안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나타남. 다만 이러한 사업 제안에 대한 구체적 운영 내용이 미흡하였음.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병원퇴원자나 시설퇴소자를 위해 주기적 건강관리 및 생활실태를 위해 사례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였음.

○ 인천은 노숙인시설 퇴소자나 임시주거지원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계획을 언급하였음.

○ 대구는 임대주택입주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재정착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보다 고무적으로는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음.

○ 서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시설퇴소 노숙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례관리자를 채용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음. 다만 업무과부하로 인한 소진, 인력 부족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숙제가 남겨져 있었음.

○ 경기의 경우, 노숙인 자산형성과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Re-start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노숙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음.

□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정착하게 되면 노숙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주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편입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함.

○ 대전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게 된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사례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었음. 특히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해 신설된 맞춤형복지팀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음.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은 크게 2가지 영역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하나는 자립정착금 지원 등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숙인 신용회복, 저축관리 등 지원 인원’과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를 위해 ‘노숙인 사례관리 인원’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중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를 위해 ‘노숙인 사례관리 인원’ 지표의 경우, 사례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숙인을 위한 사례관리 인지, 혹은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노숙인을 위한 사례관리 인지 좀 더 명확히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덧붙인다면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의 의미에 맞게, 시설 퇴소 이후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숙인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 인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음.

3-②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
-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은 하위세부 사업이 ‘관련서비스와 연계,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로 되어 있음. 그럼에도 둘 중의 하나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세부사업내용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음.
- 특히,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음. 즉,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세부 사업들에 노숙인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개입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남.

- 공통지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통지표와 중복되는 자율지표 설정이 나타남.
 - 공통지표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가 있음에도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자율지표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음.
 - 또는 정신보건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자율지표로 제시한 광역자치단체도 있었음. 그러나 정신보건서비스 역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안에 포함될 수 있어서, 이 자율지표 또한 공통지표에 포함될 수 있음.
-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사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남.
 -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역량을 습득하고 기술을 훈련하는 것에 초점화되어 있음. 이러한 역량과 훈련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제공이어야함.
 - 그렇다면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자활의지 강화와 취업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의 기능 상태에 따라 재활 기술도 제공되어야함.
 - 따라서 단순히 노숙인의 취업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외에도 노숙인의 유형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해보임.
 - 고령, 신체질환, 정신질환 등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 특히, 일상생활기술,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 기술, 건강관리기술, 경제적 생활유지 기술, 구직과 취업 유지 기술 등을 실질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공통지표인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수’에서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보다 명

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의 궁극적 목적은 탈노숙과 지역사회재정착임. 그렇다면 노숙인 시설 내에서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독립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범위가 초점화 되어야 할것임.

○ 단순히 노숙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한 것이 공통지표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 재정착에 필요한 노숙인의 역량과 기술 습득에 초점화된 프로그램이어야함. 이에 기반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며, 지역사회재정착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목표 설정 근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전년도 실적 대비 올해 실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측정은 올해 목표 대비 올해 실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함.

○ 당해 목표치에 대한 설정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작년대비 실적에 근거하거나 지역사회의 노숙인 현황 변동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을 반영하면서 합리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3-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은 그동안 거리노숙인의 재활 및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 있어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이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은 노숙인의 욕구에 적합한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시설의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내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는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과 거리노숙인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으로 설정되어 있음. 이를 통해 거리노숙인의 노숙인시설의 입소를 유도하고, 시설생활에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단체생활의 규칙 등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는 광역자치단체의 필수적인 과제임. 2017년 성과평가 결과, 평균 62.0점, 최고점수 84.0점, 최저 점수 42.0점, 중위값 58.0점, 표준편차 13.7점으로 나타나 전년도 평균점수 52.2점과 비교해 볼 때 10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 평가영역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소관기관의 관심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순서, 소관기관의 관심도 순으로 나타남.
-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한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우 우수(100~76점), 우수(75~51점), 보통(50~26점), 미흡(25~0점)으로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대전, 경기 등 3개이며, 그 중 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개, 보통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4개이며, 미흡의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0개임.
-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상승된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평가 부문별로 상세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점수 평균은 30점 만점에 20.9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의 세부지표 중에서는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광역자치단체별 편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세부지표로서 계획수립의 적합성 지표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우수 수준의 평가를 받음.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목적을 제시하였으며, 대체로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을 위한 교육 훈련의 사업목적이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고 제시된 사업목적이 종합계획 과제와 논리적 인과관계가 뚜렷하지만, 구체성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 특히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목적에는 사업대상인 거리노숙인과 시설노숙인을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점수 평균은 30점 만점에 14.8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시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지표 중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세부지표는 추진과정의 충실성 지표임. 각 광역자치단체는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평가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추진과정의 구체성에 대한 평가의 평균 점수가 4.1점으로 3개의 세부지표 중 가장 낮은 평가로 나타남. 낮은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거리노숙 → 시설입소 → 사회적응훈련 → 사회복귀’의 절차를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추진과정도 ‘연간(수시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어떤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기간동안 시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해 볼 때,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광역자치단체는 15개로서 88.2%로 전년도 9개 광역자치단체, 52.9%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일부 모니터링을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지 않거나 모니터링 결과의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 ‘정상 추진’ 등이 제시되어 실질적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향후 사업관리 및 집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도점검 이상의 실질적 개선 결과를 제시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 점수 평균은 30점 만점에 21.2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 지표 중 사업성과 이행정도 세부지표의 경우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요사업성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를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4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확인됨.
- 2017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88.3%~55.3%로 제시되고 있어 2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집행 실적의 경우 1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의 평가결과에서 8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예산으로 진행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과제 수행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계획하고 시행과정에서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모든 광역자치단체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개선의 한 대안으로 각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 수행에 보통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좀더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는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사업계획과 사업수행, 성과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거리노숙인 규모와 시설 특성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거리노숙인을 좀더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사업대상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목적과 추진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성과 중 주요사업성과 평가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요사업성과가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 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또한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이 향상되고 있지만 각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예산집행 실적을 프로그램별로 좀더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시행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통성과지표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숙인 수가 제시되어 있음.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성과평가를 통해 공통성과지표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목표치 설정과 실적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하였음. 하지만 해당연도의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가 전년도 대비 증가와 같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향후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은 전년도 실적과 광역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년도 평가에서도 제안하였듯이 성과지표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숙인 수 외에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사업목적과 일치하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고취, 대인관계 기술, 자존감 향상 등의 변화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사전-사후 비교를 위한 조사 설계, 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측정도구 활용(예를 들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 개별면담 및 포커스그룹인터뷰기법(FGI), 심층관찰 등의 질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4-①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를 수행하는 소관기관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시행은 선택사항임. 2017년도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세종, 강원 등 2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됨.

○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과제의 평가 점수는 55점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은 30점 만점에 18점,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30점 만점에 12점,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는 30점 만점에 17점, 소관기관의 관심도는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추진 과정으로 소관기관 스스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

는 등 소관기관의 관심도에서 우수로 평가될 수 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목적의 제시,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 제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사업성과 내용 제시 및 예산집행 진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선택 과제로 수행한 세종과 강원의 평가 점수는 각각 66점과 56점으로 모두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행계획의 적절성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징은 노숙인 현장보호활동과 연계한 실태 조사를 시행한 것이며 2017년 총 7회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강원도의 경우 소관기관의 관심도가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의 특징은 혹서기와 혹한기 등 취약시기에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조사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통해 추진된 점임.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세종과 강원에서 추진한 노숙인 현황 및 실태조사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추진하는 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모델이 되어 이를 반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게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초기 조사 시 과학적 조사 수행을 위하여 중앙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 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국단위의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와의 연계를 통해 조사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사 결과를 공유 및 활용할 필요가 있

음. 또한 초기 조사 시 과학적인 조사 수행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연구 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2017년도의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의 성과지표는 보건복지부와 2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 실시 여부 혹은 실태조사 참여 횟수를 설정함.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웃리치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어 아웃리치 참여인원과 같이 지표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의 목적이 노숙인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성과지표로 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거리노숙인 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거리 및 시설 노숙인 감소 비율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수립되거나 반영된 정책제안의 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4-②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중장기적인 노숙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실질적인 노숙인 지원을 위한 각 참여주체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내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①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② 중앙-광역-광역자치단체간 협력회의구조 마련, ③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를 수행하는 소관기간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시행은 선택사항이며, 2017년도에 과제 추진 결과를 제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 세종, 강원 등 3개임. 세종의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의 추진 내용을 제출하여 해당 과제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평가를 생략함.

□ 먼저 보건복지부의 실적을 평가해 보면,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의 평가 점수는 37점으로 보통 수준임. 노숙인 복지지원에 위한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민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워크숍 및 회의 개최의 사업내용에 대한 계획은 사업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 사업 주체 및 시행절차의 합리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또한, 모니터링,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분석과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부문에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지자체간 회의구조 마련,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선택 사항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를 제출한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과 강원도의 2017년도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수준으로 평가됨.

□ 대전의 경우 노숙인시설 등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 회의와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제의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음.

○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민간협력의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에서 참여 가능한 과제를 수행하여 매우 우수한 사례를 제시함. 또한 위원회의 성과로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노숙인 정책 자문의 성과를 보이는 결과가 제시되어 매우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음. 하지만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모니터링

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노숙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노숙인 유입 예방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목적이 강원도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의 내용이 제시되어 종합계획 과제와 사업목적 간 논리적 인과관계가 제시되어 있음. 하지만 노숙인시설 종사자 워크숍, 노숙인 정책 제안 및 우수프로그램 공유는 사업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또한 1회의 워크숍으로 노숙인 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에 미흡한 수준으로 중장기적인 협의회 지속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나. 2018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2017년도의 보건복지부 성과지표는 협의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간, 중앙-광역자치단체간, 공공-민간의 소통을 위한 회의개최 횟수로 제시되었지만 앞서 제시한 대로 보건복지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018년도의 보건복지부 성과지표는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내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협의체, 중앙-광역-광역자치단체간 협력 회의구조,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 상하반기의 2회 회의 개최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성과지표로서 협의체를 통해 협의된 안건의 수가 제시되어 적절한 성과지표로 평가됨. 추가로 광역자치단체 및 민간으로부터 수립된 정책의견 수와 정책에 반영된 수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한 정책 모니터링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가.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과제에 대한 제언

-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는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임
 -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예산부처를 설득시켜야 한다는 난제가 있지만, 시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처우’라는 점에서 노숙인 복지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단기적으로는 생활복지사(혹은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을 정신요양시설 기준(25명당 1명)에 맞추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담요원 등 다른 전문가의 배치기준을 더 강화하여야 함.
 - 현행 노숙인자활시설 중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 1명, 상담요원 1명,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조리원 1명의 기준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업무배치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인력의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인력의 질과 전문성 영역임.
 - 현재 모든 노숙인 재활시설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인 이상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국에 약 40명 이상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노숙인 재활시설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실제 노숙인 재활시설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근무조건, 임금수준 등을 개선하여 전문인력이 노숙인시설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가 필요함.
 -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처우 수준이 여타의 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실정임.

- 다음의 <표 8-10>사회복지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보수현황을 살펴보면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에 비해 약 10%포인트 낮은 임금수준임.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노숙인시설종사자는 가이드라인의 82.4% 수준인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은 94.1%로서 이에 비해 11.7% 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정신요양시설 90.6%에 비해서는 8.2%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음.

<표 8-10> 사회복지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보수 현황(2018)

(단위: 천원, %)

구분	가이드라인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평균	2,900	2,390	82.4	2,729	94.1	2,626	90.6
원장	3,398	2,813	82.8	3,210	94.5	3,089	90.9
사무국장	3,064	2,451	80.0	2,897	94.5	2,788	91.0
생활복지사	2,798	2,235	79.9	2,629	94.0	2,529	90.4
생활지도원	2,340	2,061	88.1	2,180	93.2	2,098	89.7

나. 2017년 성과지표 및 평가관련 제언

□ 이 분야의 사업성과에 평가는 2016년과 2017년에 큰 변화가 있었음. 2016년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필수 영역이 아니었으나 2017년에는 필수 평가영역으로 변화되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하기에 사업의 과제설정이 애매한 측면이 있음.

○ 정책과제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로 단순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라는 차원에서 종사자 배치 확대, 제공인력

의 전문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사업과제를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상과 같이 사업과제를 세분화하여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매년 추진 과제가 유지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연차적 추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내용변경은 ‘종합계획’에 명문화된 사항이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2019년에 제 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2차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 분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세부과제가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시설 종사자 1인당 담당 노숙인 규모를 감축하는 문제
 - 둘째, 시설종사자의 전문화 문제(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 확대와 관련 규정 개정의 문제)
 - 셋째,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 평가지표도 이러한 세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예산을 배정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 박은철(2015). 노숙 진입에서 탈출까지 경로와 정책과제. 주거복지 컨퍼런스 자료집, pp.351-364.
- 박세경 외(20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2016),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6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 서종균 외(2012).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보건복지부.
- 이삼식 외(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외(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외(2007),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외(2014), 복지전달체계 개편평가 및 확산방안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원오 외(2014). 노숙인 발생원인 규명 및 주류복지체계 연계방안. 성공회대학교·보건복지부.

〈부록〉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평가기준	지표성격	배점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종합계획 과제와의 일치성 여부 (종합계획의 내용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	정성	5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	- 사업목적의 논리성, 구체성 여부 (사업목적에서 과제 내용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로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정성	10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사업내용의 연계성 여부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 주요사업내용과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	정성	5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	-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여부 -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명확성, 합리성 여부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정성	10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	-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충실성 여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성 여부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 추진체계와 추진과정의 연관성, 추진체계와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성에 대한 평가)	정성	10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	- 세부 추진내용의 구체성 여부 - 추진과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 추진과정에 대해, 세부추진내용에 대한 평가)	정성	10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사업추진실적 내용 중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정성	10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평가기준	지표성격	배점	
3.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 사업성과 결과에 대한 달성 여부 - 사업성과에 대한 수요자 충족 여부 (사업성과 내용 중 주요사업성과의 정책효과, 수요자 및 결과 내용 등 평가)	정성	5	30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여부 - 측정방법 및 실적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사업성과 내용 중 성과지표 목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	혼합	10	
	③ 목표달성률	-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 (사업성과 내용 중 실적, 달성률에 대한 평가)	정량	10	
	④ 예산집행 실적	-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평가)	정량	5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에 대한 평가)	혼합	10	10
소계				100	

과제명 과제번호와 과제명 기입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30점)	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 세부추진과명을 그대로 기입한 경우 감점		
	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 사업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0점		
	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된 경우 가점		
	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가점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0점)	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가점		
	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 월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가점		
	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경우 가점		
3.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 (30점)	① 사업성과 이행정도(5점) ※ 주요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0점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 목표치가 소관기관의 현황을 반영한 경우 가점		
	③ 목표달성률(10점) ※ 목표치의 방향이 종합계획의 추진방향과 일치할 경우 가점		
	④ 예산집행 실적(5점) ※ 비예산인 경우 0점, 단, 비예산 근거가 명확할 경우 가점		
4. 소관기관의 관심도 (10점)	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 소관기관의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총 점			

□ 종합평가의견

평가 부 문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평가 지 표	1-① 종합계획과의 연계성(5점)	지 표 유 형	정량(), 정성(○), 혼합()																																		
<p>□ 종합계획의 세부과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평가</p> <p>○ 과제별 ‘종합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판단 - 세부추진과제명을 그대로 기입한 경우는 감점 <p>○ 2017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가능</p> <p>□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p> <table> <tr> <th>등급</th><th>기준</th><th>점수</th><th>기입</th></tr> <tr> <td rowspan="3">우수</td><td>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반영</td><td>4~5</td><td></td></tr> <tr> <td>- 모든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시행계획서와 일치함</td><td>5</td><td></td></tr> <tr> <td>- 모든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2017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되었으나, 변경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함</td><td>4</td><td></td></tr> <tr> <td rowspan="3">보통</td><td>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일부만 반영</td><td>2~3</td><td></td></tr> <tr> <td>- 내용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나, 2017년 시행계획서와 일치함</td><td>3</td><td></td></tr> <tr> <td>- 내용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2017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되었으나, 변경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음</td><td>2</td><td></td></tr> <tr> <td rowspan="3">미흡</td><td>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음</td><td>0~1</td><td></td></tr> <tr> <td>-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으나, 2017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되었으나, 변경내용에 대해 작성하지 않음.</td><td>1</td><td></td></tr> <tr> <td>-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td><td>0</td><td></td></tr> </table> <p>□ 검토의견</p> <p>○</p>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반영	4~5		- 모든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시행계획서와 일치함	5		- 모든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2017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되었으나, 변경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함	4		보통	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일부만 반영	2~3		- 내용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나, 2017년 시행계획서와 일치함	3		- 내용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2017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되었으나, 변경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음	2		미흡	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음	0~1		-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으나, 2017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되었으나, 변경내용에 대해 작성하지 않음.	1		-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	0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반영	4~5																																			
	- 모든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시행계획서와 일치함	5																																			
	- 모든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2017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되었으나, 변경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함	4																																			
보통	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일부만 반영	2~3																																			
	- 내용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나, 2017년 시행계획서와 일치함	3																																			
	- 내용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2017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되었으나, 변경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음	2																																			
미흡	종합계획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중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음	0~1																																			
	-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으나, 2017년 시행계획서 대비 변경되었으나, 변경내용에 대해 작성하지 않음.	1																																			
	-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	0																																			

평가 부 문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평가 지 표	1-② 계획수립의 적합성(10점)	지 표 유 형	정량(),정성(○),혼합()

□ 사업목적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평가

○ 과제별 ‘사업목적’에 대한 내용이 논리적 인과관계가 분명한지,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 논리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면 상향조정 가능함.

○ 만약, 사업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0점을 부여함.

□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종합계획 과제와 사업목적간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됨	7~10	
	- 논리적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됨	9~10	
	- 논리적 인과관계가 뚜렷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7~8	
보통	종합계획 과제와 사업목적간의 논리적 인과관계와 구체성 중 일부만 반영되어 작성됨	3~6	
	- 논리적 인과관계는 다소 부족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됨	5~6	
	- 논리적 인과관계도 다소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3~4	
미흡	종합계획 과제와 사업목적간의 논리적 인과관계와 구체성 모두 반영되지 않음	0~2	
	- 논리적 인과관계가 매우 부족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함	1~2	
	- 논리적 인과관계도 매우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사업목적이 제시되지 않음	0	

□ 검토의견

○

평가 부 문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평가 지 표	1-③ 사업내용의 적합성(5점)	지 표 유 형	정량(), 정성(○), 혼합()																																		
<p>□ 사업목적과 사업추진실적의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p> <p>○ 사업목적의 내용과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분명한지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규모, 대상, 지원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상향조정 가능함 - 추진배경의 경우 소관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한 경우 상향조정 가능함 <p>□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th>기준</th><th>점수</th><th>기입</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우수</td><td>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높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됨</td><td>4~5</td><td></td></tr> <tr> <td>- 연계성이 매우 높으며, 구체적이고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어 제시됨</td><td>5</td><td></td></tr> <tr> <td>- 연계성은 매우 높으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td><td>4</td><td></td></tr> <tr> <td rowspan="3">보통</td><td>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의 연계성과 구체성 중 일부만 반영되어 작성됨</td><td>2~3</td><td></td></tr> <tr> <td>- 연계성이 다소 낮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소관기관의 특성도 고려하려고 노력하였음</td><td>3</td><td></td></tr> <tr> <td>- 연계성이 다소 낮으며, 구체적이지 않거나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td><td>2</td><td></td></tr> <tr> <td rowspan="3">미흡</td><td>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의 연계성과 구체성 모두 반영되지 않음</td><td>0~1</td><td></td></tr> <tr> <td>- 연계성이 매우 낮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td><td>1</td><td></td></tr> <tr> <td>- 연계성이 매우 낮으며, 구체적이지 않으며, 소관기관의 특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음</td><td>0</td><td></td></tr> </tbody> </table> <p>□ 검토의견</p> <p>○</p>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높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됨	4~5		- 연계성이 매우 높으며, 구체적이고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어 제시됨	5		- 연계성은 매우 높으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4		보통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의 연계성과 구체성 중 일부만 반영되어 작성됨	2~3		- 연계성이 다소 낮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소관기관의 특성도 고려하려고 노력하였음	3		- 연계성이 다소 낮으며, 구체적이지 않거나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2		미흡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의 연계성과 구체성 모두 반영되지 않음	0~1		- 연계성이 매우 낮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1		- 연계성이 매우 낮으며, 구체적이지 않으며, 소관기관의 특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음	0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높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됨	4~5																																			
	- 연계성이 매우 높으며, 구체적이고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어 제시됨	5																																			
	- 연계성은 매우 높으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4																																			
보통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의 연계성과 구체성 중 일부만 반영되어 작성됨	2~3																																			
	- 연계성이 다소 낮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소관기관의 특성도 고려하려고 노력하였음	3																																			
	- 연계성이 다소 낮으며, 구체적이지 않거나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2																																			
미흡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의 연계성과 구체성 모두 반영되지 않음	0~1																																			
	- 연계성이 매우 낮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소관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1																																			
	- 연계성이 매우 낮으며, 구체적이지 않으며, 소관기관의 특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음	0																																			

평가 부 문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평가 지 표	1-④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지 표 유 형	정량(),정성(○),혼합()

□ 사업추진실적 중 주요사업 내용과 추진체계(절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평가

○ 주요사업내용이 적절하며, 이에 따른 사업 주체가 적합한지, 시행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 적절성, 명확성, 합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경우 상향조정 가능함

□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사업목적에 따른 주요사업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 주체 및 시행절차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됨	7~10	
	- 적절성, 명확성, 합리성, 구체성을 모두 반영되었음	9~10	
	- 적절성, 명확성, 합리성은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7~8	
보통	사업목적에 따른 주요사업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업 주체 및 시행절차의 명확성, 합리성 중 일부만 작성됨	3~6	
	- 적절성은 반영되었으나, 명확성이나 합리성은 일부만 반영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함	5~6	
	- 적절성은 반영되었으나, 명확성이나 합리성은 일부만 반영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3~4	
미흡	사업목적에 따른 주요사업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사업 주체 및 시행절차의 명확성, 합리성도 반영되지 않음	0~2	
	- 적절하지는 않지만, 명확성이나 합리성은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함	2	
	- 적절하지는 않지만, 명확성이나 합리성은 일부만 반영.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제시하지 않음	1	
	- 적절성, 명확성, 합리성, 구체성 모두 반영 안됨	0	

□ 검토의견

○

평가 부 문	2. 시행과정의 적정성																																				
평가 지 표	2-①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지 표 유 형	정량(), 정성(○), 혼합()																																		
<p>□ 사업추진실적 중 사업시행 절차와 추진과정의 일정, 사업성과의 목표에 대한 평가</p> <p>○ 사업시행 절차와 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있으며, 사업시행 절차가 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평가</p> <p>- 연관성이나 적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경우 상향조정 가능함</p> <p>□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th>기준</th><th>점수</th><th>기입</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우수</td><td>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있으며,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td><td>7~10</td><td></td></tr> <tr> <td>-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함</td><td>9~10</td><td></td></tr> <tr> <td>-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td><td>7~8</td><td></td></tr> <tr> <td rowspan="3">보통</td><td>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성 중 일부만 반영됨</td><td>3~6</td><td></td></tr> <tr> <td>- 연관성, 적극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제시함</td><td>5~6</td><td></td></tr> <tr> <td>- 연관성, 적극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도 제시하지 않음</td><td>3~4</td><td></td></tr> <tr> <td rowspan="3">미흡</td><td>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없으며,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음</td><td>0~2</td><td></td></tr> <tr> <td>-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으로는 제시하려고 노력함</td><td>1~2</td><td></td></tr> <tr> <td>-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도 제시하지도 않음</td><td>0</td><td></td></tr> </tbody> </table> <p>□ 검토의견</p> <p>○</p>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있으며,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	7~10		-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함	9~10		-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7~8		보통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성 중 일부만 반영됨	3~6		- 연관성, 적극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제시함	5~6		- 연관성, 적극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도 제시하지 않음	3~4		미흡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없으며,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음	0~2		-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으로는 제시하려고 노력함	1~2		-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도 제시하지도 않음	0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있으며,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	7~10																																			
	-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함	9~10																																			
	-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7~8																																			
보통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성 중 일부만 반영됨	3~6																																			
	- 연관성, 적극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제시함	5~6																																			
	- 연관성, 적극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도 제시하지 않음	3~4																																			
미흡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추진과정이 연관성이 없으며,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음	0~2																																			
	-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으로는 제시하려고 노력함	1~2																																			
	- 연관성, 적극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도 제시하지도 않음	0																																			

평가 부 문	2. 시행과정의 적정성																																				
평가 지 표	2-② 추진과정의 구체성(10점)	지 표 유 형	정량(), 정성(○), 혼합()																																		
<p>□ 사업추진실적 중 추진과정의 일정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지에 대한 평가</p> <p>○ 사업시행 절차에 맞게 추진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사업추진 일정(시계열)이 추진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p> <p>- 단, 월별, 분기별로 제시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 그에 상응할 만한 기간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한 경우 상향조정 가능함</p> <p>□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p> <table> <tr> <th>등급</th><th>기준</th><th>점수</th><th>기입</th></tr> <tr> <td rowspan="3">우수</td><td>사업시행 절차에 맞게 추진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사업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됨</td><td>7~10</td><td></td></tr> <tr> <td>-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월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td><td>9~10</td><td></td></tr> <tr> <td>-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td><td>7~8</td><td></td></tr> <tr> <td rowspan="3">보통</td><td>사업시행 절차에 맞게 추진이 적시성, 체계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사업추진 일정의 구체성이 부족하게 제시됨</td><td>3~6</td><td></td></tr> <tr> <td>- 적시성, 체계성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월별로 구체성이 부족하게 제시함</td><td>5~6</td><td></td></tr> <tr> <td>- 적시성, 체계성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분기별로 구체성이 부족하게 제시함</td><td>3~4</td><td></td></tr> <tr> <td rowspan="3">미흡</td><td>사업시행 절차에 맞게 추진이 적시성, 체계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 일정이 모호하게 제시됨</td><td>0~2</td><td></td></tr> <tr> <td>-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으며, 월별 기입은 하였으나 모호하게 제시됨</td><td>1~2</td><td></td></tr> <tr> <td>-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기입은 하였으나 모호하게 제시됨</td><td>0</td><td></td></tr> </table> <p>□ 검토의견</p> <p>○</p>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사업시행 절차에 맞게 추진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사업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7~10		-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월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9~10		-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7~8		보통	사업시행 절차에 맞게 추진이 적시성, 체계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사업추진 일정의 구체성이 부족하게 제시됨	3~6		- 적시성, 체계성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월별로 구체성이 부족하게 제시함	5~6		- 적시성, 체계성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분기별로 구체성이 부족하게 제시함	3~4		미흡	사업시행 절차에 맞게 추진이 적시성, 체계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 일정이 모호하게 제시됨	0~2		-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으며, 월별 기입은 하였으나 모호하게 제시됨	1~2		-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기입은 하였으나 모호하게 제시됨	0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사업시행 절차에 맞게 추진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사업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7~10																																			
	-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월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9~10																																			
	-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7~8																																			
보통	사업시행 절차에 맞게 추진이 적시성, 체계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사업추진 일정의 구체성이 부족하게 제시됨	3~6																																			
	- 적시성, 체계성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월별로 구체성이 부족하게 제시함	5~6																																			
	- 적시성, 체계성 중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분기별로 구체성이 부족하게 제시함	3~4																																			
미흡	사업시행 절차에 맞게 추진이 적시성, 체계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 일정이 모호하게 제시됨	0~2																																			
	-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으며, 월별 기입은 하였으나 모호하게 제시됨	1~2																																			
	- 적시성, 체계성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기입은 하였으나 모호하게 제시됨	0																																			

평가 부 문	2. 시행과정의 적정성																																				
평가 지 표	2-③ 사업관리의 적정성(10점)	지 표 유 형	정량(), 정성(○), 혼합()																																		
<p>□ 사업추진실적 중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p> <p>○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체계의 적절성, 사업추진 상황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여부, 사업관리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평가</p> <p>- 단,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 그에 상응할 만한 모니터링 기간(일시적, 상시적, 수시적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한 경우 상향조정 가능함</p> <p>□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p> <table> <tr> <th>등급</th><th>기준</th><th>점수</th><th>기입</th></tr> <tr> <td rowspan="3">우수</td><td>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음</td><td>7~10</td><td></td></tr> <tr> <td>-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물을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td><td>9~10</td><td></td></tr> <tr> <td>-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물을 적절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td><td>7~8</td><td></td></tr> <tr> <td rowspan="3">보통</td><td>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는지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중 일부만 반영되어 제시하였음</td><td>3~6</td><td></td></tr> <tr> <td>-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제시함</td><td>5~6</td><td></td></tr> <tr> <td>-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td><td>3~4</td><td></td></tr> <tr> <td rowspan="3">미흡</td><td>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았음</td><td>0~2</td><td></td></tr> <tr> <td>-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음</td><td>1~2</td><td></td></tr> <tr> <td>-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음</td><td>0</td><td></td></tr> </table> <p>□ 검토의견</p> <p>○</p>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음	7~10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물을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	9~10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물을 적절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7~8		보통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는지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중 일부만 반영되어 제시하였음	3~6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제시함	5~6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3~4		미흡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았음	0~2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음	1~2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음	0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음	7~10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물을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	9~10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물을 적절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7~8																																			
보통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는지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중 일부만 반영되어 제시하였음	3~6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제시함	5~6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중 일부만 반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3~4																																			
미흡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관리 및 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았음	0~2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음	1~2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진행여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결과물 적절성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음	0																																			

평가 부 문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평가 지 표	3-① 사업성과 이행정도 (5점)	지 표 유 형	정량(), 정성(○), 혼합()																																					
<p>□ 사업성과 중 주요사업성과 평가</p> <p>○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 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있었는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기관의 현황과 비교하여 목표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p>○ 사업이 수혜자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 작성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 및 수혜자 중심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가능함 <p>○ 만약, 사업성과 내용 중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주요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0점을 부여함</p> <p>□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p> <table> <tr> <th>등급</th><th>기준</th><th>점수</th><th>기입</th></tr> <tr> <td rowspan="3">우수</td><td>노숙인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됨</td><td>5~4</td><td></td></tr> <tr> <td>-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되어 이에 따른 결과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음</td><td>5</td><td></td></tr> <tr> <td>-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이에 따른 결과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음</td><td>4</td><td></td></tr> <tr> <td rowspan="3">보통</td><td>노숙인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가 있었으나,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되지 않음</td><td>3~2</td><td></td></tr> <tr> <td>-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나,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td><td>3</td><td></td></tr> <tr> <td>-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음</td><td>2</td><td></td></tr> <tr> <td rowspan="4">미흡</td><td>노숙인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가 없었고,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음</td><td>1~0</td><td></td></tr> <tr> <td>- 주요사업성과에서 정책효과가 없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나, 수행된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함</td><td>1</td><td></td></tr> <tr> <td>- 주요사업성과에서 정책효과가 없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고, 수행된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없음</td><td>0</td><td></td></tr> <tr> <td>- 주요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td><td></td><td></td></tr> </table> <p>□ 검토의견</p> <p>○</p>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노숙인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됨	5~4		-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되어 이에 따른 결과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음	5		-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이에 따른 결과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음	4		보통	노숙인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가 있었으나,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되지 않음	3~2		-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나,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3		-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음	2		미흡	노숙인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가 없었고,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음	1~0		- 주요사업성과에서 정책효과가 없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나, 수행된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함	1		- 주요사업성과에서 정책효과가 없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고, 수행된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없음	0		- 주요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노숙인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됨	5~4																																						
	-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되어 이에 따른 결과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음	5																																						
	-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이에 따른 결과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음	4																																						
보통	노숙인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가 있었으나,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수행되지 않음	3~2																																						
	-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있었으나,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3																																						
	- 주요사업성과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음	2																																						
미흡	노숙인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가 없었고,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음	1~0																																						
	- 주요사업성과에서 정책효과가 없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나, 수행된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함	1																																						
	- 주요사업성과에서 정책효과가 없었으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고, 수행된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없음	0																																						
	- 주요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평가 부 분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평가 지 표	3-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지 표 유 형	정량(), 정성(), 혼합(○)																																									
<p>□ 사업성과 중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정성, 일관성을 평가</p> <p>○ 성과지표가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세부과제의 사업목적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지 평가</p> <p>-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p> <p>○ 성과지표가 세부과제에서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한지 평가</p> <p>- 종합계획 과제, 사업목적,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지를 평가</p> <p>○ 성과지표의 측정상식과 실적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신뢰성있는 자료인지 평가</p> <p>- 측정상식은 광역자치단체 현황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실적산출근거 자료 혹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함</p> <p>○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설정된 경우 상향조정 가능함</p> <p>□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th>기준</th><th>점수</th><th>기입</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우수</td><td>1. 성과지표가 노숙인 종합계획의 해당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td><td rowspan="4">7~10</td><td rowspan="4"></td></tr> <tr> <td>2. 성과지표가 세부 과제별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한지 여부</td></tr> <tr> <td>3. 성과지표의 측정상식과 실적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td></tr> <tr> <td>- '1', '2', '3' 모두 해당하며, 광역자치단체 현황에 맞는 현실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함</td></tr> <tr> <td></td><td>- '1', '2', '3' 모두 해당함</td><td>9~10</td><td></td></tr> <tr> <td rowspan="4">보통</td><td>1. 성과지표가 노숙인 종합계획의 해당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td><td rowspan="4">3~6</td><td rowspan="4"></td></tr> <tr> <td>2. 성과지표가 세부 과제별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한지 여부</td></tr> <tr> <td>3. 성과지표의 측정상식과 실적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td></tr> <tr> <td>- '1', '2', '3' 중 2개 해당함</td></tr> <tr> <td></td><td>- '1', '2', '3' 중 1개 해당함</td><td>5~6</td><td></td></tr> <tr> <td rowspan="4">미흡</td><td>1. 성과지표가 노숙인 종합계획의 해당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td><td rowspan="4">0~2</td><td rowspan="4"></td></tr> <tr> <td>2. 성과지표가 세부 과제별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한지 여부</td></tr> <tr> <td>3. 성과지표의 측정상식과 실적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td></tr> <tr> <td>- '1', '2', '3' 중 해당사항 없음</td></tr> <tr> <td></td><td>- '1', '2', '3' 중 해당사항이 없으며, 광역자치단체 현황과 관계없이 비현실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함</td><td>1~2</td><td></td></tr> <tr> <td></td><td></td><td>0</td><td></td></tr> </tbody> </table> <p>□ 검토의견</p> <p>○</p>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1. 성과지표가 노숙인 종합계획의 해당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7~10		2. 성과지표가 세부 과제별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한지 여부	3. 성과지표의 측정상식과 실적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1', '2', '3' 모두 해당하며, 광역자치단체 현황에 맞는 현실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함		- '1', '2', '3' 모두 해당함	9~10		보통	1. 성과지표가 노숙인 종합계획의 해당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3~6		2. 성과지표가 세부 과제별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한지 여부	3. 성과지표의 측정상식과 실적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1', '2', '3' 중 2개 해당함		- '1', '2', '3' 중 1개 해당함	5~6		미흡	1. 성과지표가 노숙인 종합계획의 해당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0~2		2. 성과지표가 세부 과제별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한지 여부	3. 성과지표의 측정상식과 실적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1', '2', '3' 중 해당사항 없음		- '1', '2', '3' 중 해당사항이 없으며, 광역자치단체 현황과 관계없이 비현실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함	1~2				0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1. 성과지표가 노숙인 종합계획의 해당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7~10																																										
	2. 성과지표가 세부 과제별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한지 여부																																											
	3. 성과지표의 측정상식과 실적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1', '2', '3' 모두 해당하며, 광역자치단체 현황에 맞는 현실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함																																											
	- '1', '2', '3' 모두 해당함	9~10																																										
보통	1. 성과지표가 노숙인 종합계획의 해당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3~6																																										
	2. 성과지표가 세부 과제별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한지 여부																																											
	3. 성과지표의 측정상식과 실적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1', '2', '3' 중 2개 해당함																																											
	- '1', '2', '3' 중 1개 해당함	5~6																																										
미흡	1. 성과지표가 노숙인 종합계획의 해당 세부과제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0~2																																										
	2. 성과지표가 세부 과제별 수행된 사업들의 결과로 적정한지 여부																																											
	3. 성과지표의 측정상식과 실적산출근거가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1', '2', '3' 중 해당사항 없음																																											
	- '1', '2', '3' 중 해당사항이 없으며, 광역자치단체 현황과 관계없이 비현실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함	1~2																																										
		0																																										

평가 부 문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평가 지 표	3-③ 목표달성률(10점)	지 표 유 형	정량(○),정성(),혼합()																																		
<p>□ 사업성과 중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p> <p>○ 각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달성률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률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를 배분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 방향이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추진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치하는 경우 상향조정 가능함 <p>□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p> <table> <tr> <th>등급</th><th>기준</th><th>점수</th><th>기입</th></tr> <tr> <td rowspan="3">우수</td><td>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인 경우</td><td>7~10</td><td></td></tr> <tr> <td>-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이며, 성과지표의 목표치 방향이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추진방향과 일치함</td><td>9~10</td><td></td></tr> <tr> <td>-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임</td><td>7~8</td><td></td></tr> <tr> <td rowspan="3">보통</td><td>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70~89% 인 경우</td><td>3~6</td><td></td></tr> <tr> <td>-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80~89% 임</td><td>5~6</td><td></td></tr> <tr> <td>-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70~79% 임</td><td>3~4</td><td></td></tr> <tr> <td rowspan="3">미흡</td><td>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인 경우</td><td>0~2</td><td></td></tr> <tr> <td>-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60~69% 임</td><td>1~2</td><td></td></tr> <tr> <td>-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59% 이하임</td><td>0</td><td></td></tr> </table> <p>□ 검토의견</p> <p>○</p>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인 경우	7~10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이며, 성과지표의 목표치 방향이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추진방향과 일치함	9~10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임	7~8		보통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70~89% 인 경우	3~6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80~89% 임	5~6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70~79% 임	3~4		미흡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인 경우	0~2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60~69% 임	1~2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59% 이하임	0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인 경우	7~10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이며, 성과지표의 목표치 방향이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추진방향과 일치함	9~10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임	7~8																																			
보통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70~89% 인 경우	3~6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80~89% 임	5~6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70~79% 임	3~4																																			
미흡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인 경우	0~2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60~69% 임	1~2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이 59% 이하임	0																																			

평가 부 분	3. 시행결과의 성과달성도		
평가 지 표	3-④ 예산집행 실적(5점)	지 표 유 형	정량(○),정성(),혼합()

□ 예산집행실적 평가

○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지 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지 평가

- 예산집행률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를 배분함
- 예산집행 관련 내용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상향조정 가능함

○ 노숙인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예산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기입한 경우 0점을 부여하되, 비예산 사업추진의 근거가 명확할 때는 이를 명시하고 점수 부여가 가능함

□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예산집행률이 계획 대비 90% 이상임	5~4	
	- 예산집행률이 계획대비 90% 이상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5	
	- 예산집행률이 계획대비 90% 이상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4	
보통	예산집행률이 계획 대비 80~89% 임	3~2	
	- 예산집행률이 계획대비 80~89% 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 예산집행률이 계획대비 80~89% 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2	
미흡	예산집행률이 계획 대비 80% 미만임	1~0	
	- 예산집행률이 계획대비 80% 미만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1	
	- 예산집행률이 계획대비 80% 미만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비예산으로 기입하였으며, 명확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0	

□ 검토의견

○

평가 부 문	4. 소관기관의 관심도																														
평가 지 표	4-①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의지(10점)	지 표 유 형	정량(),정성(),혼합(○)																												
<p>□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 과제 수행에 대한 관심도 및 노력의지에 대한 평가</p> <p>○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기관 스스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기관의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도 또는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인 경우는 노숙인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고 고려되므로 미흡으로 평가함. • 단, 목표달성도 또는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인 경우는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집행부진사유)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작성된 경우나 향후 개선안이 적절하게 제시된 경우 점수 부여 시 고려될 수 있음 <p>□ 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p> <table> <tr> <th>등급</th><th>기준</th><th>점수</th><th>기입</th></tr> <tr> <td>우수</td><td>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 등이 모두 높다고 판단함</td><td>7~10</td><td></td></tr> <tr> <td>보통</td><td>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이 중간이라고 판단함</td><td>4~6</td><td></td></tr> <tr> <td rowspan="5">미흡</td><td>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td><td>0~3</td><td></td></tr> <tr> <td>-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었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음</td><td>2~3</td><td></td></tr> <tr> <td>-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었으나, 향후 개선방안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음</td><td>1</td><td></td></tr> <tr> <td>-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개선방안은 적절하게 제시됨</td><td>0</td><td></td></tr> <tr> <td>-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제시되지 않으며, 향후 개선방안도 제시되지 않음</td><td></td><td></td></tr> </table> <p>□ 검토의견</p> <p>○</p>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 등이 모두 높다고 판단함	7~10		보통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이 중간이라고 판단함	4~6		미흡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0~3		-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었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음	2~3		-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었으나, 향후 개선방안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음	1		-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개선방안은 적절하게 제시됨	0		-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제시되지 않으며, 향후 개선방안도 제시되지 않음		
등급	기준	점수	기입																												
우수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 등이 모두 높다고 판단함	7~10																													
보통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이 중간이라고 판단함	4~6																													
미흡	노숙인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0~3																													
	-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었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음	2~3																													
	-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었으나, 향후 개선방안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음	1																													
	-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개선방안은 적절하게 제시됨	0																													
	-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으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이 제시되지 않으며, 향후 개선방안도 제시되지 않음																														